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 석사학위 논문

냉전기 한국 지식인의 아시아 상상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옥 창 준

냉전기 한국 지식인의 아시아 상상

지도교수 장 인 성

이 논문을 외교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옥 창 준

옥창준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5년 1월

위 원 장 _____ 최 정 운 (인)

부 위 원 장 _____ 신 욱 희 (인)

위 원 _____ 장 인 성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1950년대 중후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신문 지면과 당대 잡지에서 나타난 한국의 아시아 상상을 탐구했다. 1955년 반둥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한국전쟁으로 급속하게 봉합된 전후 아시아의 탈식민 문제가 다시 부상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후 미국·소련 중심의 냉전 체제가 전반적으로 이완되면서 한국인의 세계감각은 아시아·아프리카로 확장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논리가 전파되는 맥락에서 [한국-세계]라는 냉전의 수직적 구도가 전파·수용되었다면, 탈식민 과정을 거치면서 등장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존재로 인해 [한국-아시아]라는 수평적 구도가 다시금 상상되었다. 근대 일본이 19세기의 맥락에서 서구와 일본, 일본과 아시아 사이에서 존재론적인 분열을 겪었다면, 20세기 탈식민/냉전의 맥락에서 한국도 유사한 과정을 밟았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55년 반둥 회의부터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이 퇴조하기 시작하는 65년을 전후한 시점까지 한국에서의 아시아 상상 내용이 변화를 겪는다는 것(문화적 표상→정치적 표상→경제적 표상)이다.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총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문화론적 개념이었던 ‘동양’ 개념이 냉전 체제 하에서 어떤 변용을 겪는지를 검토했다. 1950년대 중후반 한국 지성계에서 ‘동양’은 문화론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현대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주의를 설명하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변모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일본과의 절연이 강조되었으며,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경험과 한국의 공통점을 서술하는 흐름이 등장했다.

제3장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변형되기 시작한 아시아 상상이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에 어떤 식으로 투사되었는지를

살폈다. 당대에 널리 사용되던 ‘다원화 세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의 지평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식인들은 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동향을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했다.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경우에도 ‘국가이익’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 1965년 이후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이 국제적으로 퇴조하는 맥락에서, 한국 지식인들의 이러한 관점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대목에서 ‘경제’와 ‘근대화’라는 새로운 시선이 등장했다.

주요어 : 아시아 상상, 아시아 냉전, 반동 회의, 비동맹, 아시아 민족주의, 국가이익, 근대화

학번 : 2012-22998

목 차

I.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사 검토와 연구의 의의	6
3. 연구의 방법과 구도	11
4. 논문의 구성	15
II. 자기로서의 아시아	16
1. 동양과 아시아	16
1) 동양과 일본 표상의 변화	16
2) '약소민족의 단결'과 아시아 민족주의	20
3) 동양의 아시아화	26
2. 아시아·아프리카와 한국	29
1) 반식민이라는 공통분모 : 수에즈 사건과 헝가리 사건	29
2) 중립 진영과 아시아 공산주의에 대한 해석 변화	37
3) '전후의 종언론'	42
4) 1960년대 초반 아시아·아프리카 자기화의 양상	45
III. 타자로서의 아시아	51
1. 다원화 세계와 한국	51
1) 현실주의 국제정치학과 한국의 지성계	51
2) 참조대상으로서 영국과 프랑스	54
3) 국제 민주주의와 국가이익의 수단으로서 아시아 민족주의	59
4) 1960년대 중반 아시아·아프리카 타자화의 양상	62

2. 경제발전과 아시아	67
1)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의 퇴조	67
2) 정치 중심의 비동맹운동의 퇴조	74
3) 미국 발 근대화 이론의 자기화	78
IV. 결론	83
참고문헌	86
ABSTRACT	104

I. 서론

1. 문제의 제기

흔히 냉전기 한국의 국제정치 지평은 양 진영론으로 설명된다.¹⁾ 양 진영론의 시각을 취할 때, 냉전기 한국에서 나타난 아시아·아프리카 인식은 아시아·아프리카로 대표되는 중립 진영의 동태가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의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만 국한된다. 그러나 전후 아시아의 복합적인 상황은 당대 지식인들의 인식을 양 진영론에만 고착시키지 않았다.

냉전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중심부와 나머지 주변부 국가들로 구성된다는 인식 지형 자체가 냉전 체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실제의 현실은 냉전 서사가 재구성한 현실에 비해 한층 더 복잡적이었다.²⁾ 한국 지식인들은 오히려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를 통해 미국·소련 중심의 냉전 질서를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했다.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이 제창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양 진영론의 구도가 전 지구적으로 투사되고 있지는 않았다. 심지어 냉전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루즈벨트의 세계통합 구상이 대중 차원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었다.³⁾

1) 남궁곤, “1950년대 지식인들의 냉전의식,” 이종오 외,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 혁명』, (서울 : 태암, 1991).

2) 일례로 당대의 지성지인 『사상계』의 경우 ‘냉전’(冷戰)이라는 용어는 주로 서방과 동방 사이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사상계』는 한국과 여러 신생독립국가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 ‘전후’(戰後)라는 좀 더 폭넓은 문제의식을 유지했다. 유럽의 ‘긴 평화’와 성격이 다른 아시아 냉전의 독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냉전과 전후의 복합적인 관계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전후 아시아’와 ‘냉전 아시아’를 연결하는 문제의식은 백원담, “냉전기 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의 형성과 재편 I,” 『중국현대문학』, 42권, 2007.

3) 1947년 번역된 웬델 루이스 윌키의 『하나의 세계』(신천지사, 1947)가 이를 대표하는 서적이다. 당대 한국 지성계에서 『하나의 세계』의 수용 양상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서울 : 천년의 상상, 2012), pp.233-238. 미국 지성사의 맥락에서 ‘하나의 세계’라는 전후의 이상이 퇴조하고 냉전 식 양 진영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John Fousek, *To Lead the Free World : American Nationalism and the*

초기 전후 질서의 구도는 유동적이었으며, 아시아·아프리카에서는 탈식민의 의제가 더 우선시되는 문제였다. 인도의 네루는 이와 같은 기회 구조를 잘 포착하고 아시아·아프리카의 탈식민 운동을 선도하고 있었다.⁴⁾ 1920년대가 윌슨의 순간(Wilsonian Moment)이었다면, 전후 아시아 질서에 있어서 네루의 영향력은 ‘네루의 순간’(Nehruvian Moment)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했다.⁵⁾

‘네루의 순간’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 ‘범아세아회의’로 불리기도 한 1947년 아시아 관계회의가 대표적인 예이다.⁶⁾ 이 회의에 참가한 고향경은 인도가 조선과 먼 나라임을 인정했지만, 인도와 조선이 “불교와 타고르, 간디를 통하여 끊을 수 없는 어떤 깊은 인연”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공통 경험은 자기화의 의지로 변모했다. 고향경은 같은 동양의 긴 역사를 가지고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된 인도를 보면서, 동정심과 더불어 친근함을 느꼈다.⁷⁾ 조선과 인도 간의 여러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는 통약가능한 차이로 여겨졌다. 그는 아시아 관계대회를 “아세아는 아세아끼리 그 역사와 경험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으므로 이 평화 세계 건설에 공헌할 어떤 적극적 방도를 강구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라 이해했다.⁸⁾ ‘네루의 순간’과 전후 한국인의 미

Cultural Roots of the Cold War, (Chapel Hill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pp.103-129.

- 4) 1947년 3월 네루는 아시아 관계회의를 개최했으며, 1949년 인도네시아에 대한 네덜란드의 재식민화를 반대하는 아주회의, 한국전쟁의 휴전협상, 아시아-태평양 지역평화회의의 개최를 주도함으로써 아시아의 평화운동을 이끌었다. 네루의 구상과 실천은 비단 평화운동에만 그치지 않고, 1951년 1차 뉴델리 아시안 게임, 1950년대 중후반의 아시아 수상회의(1954년), 아시아 인민회의(1955년), 반동 아시아·아프리카 회의(1955년), 카이로 아시아·아프리카 인민단결회의(1958년)로 이어졌다.
- 5) 인도의 비동맹 노선에 대해서는 Ramjana Sidhanta, “Indian Nonalignment,” in John Burton (ed.), *Nonalignment*, (London : Andre Deutsch, 1966), pp.28-37.
- 6) 1947년 아시아 관계회의에 대해서는 Carolien Stolte, “‘The Asiatic hour’,” in Nataša Mišković, Harald Fischer-Tiné and Nada Boškowska, (eds.), *The Non-Aligned Movement and the Cold War : Delhi, Bandung, Belgrade*, (New York : Routledge, 2014), pp.57-75.
- 7) 고향경, 『인도 기행』, (서울 : 을유문화사, 1949), 서론, p.1.
- 8) 고향경, 『인도 기행』, (서울 : 을유문화사, 1949), 서론, p.3.

래지평이 완벽히 공명하는 대목이다.

1948년 분단 정권의 수립 이후 한국의 아시아 상상은 냉전의 지정학적 감각으로 굴절되었다. ‘하나의 세계’라는 이상은 이제 ‘두 개의 세계’라는 현실로 대체되었다. 세계적·국내적 차원의 좌·우의 대립 사이에서 중도 노선으로서 ‘제삼세계’를 논한 『새한민보』의 출현은 막간극에 그쳤다.⁹⁾ 미·소 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국제정치적 진단이 전면에 등장했다.¹⁰⁾ ‘Cold War’의 번역어인 ‘냉정전쟁’이 현실적인 개념어로 쓰이게 되었으며,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가 한국 지성계를 엄습했다.¹¹⁾ 1949년 중국 내전이 중국 공산당의 최종적인 승리로 귀결되자, 한국의 담론 지형에서 부각된 것은 민족해방의 ‘아시아’가 아니라 ‘태평양’이었다.¹²⁾ 이처럼 탈식민이 아니라, 반공·냉전이 강조되는 맥락에서 ‘네루의 순간’이 개입할 여지는 점차 축소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는 더더욱 그러했다.¹³⁾

그러나 한국이 ‘네루의 순간’과 완전히 결별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한국은 반공국가인 동시에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탈식민 국가였다. 이승만 정권은 반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끝까지 일본과의 타협을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승만 정권은 ‘네루의 순간’을 반공적으로 전유하고자 했다. 이승만 정권 시기 ‘아세아인의 아세아’는 서구 식민주의와의 투쟁이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반공 아시아로 표상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동남아시아의 신생

9) 『새한민보』, 1947년 1월 1일자 창간사.

10) 이동주(이용희), “전쟁으로 가는 길,” 『신천지』, 1948년 9월호, pp.16-23. 이 글에 대해 박기준은 “평화로 가는 길,”(『신천지』, 1948년 11월·12월호)이라는 반론을 게재했고, 이동주는 다시금 “미소 위기의 의의와 군사론”(『신천지』, 1949년 2월호)이라는 재반론을 게재했다. 동주는 1948년·1949년의 군사·정치적 상황은 미·소 간의 결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1) 정재석, “해방과 한국전쟁, 3차 세계대전의 단층들,” 『상허학보』, 27권, 2009.

12) 장세진, “해방기 공간 상상력의 전이와 ‘태평양’의 문화정치학,” 『상허학보』, 26권, 2009.

13) 미국이 소련을 봉쇄하는 지구적 구도에서 한국과 베트남에 ‘냉전의 전초기지’를 건설하는 외교사에 대해서는 Steven Hugh Lee, *Outposts of Empire : Korea, Vietnam,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1949-1954*, (London :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95).

국가들이 겨우 식민주주의의 기반을 이탈하고 각자의 번영을 누리려고 할 무렵에 소련 제국주의는 이들에게 마수를 뻗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국 전쟁, 인도차이나 전쟁, 필리핀의 후크단 반란, 인도네시아의 불안정, 말레이시아의 공산 게릴라는 이들 국가들이 소련과 대적하는 하나의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아시아의 ‘민주보루’이자, 대공투쟁을 과감하게 이끌어온 한국은 반공 아시아의 주역이 될 자격이 충분했다. 이승만이 주도한 반공아시아민족대회는 그와 같은 정세인식의 논리적 귀결이었다. 이 대회를 통해 ‘아세아의 호-프’(hope)는 네루로부터 이승만으로 옮겨왔으며, 이제 네루가 아니라 이승만의 동향이 아시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었다.¹⁴⁾

이처럼 아시아의 냉전은 단순히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라는 냉전 서사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탈식민 서사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한국 지식인들 역시 이 두 서사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 치열한 지성적·사상적 노력을 경주했다.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움직임은 한국 지성계에서 줄곧 전후의 탈식민 문제의식과 과거의 식민주의, 냉전이라는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다.¹⁵⁾

본 연구는 1950년대 중후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신문 지면과 당대 잡지에서 나타난 한국의 아시아 상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승만의 반공아시아민족대회의 경우처럼 1945년부터 1955년까지의 아시아 상상은 냉전 체제의 구성이라는 지구질서 재편 과정에서 반공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활용되었다.¹⁶⁾ 195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 상상의 작동은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1955년 반둥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한국전쟁으로 급속하게 봉합된 전후 아시아의 탈식민 문제가 재부상하는 중요한 기점이었다.¹⁷⁾ 이후 미국·소련 중심의 냉전 체제

14) “반공아세아민족의 자각,” 『동아일보』, 1954년 6월 13일자.

15) 정재석, “타자의 초상과 신생 대한민국의 자화상,” 『한국문학연구』, 37집, 2009, p.374.

16) 1945년부터 1955년의 아시아 상상에 대해서는 김예림,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성의 위상학 : 해방~한국전쟁 후(1945~1955) 아시아 심상지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0권, 2007.

17) 반둥 회의의 현재적 함의에 대해서는 이동기 편저, 『20세기 평화 텍스트 15선』,

가 전반적으로 이완되면서 한국인의 세계감각은 아시아·아프리카로 확장되었다.

이는 보이는 대상(아시아·아프리카)의 위상 변화뿐만 아니라 이를 관찰하는 주체(한국)의 자기규정 변화를 촉발시켰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논리가 전파되는 맥락에서 [한국-세계]라는 냉전의 수직적 구도가 전파·수용되었다면, 탈식민 과정을 거치면서 등장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존재로 인해 [한국-아시아]라는 수평적 구도가 다시금 상상되었다.¹⁸⁾ 근대 일본이 19세기의 맥락에서 서구와 일본, 일본과 아시아 사이에서 ‘존재론적인 분열’을 겪었다면, 20세기 탈식민/냉전의 맥락에서 한국도 유사한 과정을 밟았다고 할 수 있다.¹⁹⁾

본 연구는 한국과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바깥에서 실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화하면서 서로 깊이 얽혀 있는 문제의 지평을 복원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포괄하는 시기는 한국의 세계지평이 크게 확대된 시기였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아니었다. 한국은 냉전 질서의 ‘소화’(小華)가 아닌 ‘절역’(絶域)에 가까웠기 때문에 ‘탈권’(脫圈)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도 했다.²⁰⁾ 본 연구는 그 탈권의 상상력의 범위와 그 한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서울 : 아카넷, 2013), pp.95-99.

- 18) 장세진의 연구는 “동양/아시아라는 기표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양/아메리카라는 대립항과 연동해서 움직여온 하나의 개념적 구조”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바 있다. 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 : 1945년 8월 이후 한국의 네이션 서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서울 : 푸른역사, 2012), p.39. 이 연구는 당대의 지성계를 복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국과 (아메리카로 표상된) 세계]의 축을 규명한다. 그에 따르면, 일본 제국 체제 하에서 창출된 [동양-서양]의 외연은 탈식민과 냉전을 거치면서, 일본·북한을 배제한 ‘남한’, 유럽을 배제한 ‘아메리카’로 변모했다. 그러나 50년대 말부터 60년대까지 한국 지성계에서 나타난 중요한 양상 중 하나는 ‘동양의 아시아화’와 ‘서양/아메리카의 상대화’다. 본 연구는 장세진의 연구를 포함하여 기존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한국-아시아] 축을 복원하고자 한다.
- 19)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북한의 역사도 이 이중 구도 하에서 북한이 겪은 존재론적인 분열을 보여준다. 냉전기에 북한이 탈식민 정치체로서 스스로를 정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권헌익·정병호의 분석이 탁월하다. 권헌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파주 : 창비, 2013).
- 20) 이용희, “한일관계의 정신사적 문제 : 변경문화 의식의 갈등에 대하여,” 이용희, 노재봉 엮음, 『한국민족주의』, (서울 : 서문당, 1977), p.266.

2. 연구사 검토와 연구의 의의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지구적 대립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냉전의 역사는 비단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로만 서술될 수 없다. 흔히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지구적 대립으로 정의되는 냉전 체제 하에서 아시아 냉전의 독특한 동학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아시아는 미국과 소련의 정책이 투사되는 여러 ‘세력권’ 중 하나였을 뿐이다. 최근에 와서야 서구·비서구 냉전의 형태학적 차이가 다시금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²¹⁾ 나아가 탈냉전 시대로 자연스럽게 이행한 서구와 달리, 냉전기 해소되지 못한 문제들이 잔존하는 동아시아의 상황은 아시아 냉전 경험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숙고를 요구한다.²²⁾ 이는 기존의 냉전 서사에서 주변부로 소외된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를 상상하고 인식의 차원에서 재배치되는 과정을 재구성하는 본 연구가 의미를 지니는 이유다.

‘신냉전사’로 불리는 냉전 학계의 새로운 접근법은 냉전의 역사를 지구적으로 확장하면서, 냉전의 양극화된 역사와 탈식민의 역사를 겹쳐 읽으려는 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²³⁾ 그러나 신냉전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미국·소련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 차원의 냉전의 추이에 따라 냉전의 주변부 아시아 국가들이 일국 수준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런 접근법은 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경험을 서술할 수는 있어도, 아시아는 연구에 있어서 지구적 냉전이 투사되는 공간적 배경에 머무를 뿐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기존 냉전사 연구가 지닌 서구 중심성을 부분적으로만 극복한다. 이들이 상정하는 것과 달리 아시아는 중심

21) 권헌익, 이한중 옮김, 『또 다른 냉전 :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서울 : 민음사, 2013).

22) 신옥희, “동아시아의 냉전 : 형성, 결과, 유산,” 『세계정치』, 24권 1호.

23) 신냉전사의 대표적인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Odd Arne Westad, *The Global Cold War :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냉전의 지역적 다양성을 규명하는 시도로는 Robert J. McMahon (ed.), *Cold War in the Third Worl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부의 냉전이 전파되기를 기다리는 ‘공백 시대’가 아니었다.

반면, 아시아라는 지역적 수준으로부터 출발하여 냉전의 역사를 새로 서술하려는 흐름이 존재한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중국의 냉전 학계가 성장하면서, 이들은 중국의 경험을 중시하는 아시아 냉전사를 작업하고 있다.²⁴⁾ 이들의 연구는 앞서 소개한 연구 경향에 비해서는 아시아의 냉전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루는 듯 보이나, 기실 냉전 연구의 서구 중심주의를 중국 중심주의로 치환한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아시아 냉전의 주축을 담당했던 미국과 중국이 1972년 중미 화해를 이룸으로써, 아시아 냉전이 ‘종결’되었다고 선언하기까지 한다.²⁵⁾ 아시아 냉전에 있어서 중국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아시아 냉전 전체를 설명하는 틀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시아의 냉전은 1970년대부터 미·중 화해 및 수교, 중·일 평화조약 등을 통해 탈냉전으로의 전환을 일찍이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 전환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²⁶⁾

한국 학계에서는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냉전과 관련된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²⁷⁾ 하지만 이 연구들은 문화사·문화연구의 영향을 받은 세련된 연구방법론에 반하여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국 차원에서 문화냉전이 어떻게 경험되었는지를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연구자의 한계라기보다는 냉전/탈식민을 균형감 있게 포착하는 것이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시사

24) 대표적으로 선즈화(沈志華)의 작업이 있다. 선즈화, 김동길 옮김, 『조선전쟁의 재탐구 : 중국·소련·조선의 협력과 갈등』, (서울 : 선인, 2014). 중국 신냉전사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이병한, “신냉전사 : 중국현대사의 새 영역,” 『중국근현대사연구』, 53권, 2012.

25) 앞서 소개한 흐름과 맞물려 최근 이들의 관심사는 1972년 미중 화해에 집중된다.

26) 임우경, “탈/냉전 아시아 수교의 문화정치, 1970~1990년대,” 김미란·오영숙·임우경 엮음, 『이동하는 아시아 : 탈/냉전과 수교의 문화정치』, (서울 : 그린비, 2013), pp.14-15.

27)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엮음,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I : 1940~1950년대』, (서울 : 현실문화연구, 2008).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엮음,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II : 1960~1970년대』, (서울 : 현실문화연구, 2009).

한다. 냉전 아시아의 탈식민 경험이 개별 국가들에 따라 상이할뿐더러, 탈식민을 논의하는 지평 역시 상이한 것이다. 일례로 중국의 경우-중국이 엄밀히 탈식민 국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연구의 초점으로 탈식민을 강조하면 할수록, 중화인민공화국의 경험이 과도하게 대표되게 된다.²⁸⁾ 근대 아시아주의와 관련된 연구가 일본 중심적이라면, 냉전기 아시아 상상연구는 중국 중심적이다.²⁹⁾

이 같은 난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선 내용 면에서, 실제로 냉전 아시아인들이 냉전과 탈식민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대 아시아 냉전을 살아가던 이들이 남긴 텍스트는 탈식민과 냉전의 역사를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 냉전의 독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와 관련된 지역적 상상이 어떤 식으로 당대에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시아의 경험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관점에서 냉전사를 서술하는 데 유의미한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시아가 유럽과 일본에 의해 상상되고(imagined), 발명(invented)되었다면, 이제는 아시아의 능동적인 아시아 상상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³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한국 지식인의 아시아 상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는 쑨쩌의 지적처럼, 작금의 동아시아 담론에 부족한 ‘냉전 구조 속의 동아시아 시각’을 탐색하며, 한국 동아시아론의 계보를 추적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³¹⁾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직접 관련되는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 있다. 우선 시기별로 볼 때, 주로 1945년 직후 해방 공간에서 약소민족의 연대에 관심을 보이던 한국의 아시아 상상이 반공주의적 아시아론으로 귀결되는 양상에 주목하는 연구이다.³²⁾ 이와 같은 문제의식

28) 이동연, “동아시아 담론형성의 갈래들 : 비판적 검토,” 『문화과학』, 52권, 2007, p.103.

29) 서구 학계의 중국 중심 아시아 냉전에 관련된 연구로는 Zheng Yangwen, Hong Liu and Michael Szonyi (eds.), *The Cold War in Asia : The Battle for Hearts and Minds*, (Boston : Brill, 2010).

30) 이 표현은 임춘성, “동아시아 냉전문화와 문화냉전,” 『중국현대문학』, 51권, 2009, p.275에서 차용했다.

31) 쑨쩌, “동아시아 시각의 인식론적 의의,” 『아세아연구』, 52권 1호, 2009.

32) 정재석, “타자의 초상과 신생 대한민국의 자화상 : 해방~한국 전쟁기 인도 인식을

에 기초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료로서 『사상계』에 주목해 왔다. 『사상계』가 한국 현대 지성사에서 지닌 압도적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의 지성사는 『사상계』만으로 환원될 수 없다.

『사상계』 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잡지는 1960년대의 비판적인 잡지인 『청맥』이다.³³⁾ 60년대 비판적 잡지였던 『청맥』을 중심으로 이들의 탈식민 문화 담론과 아시아 상상에 주목하는 접근도 등장했다.³⁴⁾ 후자의 접근법은 문학비평계를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연구주제로서 다루어지지 않은 『청맥』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현재의 비판적 관심에서 과거를 취사선택하는 경향이 짙다. 기실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지는 몇몇 인사들의 글을 제외하면 『청맥』에 기고된 글은 독특한 것이 아니라, 당대 지성계의 흐름에 공명하고 있었다.³⁵⁾ 특히 『청맥』의 아시아·아프리카 관련 기사의 논조는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이 퇴조하는 1965년 이후에 일대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기존의 연구들은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당대의 상황을 맥락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에 대한 일정한 서술이 필요하다.³⁶⁾

연구 대상의 차원에서 보면,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관련된 연구는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7권, 2009. ; 김예림, “1950년대 남한의 아시아 내셔널리즘론 : 동남아시아를 정위하기,” 『아세아연구』, 55권 1호, 2012. ; 임종명, “해방 직후 남한 신문과 베트남 전쟁 재현·표상,” 『현대문학의 연구』, 54권, 2014.

33) 하상일, “1960년대 문학비평과 『청맥』,” 『국제어문』, 31권, 2004. ; 전용호, “1960년대 참여문학론과 『청맥』,” 『국어국문학』, 141호, 2005.

34) 이동현, “1960년대 『청맥』 지식인 집단의 탈식민 민족주의 담론과 문화전략,” 『역사와 문화』, 24권, 2012. ; 김주현, “『청맥』지 아시아 국가 표상에 반영된 진보적 지식인 그룹의 탈냉전 지향,” 『상허학보』, 39권, 2013.

35) 통일혁명당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통일혁명당 사건,” 세계 편집부 엮음, 『공안사건기록』, (서울 : 세계사, 1987).

36) 백원담의 연구는 비동맹운동과 제3세계운동을 전후 아시아의 지역정체성 구성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백원담, “아시아에서 1960-70년대 비동맹/제3세계운동과 민족·민중 개념의 창신,” 『중국현대문학』, 49권, 2009.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와 이집트·인도가 주도한 비동맹운동,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을 주된 목표로 한 제3세계 운동, 중국·인도네시아가 주도한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은 범위와 목표 면에서 구분된다. 백원담의 연구는 이 셋을 그다지 분별하고 있지 않다.

주로 일본과 중국의 관계, 일본과 한국·북한의 관계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다.³⁷⁾ 여전히 한국과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인식 차원의 관계맺음을 다룬 연구는 적다.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정문상의 연구는 1970년대 냉전기 한국 지식인의 중국 인식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³⁸⁾ 정문상의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반공 냉전 이데올로기’가 냉전 전체를 압도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린 채 냉전 시기를 있는 그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시기와 대상은 기존의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기에 본 연구는 연구사의 공백을 채우는 동시에 당대의 총체적인 상을 그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보다는 한국과 유사한 위상에 놓여 있었던 국가들에 대한 한국 지식인들의 인식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주목할 것은 1965년 이후 경제발전을 기준으로 아시아·아프리카를 타자화하는 한국의 시선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근대화 이론은 1950년대 후반에 이미 한국 지성계에 소개되었지만, 세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한국 지식인들이 근대화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³⁹⁾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경험이 다른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는 구별된다는 인식이 등장했다. 그런 연유에서야 박정희 정권은 근대화 이론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면서 반공에 머물

37)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진성, “잡지 『아시아문제』를 통해 본 1950년대 일본의 아시아 인식,” 『일본연구논총』, 33권, 2011. ; 임성모, “냉전기 일본 진보파 지식인의 한국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33권, 2011. ; 조경란, “냉전시기(1950-60년대) 일본 지식인의 중국 인식,” 『사회와 철학』, 28권, 2014.

38) 정문상, “문화대혁명을 보는 한국 사회의 한 시선 : 리영희 사례,” 『역사비평』, 77권, 2006. ; 정문상, “냉전 시기 한국인의 중국인식 : 중국 문화대혁명 이해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13권, 2007. ; 정문상, “김준엽의 근현대 중국론과 동아시아 냉전,” 『역사비평』, 87권, 2009. ; 정문상, “한국 냉전문화 형성과 문화대혁명 : 대중 언론매체와 학계의 문화대혁명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근현대사연구』, 48권, 2010. ; 정문상, “중공과 중국 사이에서,” 『동북아역사논총』, 33권, 2011. ; 정문상, “냉전기 한국인의 대만 인식,” 『중국근현대사연구』, 58권, 2013.

39) 홍이섭은 로스토우의 근대화 이론이 흥미롭다고 평가하면서도, 근대화 이론을 한국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한국사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이섭, “한국사관의 모색,” 『세계』, 1960년 3월호, p.71.

렸던 소극적인 자기규정을 발전이라는 적극적인 것으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 일본 국제질서론을 연구한 사카이 데쓰야는 로아마 마사미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 1960년대 일본에서의 근대화론 논의가 미국의 냉전 전략을 단순히 추종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내재적인 지적 전제 속에서 미국식 근대화 이론이 수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⁴⁰⁾ 본 연구도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아시아의 맥락에서 한국의 위상에 대한 자기 이해를 탐구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근대화 이론에 대한 연구가 일종의 수용사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의의를 지닌다.⁴¹⁾ 이와 같은 특정한 시선이 아시아·아프리카에 투사되는 방식을 독해하는 것은 당대 한국인의 정체성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⁴²⁾

3. 연구의 방법과 구도

본 연구는 최고결정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사 연구·외교정책 연구보다는 지성사의 입장에서 당대의 상황을 복원하고자 한다. 국가의 공식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파견된 정치인·외교관과 비교할 때 지식인들은 상대적으로 냉전 서사로부터 자유로웠다. 이는 지식인들의 텍스트가 정치인·외교관에 비해 현실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최고결정권자에 대한 서술은 비교의 차원에서 보조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또 본 연구는 ‘고전’에 대한 사상사적 접근보다는 신문이나 잡지 등

40) 사카이 데쓰야, 장인성 옮김, “‘동아협동체론’에서 ‘근대화론’으로”, 『근대 일본의 국제질서론』, (고양 : 연암서가, 2010), pp.155-199.

41) 한국 학계에서 근대화 이론에 대한 분석은 미국 근대화 이론의 전파·수용사에 그치고 있다. 정일준, “한국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미국화 : 미국 근대화론의 한국전파와 한국에서의 수용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37권 3호, 2005. 근대화 담론이 한국 사회에 전파되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 활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황병주, “1960년대 박정희 체제의 ‘탈후진 근대화’ 담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권, 2008.

42) 본 연구의 분석 시기는 근대화 이론이 한국 지성계에 가장 활발하게 소개된 1964년과 1967년 사이와도 겹친다. 해당 시기 근대화 이론의 수용에 대해서는 황병주, “1960년대 박정희 체제의 ‘탈후진 근대화’ 담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권, 2008, p.251.

다소 ‘소소한’ 자료들을 통해 당대의 맥락을 재구성한다. 이는 식민지 지성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사받은 것이다. 식민지 지성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가 다루는 1950-1960년대의 한국 지성계의 상황은 “정교하고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정합성에 기반한 이론과 사상, 주의보다는 거칠고 감정적이고 정세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기민한 대응성이 미덕인 학론들이 신문과 잡지를 통해 개진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⁴³⁾ 이를 체계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배제하기보다는 이들이 남긴 텍스트가 지닌 지성·사상적 가능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자료선별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요 잡지만을 분석하기 보다는, 당대의 다른 잡지와 신문 등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텍스트가 발화될 당시의 언어 패러다임을 숙지하고자 했다. 특히 장준하와 함석헌과 같이 당대의 지성으로 손꼽히는 인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의 글을 통해 당대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이는 당대의 논의가 비단 특출한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었음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다.⁴⁴⁾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상계』, 『청맥』을 포함하여, 『신태양』, 『신세계』, 『세계』, 『신사조』, 『세대』, 『신동아』, 『정경연구』와 같은 50-60년대의 주요 잡지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간지의 아시아 관련 기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주변이 주변을 상상하는 시선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 백영서는 주변의 시선을 논하면서 “중요한 것은 중심이나 주변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아니라, 중앙의 사고방식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자신보다 한층 더 주변적인 부분을 차별화하고 억압하며, 그러한 억압을 의식하지 않는 중앙으로부터의 시각을 접수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주변에 있고, 중앙으로부터 차별당함을 문제삼고 동시에 자신이 한층 더 주변적 부분을 차

43) 유선영, “주변이 아시아를 사유하는 탈아의 시선과 ‘소소한 역사,’” 유선영·차승기 엮음, 『아시아 이벤트 : (서로 다른) 아시아들의 경합』, (서울 : 그린비, 2013), pp.22-23.

44) 이는 포착의 연구 방법론을 의식한 것이다. J. G. A. Pocock, *Political Thought and History : Essays on Theory and Method*,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별하고 억압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중앙의 문제됨을 다시 묻는 자세를 취하는가의 선택”이라고 말한다.⁴⁵⁾ 그는 후자의 자세를 ‘지배 관계에 대한 영원한 도전이요 투쟁’이라고 칭하면서, 후자를 지칭하는 ‘이중적 주변의 눈’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라고 제안한다.⁴⁶⁾

그러나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이중적 주변의 눈’으로 포착되는 현상은 희소하다. 대부분의 현실은 백영서가 제시한 두 가지 입장 중간 어디쯤에 위치할 것이다. 현실에 비해 주변의 시각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관계의 실상에 대한 오독이 일어난다. ‘반동정신’을 다룬 장세진의 연구가 대표적이다.⁴⁷⁾ 장세진의 연구는 1955년 반동 회의부터 1965년 알제 회의까지 한국 사회의 아시아 상상과 지구적 차원의 냉전 서사가 밀접하게 연동하며 경합하는 양상을 탐구한다. 본 연구는 이 연구와 대부분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반동정신’을 국제주의의 계보로서 긍정적으로 파악하며, 그 관점에서 당대를 규범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제주의와 대비되는 민족주의는 ‘협애한 울타리에 갇힌 사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국제적 연대를 선택하지 못하고, 민족주의로 귀결된 것 자체가 지성사·사상사적 검토대상이라 할 수 있다. 다케우치 요시미가 일본의 맥락에서 팽창주의와 아시아주의의 관계를 물었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민족주의와 아시아주의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천착할 필요가 있다.⁴⁸⁾

냉전기 한국의 아시아 상상은 ‘이중적 주변의 눈’이 오히려 더 주변

45) 백영서,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정문길 외 엮음,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04), p.18.

46) 백영서,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정문길 외 엮음,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04), p.36.

47) 장세진, “안티테제로서의 ‘반동정신’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1955~1965),” 『사이공간 SAI』, 15호.

48) 일본의 아시아주의의 계보에 대해서는 다케우치 요시미, “일본의 아시아주의 (1963),” 마루카와 데쓰시·스즈키 마사히사 엮음, 윤여일 옮김, 『다케우치 요시미 선집 2 : 내재하는 아시아』, (서울 : 휴머니스트, 2011), pp.293-377. 일본의 맥락에서 아시아에 주목한 다케우치 요시미의 문제의식은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 다케우치 요시미와 유사한 전통과 계기를 한국의 맥락에서 발견하려는 시도는 과도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적인 부분을 차별화하는 과정으로 대체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장인성의 구도가 유용하다. 장인성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인식을 자기화와 타자화라는 기준에 기초하여 크게 5가지 범주로 유형화했다. 본 연구는 장인성이 근대 아시아를 설명하고자 했던 이 구도를 냉전 아시아를 포착하는 데 원용하고자 한다. 먼저 [유형 1]은 ‘세계는 하나다’라는 발상이다. 인식 주체에게 세계는 곧 자기화의 영역이며 따라서 아시아·유럽을 막론하고 모든 지역은 자기화의 대상이 되며 타자화의 가능성은 부정된다. 둘째, [유형 2]는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의식이다. 이 경우, 아시아를 범주하는 특정 기준에 따라 아시아는 자기화의 대상이 되며 그 이외의 지역은 타자화된다. 셋째, [유형 3]은 ‘동아시아는 하나다’라는 생각이다. 동아시아의 자기화가 이루어지며 나머지 지역은 타자화의 대상이 된다. 넷째, [유형 4]는 일본의 ‘탈아입구’와 유사하게 아시아를 타자화하고, 서구를 자기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다섯째로, [유형 5]는 자민족이나 자국만의 생존을 절대시 하는 만국 타자화의 발상이다.⁴⁹⁾

본 연구가 다루는 기간 동안 중국·대만-한국·북한-일본의 연대를 추구하는 [유형 3]의 인식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구상은 탈냉전 이후에 비로소 본격화된다. 비록 중국, 북한이 배제되었지만, 냉전기 한국에서 아시아의 지리적 범위는 지금의 ‘동북아’보다 넓었다.⁵⁰⁾ ‘반공 아시아’의 등장 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이 자기화되었다면, 1955년부터 1967년의 기간 동안,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 가운데 ‘아시아는 하나’라는 인식 틀([유형 1], [유형 2])이 나타난다. 주목할 것은 ‘아시아는 하나’라는 인식은 세계를 자기화하기보다는, 세계/아시아를 타자화하는 흐름으로 변모해나갔다는 점([유형 5])이다. 본 연구의 논의는 이 부분을 보여주는 데 집중된다.⁵¹⁾

49) 장인성, “자기로서의 아시아, 타자로서의 아시아,” 『신아세아』, 5권 3호, 1998, p.14.

50) 냉전 시기 한국이 주도한 지역 구상인 이승만 정부의 태평양동맹 구상이나, 박정희 정부 시기 아시아태평양각료회의를 보라. 최영호, “이승만 정부의 태평양동맹 구상과 아시아반공민족연맹 결성,” 『국제정치논총』, 39권 2호, 1999. ; 박태균,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집단안보체제의 구상과 좌절,” 『세계정치』, 32권 2호, 2011.

4. 논문의 구성

이 글의 핵심 주장은 55년 반동 회의부터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이 퇴조하기 시작하는 65년을 전후하여, 한국에서의 아시아·아프리카의 상상 내용이 변화를 겪는다는 것(문화적 표상→정치적 표상→경제적 표상)이다.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총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문화론적 개념이었던 ‘동양’ 개념이 냉전 체제 하에서 어떤 변용을 겪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1950년대 중후반 한국 지성계에서 ‘동양’은 문화론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현대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주의를 설명하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변모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일본과의 절연이 강조되면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경험과 한국의 공통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흐름이 등장했다.

제3장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변형되기 시작한 아시아 상상이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에 어떤 식으로 투사되었는지를 살핀다. 당대에 널리 사용되던 ‘다원화 세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의 지평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식인들은 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동향을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했다.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경우에도 ‘국가이익’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 1965년 이후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이 국제적으로 퇴조하는 맥락에서, 한국 지식인들의 이러한 관점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대목에서 ‘경제’라는 새로운 시선이 등장했다.

51) [유형 4]의 인식은 한국형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1960년대 말 부터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베트남 전쟁의 경험이 중요하다. 이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관련 연구로는 다음이 주목된다. 윤충로, “베트남전쟁 시기 한·미·월 관계에서 한국의 ‘정체성 만들기’ :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를 향한 열망 사이에서,” 『담론201』, 9권 4호, 2007. ; 신형기, “베트남 파병과 월남 이야기,” 『동방학지』, 157권, 2012. ; 김주현, “파월 베트남 수기를 통해 본 한국의 베트남 전쟁,” 『현대문학의 연구』, 54권, 2014.

II. 자기로서의 아시아

1. 동양과 아시아

1) 동양과 일본 표상의 변화

1950년대 전반 한국 지성계에서 시급한 문제는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서양 지식의 흡수였다. 이런 맥락에서 ‘동양’은 ‘서양’과의 대비를 위해 소환되는 개념이었지, 그 자체로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받지 못했다. 당대 지성계에서 ‘동양’은 동양적 전제주의와 같은 비민주적 정치체제, 반상업적 경제철학을 지칭할 뿐이었다.⁵²⁾

‘동양’이 일본 제국이 제창한 시대정신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동양’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은 식민지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동양사’를 쓰고자 했던 당대 지성계의 분위기와 맞물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식민지 체제가 냉전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동양 표상과 더불어 동양 표상의 핵심 범주였던 일본의 위상이 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40년대 전반,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은 일본이 수행하던 대동아공영권을 적극적으로 긍정했다. 일례로 1940년 신갑범은 ‘침략의 시대’였던 앵글로색슨의 시대를 종식시키는 동아신질서를 논하면서 일본의 역할에 주목했다.

“세상에서는 동아신질서란 것이 떠들썩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그 자체가 서구적 구질서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 새 명제가 아니면 안 된다. 더구나 이것은 우리 일본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황도정신의 보편 평등성과 역사적 위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52) 배성룡, “한민족의 경제사상 : 동양식 정체성과 빈락경제관,” 『사상』, 1952년 9월 호. 당대의 동양론에 대해서는 김주현, “『사상계』의 동양 담론 분석,” 『현대문학의 연구』, 46권, 2012.

세계를 독점·침략에서 도의·협화로 이끄는 역사의 진정한 로고스이다. 나는 지금부터의 세계 역사가 이 정신에 의해서 혁정되고, 정말로 보편타당한 인류문화를 창조할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정신이 가져다줄 사명 밑에서 사는 영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침략 범인인 앵글로색슨 민족의 문화는 이미 이 정신에 의해서 최종적 심판을 받고 있으며, 일체의 인류문화의 요람지였던 아시아에는 흥아의식이 충만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 아시아의식의 재생을 의미하며, 학대받던 아시아에서 자유발전을 할 수 있는 아시아로, 또 편국화된 세계에서 협화적 공존공영의 세계로 전화·발전해 가야 할 세계문화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⁵³⁾

아시아의식의 재생을 통해 ‘대항해시대’로 시작된 앵글로색슨의 역사는 혁파되고, ‘아시아인들의 아시아’가 건설된다. 이는 글 제목 그대로 세계사의 ‘동양적 전회’였다. 파괴적인 물질문명이자 패도(覇道), 경제적 착취로 대표되는 서양과 대조적인 ‘아시아인들의 아시아’는 인도와 이슬람 지역을 넘어 심지어 유럽의 헝가리와 핀란드를 포괄하기도 했다.⁵⁴⁾

그러나 1945년 해방 이후 탈식민 한국의 담론장에서 ‘대동아’와 연결된 일본 표상은 황급히 삭제된 동시에 그 위상이 전복되었다. 일본 제국의 해체를 통해 가능해진 한국의 해방 공간에서 ‘패도’는 이제 서구 제국주의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본 제국을 지칭하게 되었다. 김기석은 동양의 ‘대표선수’였던 일본이 서구의 공리주의를 혁파하기는커녕, 서구의 철저한 모방자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메이지유신은 일본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었음에도 일본인들은 서구의 열강과 같이 식민지를 거느리는 동양의 ‘대영제국’이 되고 말았다. 일본은 무너져 가는 동양의 운명을 걱정하는 동양의 대표가 아니라, 서구열강의 ‘주구’였다.⁵⁵⁾ 일본 제국의 역사는 이제 한족과 한민족을 억압·유린했던 몽골족의 원, 만주족의 청과 동급으로 표상되었다. 원·청·일본이라는 동양의 ‘차르 시대’를 통해 “한족과 한민족

53) 신갑범, “세계사의 동양적 전회,” 『동양지광』, 1940년 1월호.

54) ‘투란이즘’ 운동을 제창한 김두정의 아시아론이 그러했다. 김경일, 『제국의 시대와 동아시아 연대』. (파주 : 창비, 2011), p.278.

55) 김기석, “일본의 불의와 동양의 이상 : 일본의 식자층에게 줌,” 『사상계』, 1954년 2월호, pp.12-13.

은 언제나 그들에게 누리고 짓밟히고 묶이어 글리이고, 무더기로 살해되는 농노의 처지에 놓였던 것”이다.⁵⁶⁾

김기석은 ‘도의(道義)’를 추구했어야 할 일본이 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한민족과 한족이 진실로 의를 추구하여, 동양과 서양의 여러 나라를 이끌어 오랫동안 서양 민족을 사로잡은 공리주의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기를 희구했다.⁵⁷⁾ 신갑범이 추구한 ‘세계사의 동양적 전회’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기석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당대 동양 표상은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대동아공영권의 동양 서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⁵⁸⁾ 비유하자면, 이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언어체계(langue) 위에서 발화(parole)하는 존재들이었다.

한편, 근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기억을 삭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고대 문화사적인 ‘오리엔트’로 동양 표상의 초점을 돌리는 방법이 있었다. 1956년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진행된 ‘동양문화논전’은 당대 동양 개념의 의미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상백은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라는 글에서 동양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논구했다. 그가 비판한 것은 동양 개념을 창안하는 데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이었다. 그에 따르면, ‘동양’은 일본의 ‘잔재’일 뿐이었다. 이는 서양의 문화에 홀로 대립하기에는 빈약했던 일본이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개념이었다. ‘동양’을 ‘서양’과 개념상 대등한 반쪽으로 상상함으로써, 동양의 역사는 서양의 보편성과 경쟁할 수

56) 김기석, “일본의 불의와 동양의 이상 : 일본의 식자층에게 줌,” 『사상계』, 1954년 2월호, p.14.

57) 김기석, “일본의 불의와 동양의 이상 : 일본의 식자층에게 줌,” 『사상계』, 1954년 2월호, p.38.

58) 특히 대동아공영권의 사상이 냉전 질서 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는 지는 흥미로운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식민주의와 대동아공영권을 분별한 일본의 주장이 유럽의 식민주의와 다른 미국의 지배를 긍정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세계사의 철학’을 제창했던 교토학과 철학자들은 미국의 집단방위체제가 대동아공영권과 유사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긍정했기 때문이다. 사카이 나오키·니시타니 오사무, 차승기·홍종욱 옮김, 『세계사의 해체 : 서양을 중심에 놓지 않고 세계를 말하는 법』, (서울 : 역사비평사, 2009), p.216. 이와 관련하여 홍정완의 연구는 시사적이다. “해방 이후 남한 ‘국민운동’의 국가·국민론과 교토학파의 철학,” 『역사문제연구』, 23호, 2010.

있는 총체성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동양’은 불교를 매개로 하여 인도-중국-일본을 사상적으로 엮는 문화공동체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상백은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중국과 인도를 ‘동양’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포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중국과 인도는 지리적으로 아세아 대륙의 동과 남에 ‘원격(遠隔)한 별천지’이며, 이 둘의 풍토·민족·생활상태가 다르며 그 둘의 문화는 서로 아무 접촉이 없이 독립하여 발달한 독자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공동의 생활이 없는 곳에서 ‘하나의 역사’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이상백은 인도와 중국을 합한 동양의 역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⁵⁹⁾

이상백의 주장은 서양의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그는 서양의 경우, 각 민족의 특수성을 넘어서 중세시대부터 유럽인으로서의 ‘공동의 생활’과 ‘공동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유럽의 문예와 철학, 고전문화와 기독교는 유럽 공동의 유산이었다. 그에게 있어 서양사와 같은 위상의 동양사는 존재할 수 없었다.⁶⁰⁾ 중국과 인도의 역사에는 서양의 경험에 필적하는 근세사와 현대사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의 역사는 시간만 길 뿐, 그 ‘역사’는 짧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중국이나 인도의 사상의 힘을 빌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과거 유교나 불교에 대한 사대적인 태도에 불과했다. 그는 과거 인도나 중국의 사상으로부터 현대의 해답을 찾는 방법보다는 이미 서양과 하나가 된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 편이 낫다고 보았다. 자국의 문화를 세계화하고 현대화하여만 거기에 비로소 우리 문화의 특수성이 나타나는 것이지 굳이 동양이라는 층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⁶¹⁾

이에 대해 유정기는 이상백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동양의 가치를 옹호했다. 동양문화는 현대적 의의를 지니는데, 서양 자본주의의 무인의(無仁義)한 착취와 공산주의의 무자비한 투쟁을 교정할 수 있는 대안이 동양문화의 인의(유교 문화)와 자비(불교 문화) 사상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는 민족상잔의 비극과 제3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동양

59) 이상백, “동양문화와 서양문화,” 『조선일보』, 1956년 1월 7일자.

60) 이상백, “동양문화와 서양문화,” 『조선일보』, 1956년 1월 8일자.

61) 이상백, “동양문화와 서양문화,” 『조선일보』, 1956년 1월 9일자.

문화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⁶²⁾ 서양문명은 현재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했다. 유정기는 줄곧 서양문명과 동양문화를 결합한 ‘제3의 문화’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⁶³⁾

2) ‘약소민족의 단결’과 아시아 민족주의

‘제3의 문화’는 비단 서양과 동양이라는 지리적 범주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 사이에서도 제기되었다. 오종식은 ‘코스모폴리타니즘’과 ‘내셔널리즘’ 사이의 ‘국제국가’(國際國家)를 논했다. 그가 말한 ‘국제국가’란 구체적 개체로서의 ‘국민국가’에 한정되지 않으며, 동시에 추상적이며 보편적인 ‘세계국가’로 초월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구체적이면서 보편적인 ‘국제국가’로서 새로운 자기전환을 기필(期必)함으로써 인류공존사회로서의 국제사회의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확보하는 국가였다.⁶⁴⁾ 오종식의 논의는 반등 회의에서 제창된 아시아·아프리카의 단결이라는 문제의식을 선취한 측면이 있었다. 그는 같은 글에서 ‘국제국가들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약소민족들의 단결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소민족이 지녔다고 내놓고 자랑할 세력이나 문화는 없다 하되 천부의 생명을 유지할 본구(本具)한 권리는 있는 것이니 여타의 인위적 권리나 세력이 이것을 능가한다는 만심과 자부가 있다면 그야말로 평화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심의(心意)라 할 것이다. 약소민족국가의 자각에서 우러난 평화이념 아래 전 세계의 약소민족이 총집결해서 전 세계 평화운동에 주도권을 담당하는 때만이 지구상의 평화는 달성될 것이요 이 평화운동에는 자유공산 양대 진영의 각도

62) 유정기, “동양문화는 부인될 것인가,” 『조선일보』, 1956년 1월 27일자.

63) 유정기, “동양문화는 부인될 것인가,” 『조선일보』, 1956년 1월 28일자. 동양 문화를 강조하는 이들은 ‘동서양양의 문화융합’의 레토릭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서 양양의 문화를 포섭융합하여 일대 세계문화를 창설하는 것이 우리 동양인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채희순, 『동양사개론』, (서울 : 고려출판사, 1954), p.3.

64) 오종식, “한국의 국제적 위치와 그 역사적 과제,” 『현대공론』, 1954년 8월호, p.20. 오종식은 『민주일보』, 『민중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한국일보』 주필, 『서울신문』과 『국제신보』 사장을 역임했으며, 1961년 세계문화자유회의의 한국 위원장을 역임, 1963년 창간하는 『세대』의 발행인이 된다.

에서 미증유의 화를 입고 비극적인 체험을 아리 사리 쌓은 한민족의 선창이야말로 그 이념추구 있어서나 그 실천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서 누가 허망한 생각이라고 비웃겠는가.”⁶⁵⁾

오종식의 주장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판적인 의구심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그를 포함한 비판적인 한국 지식인들은 사회주의 모델 뿐 아니라 자본주의 모델 역시 모두 서양문화의 결과물이라 인식했다. 서양문화를 철학적 수준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논구했던 김기석은 ‘구라파 정신’을 공리주의와 유물론, 자연과학과 공산주의 문명으로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현대정신사는 단순히 구라파 정신의 상황과 그 공적(功績)을 서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었으며,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는 현대정신을 서술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1950년대에는 자유·공산 진영의 ‘낡은 구라파’를 물리치고 ‘새로운 동양’이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성계에서 일정하게 통용되고 있었다.⁶⁶⁾ 아시아에 있어 구질서가 파괴되고, 이를 대체할 신질서의 조성은 역사의 윤리적 귀결이었다.⁶⁷⁾

돌파구는 과거의 문화론적인 ‘동양’이 아니라 현대의 아시아 민족주의에서 발견되었다. 일본 제국을 대신한 것은 “고대 동양의 역사적 내력으로 인해 불행히도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의 피식민의 역사”였다.⁶⁸⁾ 이제 일본 제국의 역사에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동양의 약소민족에게 민족적 자각을 환기시키고 서양인의 독존적 우월감을 꺾어버리며 정치적 단결만 있으면 서양의 어떠한 강국이라도 격멸하여 속박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신념을 넣어주었다는 데 있었다.”⁶⁹⁾

실제로 탈식민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65) 오종식, “한국의 국제적 위치와 그 역사적 과제,” 『현대공론』, 1954년 8월호, p.23.

66) 김기석, 『현대정신사』, (서울 : 교우사, 1956), p.1.

67) 조효원, 『아세아정치론』, (서울 : 문종각, 1955), p.527.

68) 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 : 1945년 8월 이후 한국의 네이션 서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서울 : 푸른역사, 2012), p.39.

69) 채희순, 『동양사개론』, (서울 : 고려출판사, 1954), pp.433-434.

시작했다. 1955년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휴양도시 반둥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의 태동을 알린 결정적 기점이었다. 총 29개국이 참가한 반둥 회의는 당시 국제연합 회원국이 59개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의 절반이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반둥 회의는 과거 식민 세계에서 독립한 나라들이 개최한 최초의 탈식민 국제회의였다.⁷⁰⁾ 회의를 주최한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은 반둥 회의의 개최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거 수십년 간 우리들은 세계에 대해서 발언권을 갖지 못했다. 우리들의 존재는 무시되어 외국의 지배를 받았고 빈곤과 굴욕 하에 놓여 있었다. … 그러나 우리는 독립을 요구했고, 이를 위하여 싸웠으며 마침내 독립을 달성했다. 우리는 이제 식민지가 아니다. 자유롭고 독립한 주권국이다.”⁷¹⁾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자유·평등·우애를 그 목표로 내걸었듯이, 반둥 회의에 참가한 아시아·아프리카의 대표들은 “평화 10원칙”을 선포하면서, 탈식민(자유), 인종 및 주권의 평등(평등), 연대와 단결(우애)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내세웠다.⁷²⁾ 이후 1950년대 중반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55년 반둥 회의를 필두로 하여 1950년대 중후반 서구 제국의 지배를 받은 지역의 연대와 단결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변화가 네루, 나세르, 수카르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비록 반둥 회의에 공식 기자단이

70) 반둥 회의에 대한 생생한 당대 기록으로는 Richard Wright, *The Color Curtain : A Report on the Bandung Conference*, (Cleveland : World Publishing, 1956). ; George Kahin, *The Asian-African Conference*,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56). 반둥 회의에 대한 좋은 개관서로는 Jamie Mackie, *Bandung 1955 : Non-Alignment and Afro-Asian Solidarity*, (Singapore : Editions Didier Millet, 2005). 반둥 회의에 대한 현대적 재평가로는 See Seng Tan and Amitav Acharya, *Bandung Revisited : The Legacy of the 1955 Asian-African Conference for International Order*, (Singapore : NUS Press, 2008). ; Christopher Lee (ed.), *Making a World after Empire : The Bandung Moment and its Political Afterlives*, (Athens : Ohio University Press, 2010).

71) 임방현, “야자수 아래 회의는 춤춘다,” 『세대』, 1964년 7월호, pp.105-106.

72) 반둥 회의의 평화 10원칙에 대해서는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엮음, 『제3세계 관계 자료집』, (서울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78), pp.13-22.

파견되지는 않았지만, 반동 회의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과 결의문 내용은 시시각각 한국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⁷³⁾ 당대의 보도들이 반동 회의에 대해 피상적인 접근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한 신문 사설은 반동 회의가 식민주의 청산을 통한 독립자주국가의 건설, 중립정책을 통한 세계평화의 모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⁷⁴⁾ 동시대의 현장을 취재하는 입장에서 반동 회의가 지닌 2개의 축인 식민주의의 청산과 중립정책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⁷⁵⁾

물론 반동 정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만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신상초는 아시아의 제3세력론을 비판하면서, “아시아가 독자적인 제3세력이 되기에는 미국, 소련에 필적하는 힘을 지닌 강대국이 아시아에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적으로 아시아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에 정치적으로 통합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⁷⁶⁾ 신상초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자유 진영, 공산 진영, 평화공존 진영이 정립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⁷⁷⁾ 그런 관점에서 볼

73) 주로 이승만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반동 회의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졌다. 반동 회의의 개최는 1955년 1월 1일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보고르 회의와 콜롬보권 동향,” 『경향신문』, 1954년 12월 30일자 사설. ; “아아 회의 목적 커뮤니케에 열거,” 『경향신문』, 1955년 1월 1일자.

74) “반동 회의의 전망,” 『경향신문』, 1955년 3월 22일자 사설.

75) 물론 반동 회의의 ‘중립정책’은 1961년 비동맹회의가 표방하는 ‘중립주의’와는 결을 달리했다. 우선 반동 회의 국가들은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개별적/집단적 자국 방위의 권리를 인정했다. 실제로 반동 회의에 참가한 여러 국가들은 이미 동남아시아조약기구에 가입해 있기도 했다. 비동맹회의의 전사(前史)로서 반동 회의를 접근하는 시도에 대한 비판으로는 Peter Willetts, *The Non-Aligned Movement : The Origins of a Third World Alliance*, (New York : Nichols Publishing Company, 1978), p.3. ; Peter Lyon, “The Emergence of the Third World,” in Hedley Bull and Adam Watson (eds.),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 Clarendon Press, 1984), p.229. ; Jamie Mackie, *Bandung 1955 : Non-Alignment and Afro-Asian Solidary*, (Singapore : Editions Didier Millet, 2005), pp.12-13.

76) 신상초, “아시아적 제3세계론 비판,” 『사상계』, 1954년 2월호, pp.43-51.

77) 이를 잘 보여주는 글은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다,” 『동아일보』, 1955년 4월 20일자 사설.

때 반동 회의가 표방하는 ‘아시아인의 아시아’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하지만 반동 회의 이후 아시아 민족주의를 둘러싼 평가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우선 아시아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행위는 소련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으로 시작되었다. 공산당이 ‘누워서 떡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탈식민 민족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였다.⁷⁸⁾ 아랍·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외교 확대를 논한 주요한은 이렇게 논했다.

“인도, 애급(이집트) 기타의 소위 ‘아랍·아시아’ 뿔럭(블럭)은 종래 단순한 중립 노선이론에서 냉전에서 초월한다는 표를 던지고 있었으나, ‘반동’ 회의 이래로 반식민주의의 강화는 ‘알제리아’, ‘뉴기니아’, ‘사이프러스’ 등의 문제에서 의식적으로 반서방적인 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반서방노선이 한국문제에 파급될까 염려되는 바 있다. 그러므로 중립노선을 배제하고 이를 극복하든가, 적어도 우리에게 불리한 표가 증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아랍·아시아’ 각국에도 공식 또는 비공식의 우리 사절단이 상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⁷⁹⁾

‘부득이’라는 주요한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로 엄연히 존재하는 냉전 국제정치의 논리는 아시아 민족주의의 완전한 승인을 허용하지 않았다. “두 진영의 싸움에 있어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아시아·아프리카 제국의 운명과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반대로 아시아·아프리카 제국의 공동보조가 냉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⁸⁰⁾ 법학자 정태섭은 1955년 후반 초점이 된 알제리 독립 문제를 논하면서, 국제정치 상의 세력균형과 현상유지가 여전히 반식민주의, 민족자결주의보다 앞선다고 말했다.⁸¹⁾

그러나 분위기는 50년대 초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맥락에서였지만, 식민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78) “민족문제 폭발과 건설적 해결,” 『동아일보』, 1955년 8월 24일자 사설.

79) 주요한, “외교진의 강화급무,” 『동아일보』, 1955년 10월 28일자.

80)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다,” 『동아일보』, 1955년 4월 20일자 사설.

81) 정태섭, “식민주의와 유엔의 고뇌,” 『사상계』 1955년 12월호. pp.32-33.

문제로 인정되었다.⁸²⁾ 식민지 문제의 해결은 ‘20세기 휴머니즘’의 실현이자 세계사의 합당한 전개 방향이었기 때문이다.⁸³⁾ 한국인들이 동의를 표한 반식민주의라는 문제들은 기실 반둥 회의가 합의할 수 있었던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최대공약수이기도 했다.⁸⁴⁾ 반둥 회의 무대에서 소련을 비판했던 동남아시아조약기구 국가들의 논리 역시도 소련이 동유럽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 민족주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논구한 이항녕은 아시아 정신의 기초가 인륜에 기초한 민족주의에 있다고 파악했다. 미국과 소련의 정신이 추상적인 세계주의를 대표했다면, 이와 대비되는 아시아의 민족주의는 구체적인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세계를 응당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작금의 서구의 길, 소련의 길을 모두 비판한 후 금일의 아시아의 급무는 ‘아시아의 정신’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⁸⁵⁾ ‘아시아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은 당대에 회자된 사상가인 아놀드 토인비의 표현을 빌리면 동방문명의 재생이기도 하면서, 전 인류의 재생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인륜의 평화’는 무엇일까.

“인륜은 인간을 기점으로 하고 인류를 종점으로 하는 인간생활 질서의 계열이다. 이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무한이 버려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조화적 관계가 곧 인륜인데 이 인륜의 중점은 시대에 따라서 혹은 가족에 혹은 민족에 혹은 동문족에 옮겨가기는 하나 그것이 인간과 인류의 양 가치를 종합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 인륜사회를 유지하는 이념은 오직 평화인데 이는 마치

82) “경제 및 문화적 침투,” 『동아일보』, 1955년 11월 21일자.

83) “격화하는 식민지 문제,” 『동아일보』, 1955년 10월 20일자 사설.

84) 디페시 차크라바티는 반둥 회의가 ‘분열된 아시아’ 국가들의 회담이며 반둥 회의의 합의문이 국제연합 헌장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다른 경험을 지닌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을 포괄하기 위해 네루와 저우언라이가 상당한 양보를 했으며, 반제국주의라는 ‘공통의 지평’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반둥 회의에 큰 의의를 부여한다. Dipesh Chakrabarty, “The Legacies of Bandung : Decolonization and the Politics of Culture,” in Christopher Lee (ed.), *Making a World after Empire : The Bandung Moment and its Political Afterlives*, (Athens : Ohio University Press, 2010), pp.45-68.

85) 이항녕, “식민지로부터 독립국가로 : 아시아의 자각,” 『신세계』, 1957년 1월호, p.80.

인간사회를 유지하는 이념이 평등인 것과 같다. 그리고 이 평화라는 이념만이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고 자유와 평등의 공통의 광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인류가 인간과 인류를 조화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중립주의가 미국과 소련을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라면, 아시아주의는 미국과 소련의 사상을 종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과에 있어서 중립노선이나 공존주의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출발점이 천양치자이기 때문에 중립주의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의 아시아의 인류의 계단은 우선 민족주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방의 정신이 (개인에) 있고 소련의 정신이 전체에 있다면 아시아의 정신은 오직 그 민족에 있을 것이니 이 민족주의야말로 전체주의를 종합할 수 있는 사상이다.”⁸⁶⁾

이항녕은 서방의 정신이 개인에 있고, 소련의 정신이 전체에 있다면 아시아의 정신은 민족에 있다고 보았다.⁸⁷⁾ 이는 각기 자유, 평등, 평화라는 가치와 대응된다. 그는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평화라는 가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⁸⁸⁾ 그에게 있어 세계무대에서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는 과거의 유·불·선 사상의 동양이 아니라 현대의 아시아 국가들이었다. 아시아의 민족주의는 능히 서방과 소련의 ‘전체주의’를 비판적으로 종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1955년 반동 아시아-아프리카회의를 높게 평가했다. 이 회의는 약소민족들이 민족적 각성 아래 자주적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녔기 때문이다.⁸⁹⁾

3) 동양의 아시아화

86) 이항녕, “식민지로부터 독립국가로 : 아시아의 자각,” 『신세계』, 1957년 1월호, p.81.

87) 서구의 개인과 대비하여 아시아의 민족을 강조하는 인식은 문학평론가 최일수의 작업에서도 엿보인다. 그는 일찍이 1956년 1월 “동남아문학의 특수성”이라는 글을 통해 이를 피력한 바 있다. 최일수, 한수영 역음, 『최일수 선집』, (서울 : 현대문학, 2012).

88) 이항녕, “자유·평등·평화,” 현대인강좌 편찬회 역음, 『현대인 강좌 별권 : 한국의 발견』, (서울 : 박영사, 1962), p.390.

89) 이항녕, “식민지로부터 독립국가로 : 아시아의 자각,” 『신세계』, 1957년 1월호, p.76.

현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경험과 연동되는 당대 동양 개념의 변화 과정은 동양사학자 정재각의 논의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발견된다. 정재각은 지금까지의 동양은 사실상 ‘비서양’을 의미했다고 정리했다.⁹⁰⁾ 또 서양과 비교해볼 때 동양은 ‘산만한 통합’밖에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양이나 동양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태도는 서양 문화의 존재양식을 기계적으로 동양에 대입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⁹¹⁾ 그는 4대 문명의 기원이 동양에 위치했음을 근거로 하여 동양문화가 존재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기본적인 태도는 전통 동양이 근대 서양과 비교할 때 열위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논의에 있어 특별한 것은 다른 이들이 전통 동양의 경험 속에서 동양 문화의 가능성을 추출하려고 했다면, 정재각은 동양이 서양의 공세 하에 패배한 근대 이후 아시아의 경험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사카이 나오키의 지적처럼 외부 관찰자에 의해 단순히 아시아인으로 묘사되는 상태로부터, 아시아인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약’이 필요했다.⁹²⁾ ‘비약’을 위해 아시아가 겪었던 것은 바로 아시아의 ‘패배’, 즉 식민화였다. 서양과의 조우와 피식민지 경험은 동양이 재발견될 수 있는 역설적인 계기였다. 서구의 지배를 통해 어떠한 내재적 공통성도 갖고 있지 않았던 동양은 서양이 대상화하고 종속시킨 사람들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이 때의 ‘동양’은 정신문명이 아니라 서구의 군사병기를 수용하여 자신의 역량을 의식하고 일제히 독립을 위해 궤기하는 ‘동양’이었다.⁹³⁾ 서세동점의 시기에 서양은 동양을 지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동양의 자각을 가져왔다. 자각한 동양에게 있어 소련과 미국은 모두 타도되어야 할 ‘서양 세력’이었다.

“...‘정체’(停滯)가 결궤(決潰)하여 하나의 분류(奔流)를 형성하는 동양사 상 획기적인 국면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동양의 분류를 또 다시 통제하려는 서양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90) 정재각, “동양의 역사적 현실,” 『사상계』, 1957년 8월호, p.276.

91) 정재각, “동양의 역사적 현실,” 『사상계』, 1957년 8월호, p.277.

92) 사카이 나오키, 이규수 옮김, 『국민주의의 포이에시스』, (파주 : 창비, 2003), p.49.

93) 정재각, “동양의 역사적 현실,” 『사상계』, 1957년 8월호, p.282.

그것은 도리어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양산의 자본주의세력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역시 서양산의 공산주의세력이라는 2대 세력으로 응결하여 전고미증유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소련을 새로운 독재주의 파시즘의 본산으로 간파하여 가상적국으로 지목할 때 동양은 불(弗)만 주면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며 후자도 미국이 네오 파시즘의 중심지이며 동양 각국의 민족주의 썸은 반미운동의 일환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실정치의 계산상에 서서 서로 항거하고 있는 서양의 힘의 대립 속에 동양은 바야흐로 그 길을 정하려는 것이다.”⁹⁴⁾

‘결괘’와 대비되는 ‘분류’는 그 동안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 하에서 억압되어온 아시아 민족주의를 상징했다. 지금까지 지성계의 많은 논의들이 서양과 대비되는 동양의 정체(停滯)를 자박의 차원에서 논했다면, 정재각은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정체’하도록 내버려 둔 미국, 소련을 포함한 서양 세력에 그 책임을 물었다. 또 그는 미국과 소련이 단순히 ‘현실정치’의 관점에서 동양을 재단할 뿐, 동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특히 미국이 동양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 민족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은 그야말로 서구의 맹점이었다. 단순히 미국처럼 풍요롭게 산다고 해서 아시아 민족주의의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시아 민족주의의 목표는 오히려 주체적으로 ‘사는 것’에 있었다.⁹⁵⁾

정재각은 동양의 제3의 길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주목하면서 글을 마쳤다.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동양 자신의 재발견과 앞으로의 대결을 위한 노력의 표현으로서 관심을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⁹⁶⁾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대한 관심에서 알 수 있듯이 ‘동양’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앵글로색슨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 걷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⁹⁷⁾

이처럼 1950년대 후반 한국 지성계에서는 ‘서양’과 대비되는 ‘아시

94) 정재각, “동양의 역사적 현실,” 『사상계』, 1957년 8월호, pp.282-283.

95) 조효원, “아세아 민족주의의 정도를 위하여,” 『사상계』, 1954년 11월호, p.119.

96) 정재각, “동양의 역사적 현실,” 『사상계』, 1957년 8월호, p.283.

97) 황산덕, “‘사대적’ 카리스마와 동양의 재발견,” 『사상계』, 1959년 2월호, p.35.

아'의 가치가 탈식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과거의 아시아가 유럽과 대비해서 상호연대성이 희박했던 반면, 현대의 아시아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으로 하나의 아시아'라는 혁명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정치적 지역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평화공존 분위기 속에서 1955년 반동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로 결집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움직임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현대문화로의 이행을 기다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디페시 차크라바티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 '아직은 아니'not yet라는 서양의 역사관에 반기를 들면서 '지금의 시간 지평'을 외치기 시작했다.⁹⁸⁾ 이들을 통해 아시아는 '지리상의 구획'이 아니라 '역사의 장소'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제 세계사는 기독교권이나 구미 국가, 근대화한 열강들의 독점물이 아니었다. 세계의 인구 면에서나 지리 면에서나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는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소외되는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났다. 현대 아시아의 경험은 탈식민 민족주의의 기치로 과거의 오리엔트인 중국과 인도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었다.⁹⁹⁾

2. 아시아·아프리카와 한국

1) 반식민이라는 공통분모 : 수에즈 사건과 헝가리 사건

미국·소련 중심의 냉전 구도에서 잠복되었던 탈식민의 구도는 1956년의 위기를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1956년 초 이집트가 자국의 보호령이었던 수단의 독립을 승인했다. 이어 영국은 아시아 내 마지막 주요 식민지인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 사설은 서구 국가들이 '전진하는 힘'인 민족주의를 거스르지

98) 디페시 차크라바티, 김택현·안준범, 『유럽을 지방화하기 : 포스트식민사상과 역사적 차이』, (서울 : 그린비, 2013), pp.8-9.

99) 훗날 동양사학자 고병익은 유럽의 식민지 경험을 통해 중국 문화권, 인도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이 통합되어 아시아사의 성격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고병익, "'동양' 재발견의 신국면." 『정경연구』, 1968년 10월호, p.101.

말고-마치 미국이 필리핀과 좋은 관계를 맺은 것처럼-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을 독립시킴으로써, 상호 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라고 촉구했다. 식민지에 집착하는 영국·프랑스와 달리 약소국 이집트가 민족자결주의의 명분에 의거하여 수단의 독립을 ‘출선자진’하여 인정했다는 점이 비교대상으로서 부각되었다. 또 이 사설의 저자는 ‘독립’만으로도 공산당의 침투를 대폭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국의 주요 아시아 식민지(인도·파키스탄·버마·실론)와 달리 말레이시아만이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공산당이 강력하게 창궐했다는 것이다. 민족문제만 ‘건설적’으로 해결된다면, 밀림 속에서의 공비 소탕전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었다.¹⁰⁰⁾

이어 이 기사는 공산당을 막기 위해서라도 ‘역사적 힘’이자 ‘대세’인 민족주의 감정을 승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아시아·아프리카 민족들은 현재 양 진영을 ‘횡단하는 존재’였던 만큼, 이들을 잘 포섭함으로써, 자유 진영의 냉전 승리가 가능해진다는 논리였다.¹⁰¹⁾ 식민지의 독립에 미적지근하던 프랑스까지 ‘아프리카의 캘리포니아’인 모로코의 독립을 최종 승인하자, 자유 진영이 민족자결의 문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을 자신의 진영으로 유인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감지된다.¹⁰²⁾ “자유 진영은 민족해방의 완성을 위하여 꾸준한 행정(行程)을 밟아나가고 있으며, 이는 공산전술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자유 진영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냉전전술이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반동노선을 자유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적극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었다.¹⁰³⁾ 이제 곧 강대국은 식민지를 포기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강대국들의 원조

100) “수단, 마래에서 민족주의는 전진.” 『경향신문』, 1956년 2월 9일자 사설.

101) 반대로 이 시기 영국·프랑스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반식민주의 운동을 냉전의 서사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등장한다. 공산당을 막기 위해서, 이들의 독립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102) 하지만 모로코·튀니지의 독립은 프랑스가 모로코·튀니지·알제리의 연대를 약화시키고, 알제리만은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Ryo Ikeda, “The Paradox of Independence : The Maintenance of Influence and the French Decision to Transfer Power in Morocco,”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Vol. 35, No. 4, 2007.

103) “모로코 독립 승인의 세계적 의의.” 『동아일보』, 1956년 3월 7일자 사설.

에 의해 약소국가들은 그 후진성을 극복하고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의해 안보가 보장되는 진정한 ‘하나의 세계’가 가능해진다는 이상적인 논의도 출현했다.¹⁰⁴⁾

하지만 ‘모순’과 같이 난감한 상황이 민족자결주의와 제국 사이의 전격적인 충돌에서 일어났다.¹⁰⁵⁾ 1956년 7월 26일, 이집트의 나세르가 이집트 혁명 5주년을 맞이하여 수에즈 운하를 전격적으로 국유화하자, 수에즈 운하에 대한 지분을 지니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이에 반대하여 이집트와의 전면 전쟁을 불사하게 되었다. 이른바 수에즈 위기의 발발이다. 수에즈 위기의 확산 분위기 속에서, 미국과 소련 모두 영국과 프랑스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면서, 이 문제는 세계의 관심사를 끌게 되었다. 대체로 한국인들은 나세르의 행위를 ‘민족주권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했다.¹⁰⁶⁾ 덧붙여 반동정신으로 표명된 민족적 요구를 서구 제국들이 원려(遠慮)해야 함을 지적했다.¹⁰⁷⁾ 이미 나세르는 『사상계』 지면을 통해 한국 사회에 구제도를 타파한 ‘혁명의 상징’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¹⁰⁸⁾

한국에서 나세르에 대한 인식이 긍정 일변도인 것은 아니었다. 영국·프랑스가 나세르를 ‘중동의 히틀러’라고 비난한 것이 그대로 전파되어 히틀러와 유사한 나세르의 과대망상증을 지적한 칼럼도 등장했다.¹⁰⁹⁾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나세르가 추구하는 대의는 서서히 주체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주요한은 나세르의 『혁명철학』(1954)을 스스로 소화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¹¹⁰⁾ 또 다른 글은 나세르를 ‘애급의 히틀

104) 강영수, “강대국은 식민정책을 포기할 것인가,” 『신세계』, 1956년 6월호, p.67.

105) 수에즈 사건은 미국에게도 딜레마였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입장에서, 영국의 편을 들자니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입지가 우려되었고, 나세르의 행위를 두둔하자니, 유럽 내 가장 중요한 우방국인 영국의 반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김봉중, “미국의 중동정책과 수에즈 위기,” 『미국사연구』, 28권, 2008, pp.99-128.

106) “스에즈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동아일보』, 1956년 8월 8일자 사설.

107) “스에즈 운하 문제와 중동의 위급한 사태,” 『경향신문』, 1956년 8월 8일자 사설.

108) 가말 압둘 나세르, 강봉식 옮김, “에집트 혁명론,” 『사상계』, 1956년 1월호. 이는 *Foreign Affairs* 1955년 1월호에 게재된 나세르의 글을 옮긴 것이다.

109) “여적,” 『경향신문』, 1956년 8월 22일자.

110) 주요한, “스에즈, 풍운벽상관(1),” 『동아일보』, 1956년 9월 12일자. 나세르의 책은 원용덕에 의해 1958년에 번역·출간되었다. 가말 압둘 나세르, 원용덕 옮김, 『혁명의 철학』, (서울 : 고구려문화사, 1958).

러'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이는 '쫓기고 또 쫓긴 쥐가 궁여책으로 정면에서 고양이를 깨문 것'이라고 두둔했다. 수에즈 위기에는 서구 국가들의 책임도 있다는 논조였다.¹¹¹⁾

수에즈 사건이 발발하자,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움직임은 강대국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미국은 반동 회의 참가국들의 잠재적인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수에즈 운하와 관련된 회의의 외연을 확대시켰다. 수에즈 운하 회의를 단순히 미국·프랑스·영국과 이집트의 문제로 국한할 경우, 여러 신생독립국가들의 반감을 사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단결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¹¹²⁾ 이는 1955년 반동 회의 이후 증대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956년 8월 16일 개최된 런던 회의는 미·영·프가 주축이 된 18개국 안과 인도·인도네시아·소련·실론이 제창한 4개국안이 대립했다. 다수의 국가가 지지한 18개국 안은 수에즈 운하를 국제관리기구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4개국 안은 이집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¹¹³⁾ 한국 언론은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서, 이집트의 주권회복 운동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¹¹⁴⁾

나세르의 저항은 일부 한국인들에게 아시아의 능동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였다. 당시 『한국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유광열에 따르면 아랍인들의 저항은 공산국가가 '명일의 적'이 될지라도 '금일의 적'인 식민주의와 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알려준 사건이었다. 말레이반도에서 수에즈 운하까지 뻗은 게릴라전쟁은 그 주류가 민족의 자결에 있는 것이지, 소련

111) 최경훈, “나셀 애급 대통령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신태양』, 1956년 9월호, p.114. 차기벽은 1963년 7월 『세대』지에 “나일 강의 히틀러”라는 나세르에 대한 인물평을 게재했다. 이 글은 제목과 달리, 나세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후에 이 글의 제목을 ‘나일 강의 사자’로 변경했다.

112) Guy Laron, *Origins of the Suez Crisis*,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3), pp.158-159. 그 결과, 수에즈 운하 문제를 다루는 런던 회의는 당사자인 영국, 프랑스, 이집트(옵서버 파견)를 제외하고, 미국, 소련을 포함하여, 총 23개국이 참가하는 대형 회의가 되었다. 인도는 이집트의 주권이 침해당할 경우, 모든 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영국의 확약을 받고서야 회의에 참가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실론 등 반동 회의를 주최한 콜롬보 회의 국가들은 버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청되었다.

113) “무승부로 끝난 런던 회담,” 『동아일보』, 1956년 8월 26일자 사설.

114) “런던 회의 폐막과 착잡한 금후정략,” 『경향신문』, 1956년 8월 25일자 사설.

에의 복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¹¹⁵⁾ 이제 아시아는 여러 민족자결운동을 통해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 유럽과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세계의 중심을 변형시키고 있었다. 이는 서구인들이 말한 ‘불변의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아시아적 정체성’에 대한 생생한 반례였다.¹¹⁶⁾

이어 같은 해 10월 23일 발발한 헝가리 사건은 세계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평가를 전격적으로 변화시켰다.¹¹⁷⁾ 헝가리 자유운동의 소식은 당대 한국 사회에 신속하게 전달되었다.¹¹⁸⁾ 한국에서 소련군에 혈혈단신으로 대항하는 헝가리 인민의 봉기는 반공적인 동시에, 소련의 ‘적색 제국주의’ 지배에 항거하는 약소국 헝가리 민족주의의 틀로 이해되었다.¹¹⁹⁾ 시인 김춘수는 “부다페스트 소녀의 죽음”을 통해 소련군에 의해 죽음을 맞은 소녀와 ‘음악에도 없고 세계지도에도 없는 이름이 없는 한강의 모래사장의 말없는 모래사장을 움켜지고 영문도 모르게 죽어간 열 세 살 난 한국의 소녀’를 연상한다.¹²⁰⁾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행동은 “네 혼자 한 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다.¹²¹⁾

소련군의 개입에 대해 헝가리가 ‘중립’을 선언한 것은 ‘중립’이 자동적으로 용공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유화의

115) 유광열, “아세아의 저항은 왜 증대되나,” 『신세계』, 1956년 9월호, p.53.

116) 유광열, “아세아의 저항은 왜 증대되나,” 『신세계』, 1956년 9월호, p.48.

117) 당대 서구 진보적 지성인들에게 헝가리 사건은 소련에 대한 기대를 회수하는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한국 지성계에서도 사르트르·알베르 카뮈를 포함한 당대 유럽 지식인들의 전향 논리가 ‘반공주의’의 틀로 번역되어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지영, “번역된 냉전, 그리고 혁명 : 사르트르, 마르크스주의, 실존과 혁명,” 『서강인문논총』, 31권, 2011.

118) 헝가리 사건 발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문학인들을 중심으로 헝가리의 정치·사회·문화를 개괄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김용호·이영순, 『헝가리 비극』, (서울 : 한국자유문학자협회, 1956). 또 당시 헝가리에서 발간된 팸플릿들이 서울신문사에 의해 편집되어 자료집의 형태로 출간되기도 했다. 서울신문사 조사국 편역, 『피로 물들은 일요일 : 자유 헝가리인들은 이렇게 싸웠다』, (서울 : 서울신문사, 1957).

119) 후일 국회의장이 되는 이만섭이 중심이 되어 대학 내에서 헝가리 인민을 돕기 위한 ‘학도정의군’이 결성되기도 했다. “학도정의군을 조직,” 『경향신문』, 1956년 11월 12일자. ; 이만섭, 『나의 정치인생 반세기 : 이승만에서 노무현까지 : 파란만장의 가시밭길 헤치며 50년』, (서울 : 문학사상사, 2004), pp.72-74.

120) 김춘수,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사상계』, 1957년 4월호, p.308.

121) 김춘수,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사상계』, 1957년 4월호, p.308.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은 이해하게 되었다.¹²²⁾ ‘약소민족의 비분’에 대한 공감은 나세르를 중심으로 대아랍국가가 건설되고,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가 몰락하는 것을 ‘역사의 의지’로 보기 시작했다.¹²³⁾ 이제 나세르가 아니라, 식민주의의 해소에 저항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행동이 ‘광적인 것’으로 그 해석이 변모되었다.¹²⁴⁾ 강대국의 정복정책을 비판하는 한국인들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소련을 겨냥한 것이기는 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인들은 약소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급속도로 심화했다.¹²⁵⁾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에 의해 신음하는 헝가리의 상황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언설은 약소국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라는 한국인의 주문이었다.¹²⁶⁾ 네루와 나세르에 대한 개인사적인 접근이 활발하게 소개된 것도 이 맥락에서였다.¹²⁷⁾ 이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민족자주정신을 공약수로 하여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다시금 등장했다.¹²⁸⁾ 훗날 전혀 다른 삶의 행보를 보여주는 박정희와 리영희가 나세르에 함께 열광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

“수천년래의 봉건아성을 무너뜨리고 생기충일하는 현대 <에지프트>를 건설하려는 <나세르>의 자세와 투지! 동서의 강대세력, 그 한복판에 서서 실리외교를 추진하며 제3의 세계를 외치면서 세계균형을 조정하고 나서려는 그의 철학은, 확실히 약자가 창조하여 가는 현실의 기적이 될 것으로, 이는 우리의 관심을 모아 마땅하리라 믿는 바이다.”¹²⁹⁾

122) “공산권의 동요와 중립 뿔력의 향배,” 『동아일보』, 1956년 11월 22일자 사설.

123) 김벽두, “폭발한 중동분쟁의 배후는 이렇다,” 『신태양』, 1957년 1월호, p.74.

124) “평화적인 식민주의의 해소,” 『경향신문』, 1956년 11월 2일자 사설.

125) “강대국은 정복정책을 버려라,” 『동아일보』, 1956년 11월 4일자 사설.

126) “영·불은 총부리를 소련에 돌려라,” 『동아일보』, 1956년 11월 9일자 사설.

127) 박운대, “네루·스카르노·막사이사이,” 『신세계』, 1957년 1월호. ; “미국이 본 낫셀 수상,” 『신세계』, 1957년 1월호.

128) “외교진폭확대의 의의와 그 방법론,” 『경향신문』, 1957년 2월 9일자 사설.

129)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서울 : 향문사, 1963), pp.195-196. 『국가와 혁명과 나』는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하게 되는 박상길의 대필이지만, 박정희와의 구술 면담을 통해 저술된 것이기에 박정희의 생각을 일정하게 반영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 리영희의 나세르에 대한 열광에 대해서는 리영희, 임현영 옮김, 『리영희 저

아시아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3·1 운동에 대한 강조가 나타났다. 기실 3·1 운동의 전유와 강조는 민족해방의 분위기와 줄곧 연동되어 있었다. 일찍이 김기석은 서양의 공리주의를 극복하는 사상으로 3·1 운동에 주목한 바 있었다. 프랑스 혁명 선언이 ‘개체건립’의 ‘근세’를 상징했다면, 3·1 독립선언은 ‘개전원융’의 ‘현대’를 열었다.¹³⁰⁾ 김기석이 3·1 운동이 국제연합과 한국전쟁의 정신으로 연결되었다고 보았다면, 1956년의 맥락에서 3·1 운동은 아시아 민족주의의 선조로 정위되었다. “작금에 나타나는 알제리와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볼 수 있는 게릴라 전쟁은 한국의 ‘의병’으로부터 시작했으며, 중국의 5·4 운동이나 인도의 간디 운동 역시 3·1 운동으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었다.”¹³¹⁾ 이는 일종의 ‘건강부회’라고 치부할 수도 있으나, 그만큼 아시아 민족해방운동의 동향에 대한 당대의 관심을 집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타자에 대한 이해는 자기 경험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주의와 3·1 운동의 접촉은 1956년 헝가리 사건 이후 활발해졌다. ‘직접 행동’으로 조선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보여준 한국인들의 경험은 헝가리의 비극을 이해하는 하나의 렌즈였다.¹³²⁾ 3·1 운동은 온 겨레가 ‘적수공권’으로 단결의 힘만을 지니고 투쟁한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한국인들은 헝가리 운동의 궁극적 실패원인으로 국제적 제후의 부족을 지적했다. 국제정치적 논리에 의해 헝가리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제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인민대중’의 힘을 논하기 시작했다. 아이젠하워의 미국이 소련과의 결전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했지만, 이후 냉전의 새로운 축은 이민족의 지배와 이에 대항하는 민족자유운동의 대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¹³³⁾ 이 연장선상에서 냉전의 벽을 뚫으려는 시도는 동과 서의 ‘가교’가 되겠다는 여러 국제적 중개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의 장막, 죽의 장막, 그 어떤 장막을 깨뜨려 부수는

작집 11 : 대화』, (파주 : 한길사, 2006), p.204.

130) 김기석, 『현대정신사』, (서울 : 교우사, 1956), p.98.

131) 유광열, “아세아의 저항은 왜 증대되나,” 『신세계』, 1956년 9월호, pp.51-52.

132) “미국은 책임을 져야한다,” 『경향신문』, 1956년 11월 8일자 사설.

133) “심판의 1년을 보내면서,” 『경향신문』, 1956년 12월 31일자 사설.

인민대중의 힘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판단도 등장했다.¹³⁴⁾ 『경향신문』 1957년 신년사는 ‘무명용사’에 대한 상찬으로 시작한다.

“십년간의 냉전기에서 양대 진영의 대립을 말해왔고 공산과 자유 양대 사상의 혈전이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견해왔다. 그러나 의외로 냉전교착의 타개는 미국과 소련의 자웅결정, 소위 3차대전, 원자전쟁, 전면전쟁에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구 세기의 유물로서 ‘집모퉁이에 버려두었던’ 민족자주주의의 힘으로 전개되게 되었다. 그럼으로 해서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은 ‘아이젠하워’나 ‘후루시초프’나 모택동이나 ‘네루’의 어깨에 매워지기보다도 약소민족의 수많은 무명용사들의 손에 달리게 된 것이다. 미·소 양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수소폭탄의 위력이 자유를 부르짖는 약소민족의 무명영웅들의 적수공권(赤手空拳) 앞에 그 무색·무력을 자백하게 되었다.”¹³⁵⁾

이는 현재의 한국을 비판하는 논리이기도 했다. 약소민족의 경우, 오히려 더 넓은 국제적 시야를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현실적인 외교정책의 추진을 하지 못했다.¹³⁶⁾ 한국은 미국과의 우호친선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점차 ‘아시아의 고아’가 되어가고 있었다. 앞으로 헝가리와 같은 운명을 겪기 않기 위해서는 3·1 운동에서 보여준 우리 민족의 단결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등 서방 열강을 포함한 아시아·아프리카 진영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1950년대 후반 한국 지식인들의 결론이었다.¹³⁷⁾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은 역사적 후진성이나 민족주의의 측면에서 한국과 공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 역시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었다.¹³⁸⁾

134) “국제적 중개인들의 오산을 지적한다,” 『경향신문』, 1956년 12월 27일자. 네루의 중개 외교에 대한 비판은 “네루는 성공하였는가?,” 『사상계』, 1957년 2월호. 이는 네루를 겨냥하는 동시에, 국제연합 가입 후 아시아와 서구의 가교를 표방한 일본을 비판한 것이었다.

135) “1957년의 세계정국,” 『경향신문』, 1957년 1월 1일자.

136) “이데올로기와 외교의 구별,” 『동아일보』, 1957년 3월 3일자 사설.

137) “3·1절을 맞아,” 『동아일보』, 1957년 3월 1일자 사설.

138) “외교활동 재검의 필요,” 『동아일보』, 1957년 2월 3일자 사설.

2) 중립 진영과 아시아 공산주의에 대한 해석 변화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 체제가 아시아를 타자화한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냉전은 식민지 질서를 벗어난 아시아 국가들을 다시금 타율적 기반(羈絆) 하에 배치했다. 해방된 아시아는 다시 '냉전의 도가니' 속에서 분할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며, 아시아는 냉전의 구도에 따라 공산 아시아, 자유 아시아, 중립 아시아로 정립되었다.¹³⁹⁾

'중립'은 냉전의 양 진영론 하에서 항상 불온한 것이었으며, 1940-50년대 초 한국 지성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중립 아시아는 전후 아시아의 문제의식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달성한 신생국가들은 그들의 독립을 보전하고, 자국의 경제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이것은 독립을 전취(戰取)했던 미국이 먼로주의를 선언하고, 통일을 달성했던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현상유지정책을 답습한 것이나 똑같은 이유에서였다.¹⁴⁰⁾ 반동 회의의 개최는 정확히 이런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서술되었다. 1955년 반동 회의는 전후 아시아사에서 가장 큰 위상을 차지하는 사건이었으며, 이제 아시아의 운명은 제네바, 파리 또는 런던 혹은 워싱턴이 아니라, 아시아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했다.¹⁴¹⁾

139) 이원우, "1949년 : 중국의 내전과 세 개의 아시아," 『신태양』, 1959년 4월호, p.144.

140) 윤주영, "인지휴전의 달성과 중립주의세력의 결집," 『신태양』, 1959년 4월호, pp.183-184. 먼로주의의 비유는 미국 정책 담당자의 글에서도 등장했다. 1955년 반동 회의 직후에 미 국무부 차관대리 로버트 머피(Robert Murphy)는 반식민주의와 결합하는 민족주의 동기를 평가하면서, 미국이 어느 강대국보다도 이들의 운동을 동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독립전쟁 이후 우리 자신의 독립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먼로주의를 선언함으로써, 유럽국가들이 서반구를 식민지화하는 것을 막았다. 이는 (미국이) 그 주의를 주장하기에는 실력으로 보아서 50년이나 뒤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참으로 용감한 주장이었다. 로버트 머피, 미국 공보원 옮김, 『아세아의 요청』, (서울 : 주한미공보원, 1955), p.15. ; 로버트 머피의 글은 『신세계』에도 전재된다. 로버트 머피, "아세아의 요청," 『신세계』, 1956년 6월호, pp.118-128.

141) 고정훈, "1955년 : 반동의 아아 회의와 중립주의 세력의 대두," 『신태양』, 1959

한국인들의 시선은 민족주의에 기초한 지역의 통합 운동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졌다.¹⁴²⁾ 진정한 민족국가를 만들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통합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었다. 이용희는 당대 국제정치의 대세를 ‘분열 속의 통합’이라 정리했다. “여러 국가들의 독립으로 나라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세계는 몇 개의 큰 지역에 있어서 지역적 통합에의 과정을 밟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을 통하여 국제정치의 양상이 오히려 단순해진다는 것”이다.¹⁴³⁾ 작금의 지역적 통합은 이전의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 서구 지역만을 포괄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 세계를 포괄한다는 차이가 있었다. 동시에 전쟁 기술의 발달은 역설적으로 양 진영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줄이면서, 세계사는 영구평화로 나아가게 되었다.¹⁴⁴⁾

이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역 통합을 희구하는 주문으로 변화하기도 했다. 서구제국이 경제적·정치적·군사적 통일체로 점진하고 있는 때에 약소국들이 ‘사소한 감정의 대립과 소리(小利)의 상치(相馳)’ 때문에 서로 다투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리’이기 때문이다.¹⁴⁵⁾

요르단과 이라크의 합병을 다루는 사실에서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요르단과 이라크의 연합왕국(아랍 연방)의 성립으로 바그다드 조약기구가 현실적인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합병의 취지가 ‘자주중립’에 있다면서 긍정하는 태도가 등장했다는 것이다.¹⁴⁶⁾ 냉전 구도 하에서 의심스럽던 ‘중립’이 ‘자주’라는 언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었다. 집단안전보장주의나 동맹 정책의 대안으로 ‘중립주의’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했다. “자유민주주의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장과 통일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본다는 것은

년 4월호, p.187.

142) “애급(이집트)·씨리아 양국의 합병,” 『동아일보』, 1958년 1월 29일자 사설. 『사상계』는 통일 아랍 공화국의 등장으로 아랍 세계가 대동단결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한다. “통일 애라브(아랍) 공화국 탄생,” 『사상계』, 1958년 4월호, p.253.

143) 이용희, “대립과 통합 : 영구평화의 문제,” 『사상계』, 1957년 4월호, p.143.

144) 이용희, “대립과 통합 : 영구평화의 문제,” 『사상계』, 1957년 4월호, p.219.

145) “두 왕국의 합병을 축복함,” 『동아일보』, 1958년 2월 16일자 사설.

146) “두 왕국의 합병을 축복함,” 『동아일보』, 1958년 2월 16일자 사설.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⁴⁷⁾ 이를 주장한 박준규는 “우리 편에 찬성하지 않는 이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 ‘중립’을 우리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에게 우리의 중립관을 강요하는 것은 한국을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¹⁴⁸⁾ 이런 정세 하에서, ‘아시아의 일우’에 자리잡고 있는 한국이 ‘자주중립’을 추구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동정과 호감을 사야한다는 주문이 공론화되었다.¹⁴⁹⁾ ‘미국의 들창으로 내다보는 좁은 외교’로는 이념이 아닌 현실로서의 외교가 불가능하다는 진단도 등장했다.¹⁵⁰⁾

그러나 한국인들이 탄생을 축원한 요르단-이라크 연합왕국은 1958년 7월 이라크의 군사 쿠데타로 5개월 만에 붕괴된다. 새로 집권한 이라크의 카셈 준장은 친나세르 노선을 선포했다. 이라크의 친나세르화는 대소련 포위망인 바그다드 조약의 위기를 의미했다.¹⁵¹⁾ 이라크의 위기를 평가하는 사설에서는 흥미로운 논점이 드러났다. 우선 서방 측이 이라크를 단순히 대소포위망의 ‘말’로만 활용하려고 했고, 중동의 변영과 발전을 위한 신진대사책을 강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랍 젊은이들이 친나세르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을 더 밀고나가, 서방 측이 아랍국가들의 민족운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라크의 군사 쿠데타는 사실상의 ‘공화혁명’이며 이를 두고 바그다드 조약의 약화만을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서방 측의 ‘무지’라는 것이었다.

이를 다룬 한 사설은 “무너지는 바그다드 조약을 억지로 붙드는 것보다 다른 방면에서 이를 보강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이며, 이를 위해서라

147) 박준규(朴浚圭),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중립,” 『사상계』, 1959년 11월호, p.171.

148) 박준규,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중립,” 『사상계』, 1959년 11월호, p.171.

149) “외교활동의 근본적 결함 시정하라,” 『동아일보』, 1959년 1월 17일자 사설. 이 사설은 정상적인 외교관계 수립이 어렵다면, 경제교류나 문화교류의 길이라도 먼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 시도하라고 촉구한다. ; 비슷한 논지의 글로는 “A·A 제국에 대한 외교 강화의 필요,” 『동아일보』, 1959년 12월 1일자.

150) 이용희, “우리나라의 외교를 위하여 : 외교란 자량이나 이상의 선언이 아니다,” 『신태양』, 1958년 2월호, pp.22-31.

151) 실제로 바그다드 조약기구(AGO)는 이라크의 탈퇴 이후, 중앙조약기구(CENTO)로 변모한다.

도 아랍 민족운동에 대한 서방 측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랍을 이해할 때에만, 이라크를 제외한 다른 아랍 국가들을 포섭하며, 또 나세르까지 서방측으로 친근하게 끌어올 수 있으며, 이라크 혁명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¹⁵²⁾

이후 대체적인 합의는 아랍 민족주의가 반서방 운동으로 전화하지 않게 잘 관리해야한다는 정도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아랍 지배층들의 부독점이나 사회 개혁 미비가 ‘급진 민족주의’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동맹조약의 결성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을 도와야 한다는 논의도 등장했다.¹⁵³⁾ 고정훈은 나세르주의가 중동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로 기성세력들의 부패와 친서방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나세르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나세르의 지도 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는 기성세력을 개혁하려는 ‘아랍 민족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¹⁵⁴⁾

이라크 혁명 이후, 수단, 파키스탄, 버마 등지에서 군부를 중심으로 한 쿠데타가 빈발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아시아·아프리카의 군부 정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지가 한국 지성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때에 맞추어 『사상계』는 이와 관련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의 주요 토론 주제는 군부 독재정권의 출현이 공산주의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냐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정치학 교수 김상협은 후진국가의 군부독재는 터키에서 ‘케말리즘’이 그러하듯이, 후진지역이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해석했다.¹⁵⁵⁾ 또 김상협은 인도의 네루가 공산당을 허용하지 않은 채, 소련을 인도의 발전에 단순히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아시아·아프리카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진단했다.¹⁵⁶⁾

152) “이라크(이라크) 혁명은 아랍 민족운동의 일단이다.” 『경향신문』, 1958년 7월 16일자 사설.

153) “중동정책 재검토.” 『동아일보』, 1958년 7월 30일자 사설.

154) 고정훈, “아랍민족주의와 ‘나세리즘,’” 『신태양』, 1958년 9월호, p.77.

155) “좌담회 : 국제정치의 난류와 한류.” 『사상계』, 1959년 5월호, p.103. ; 이 논리는 훗날 박정희 군부 정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전화되기도 했다. 최문환, “5·16 군사혁명과 경제·사회 문제,” 『최고회의보』, 1호, 1961, pp.21-26. ; 『신사조』 1962년 5월호는 후진국의 혁명(버마, 시리아, 쿠바, 터키)과 박정희의 군사혁명을 비교하고 있다.

156) “좌담회 : 국제정치의 난류와 한류.” 『사상계』, 1959년 5월호, pp.105-106.

이처럼 1950년대 말 한국 지식인들은 아시아 민족주의를 규정하는 데 있어, 그것이 친공적이라든지, 용공적이라는 판단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이후 반공 아시아 국가들을 넘어서지 못했던 한국의 표상공간은 중립 아시아를 넘어 공산 아시아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소련의 공산주의와 아시아 공산주의를 구분하여, 후자를 역사적·맥락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도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일례로, 중공을 인식하는 데 있어, 이전까지는 소련의 사주를 받는 ‘위성국’이라는 틀로 중공에 접근했다면, 1950년대 후반에는 소련과 아시아를 분리시켜 이해하려는 지적 시도가 나타났다.¹⁵⁷⁾ 이는 아시아 공산주의가 소련식 공산주의와 달리 사실상 ‘민족주의’에 가깝다는 판단에 기초했다.

김상협은 자신의 고향인 유럽을 저버린 채, 공산주의의 유령이 반봉건적 후진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발흥하고 있는 현상을 독특하게 재해석했다. 그가 볼 때, 아시아의 공산주의는 맑스가 제창한 이념으로서의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사실상의 민족주의’였다. 그는 이에 대한 역사적 증거로 아시아 공산당은 모두 식민지 시기 민족해방운동에 앞장섰으며, 다른 그 어떤 정당들보다도 통일전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환기시켰다.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였던 이 지역의 공산당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우선 반제국주의 민족주의를 그 투쟁목표로 삼았다.¹⁵⁸⁾

그가 아시아 공산주의를 소련식 공산주의와 분리시켜 이해할 수 있었던 이론적 기초는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였다.¹⁵⁹⁾ 아시아의 공산주의 정당들은 “선진국의 그것과 같은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이라기보다는, 인민민주주의 또는 신민주주의 정당”이었던 것이다.¹⁶⁰⁾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의

157) 일찍히 오종식은 중공이 티토 이상으로 공산주의와 결별할 가능성을 논했다. “미국에 대한 공개장,” 『신태양』, 1957년 8월호, pp.62-63.

158) 김상협, “공산주의는 아세아의 신화인가,” 『사상계』, 1959년 1월호, p.24.

159) 김상협은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를 ‘온건하고 착실하며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상협, “공산주의는 아세아의 신화인가,” 『사상계』, 1959년 1월호, p.27. 김상협은 마오쩌둥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 갔고, 이는 1964년에 『모택동 사상』이라는 선구적인 업적으로 이어졌다.

160) 김상협, “공산주의는 아세아의 신화인가,” 『사상계』, 1959년 1월호, p.26.

문제제기가 그러했듯이, 김상협은 유럽과 다른 아시아의 맥락에서 공산주의를 이해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었다. 아시아 공산주의는 소련의 ‘변종’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이해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사상계』의 주요 지식인 중 한 명인 김준엽은 이 시기 아시아 민족주의가 “후진적인 아시아의 전제·부정·불평등·빈곤을 일소하기 위한 민족주의”라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요청했다.¹⁶¹⁾ 이어 서석순은 자유를 희구하던 서구인들이 민족주의를 통해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 서구 식민주의·소련 식민주의의 몰락에서 아시아·아프리카인들은 민족주의를 통해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¹⁶²⁾ 그에게 있어 20세기의 역사는 “자유가 식민주의를 몰락시키는 역사”였다.¹⁶³⁾

앞서 소개한 김상협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서석순의 글에서 『사상계』가 시종일관 추구하는 ‘자유’라는 가치가 아시아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현상과 접목되는 현상을 목도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사의 당당한 주체로서 인정받고, 오히려 ‘자유’를 실현하는 존재가 되었다. 일전에 아시아의 제3세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신상초는 “1955년을 기점으로 아시아·아프리카 블록이 독립을 완성하고, 미소 냉전대결에서 있어서 적극적인 중립정책을 쓰게 되면서, 이전까지 이분되었던 세계가 삼분된 세계로 변모했다”고 인정했다.¹⁶⁴⁾

3) ‘전후의 종언론’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아시아의 지리적 범위는 중국·일본·한국을 범위로 하는 ‘동양’을 넘어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161) 김준엽, “아시아민족해방운동,” 『사상계』, 1957년 3월호, p.140. 김준엽의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다. 그는 1955년 대만에서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해서, 중공에 대한 반공적인 논설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왔기 때문이다. 김준엽의 반중 논설에 대해서는, 정문상, “중공과 중국 사이에서,” 『동북아역사논총』, 33권, 2011, pp.61-63.

162) 서석순, “자유와 식민주의의 몰락,” 『사상계』, 1957년 1월호, p.239.

163) 서석순, “자유와 식민주의의 몰락,” 『사상계』, 1957년 1월호, p.243.

164) 신상초, “국제정치의 새로운 양태 : 공산권동향의 분석과 전망,” 『사상계』, 1959년 1월호, p.51.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이 현상은 당대에 어떤 의미를 부여받았을까. 신상초는 “전후의 종언”이라는 글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자아냈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상이 혼란이 회복되고 안정된 질서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¹⁶⁵⁾ 그에게 있어 ‘전후’라는 시간은 응당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루어졌어야 할 아시아·아프리카의 독립이 10년 정도 유예된 시기를 의미했다.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은 단순히 국가의 수의 증가만을 뜻하지는 않았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소련이 강요한 혼란스러운 냉전 체제를 내파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들이었다. 중립 진영의 등장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소련으로 하여금 서로 간의 전쟁을 회피하게 만들었다. 어느 쪽이 공격성을 드러낼 때마다 중립 진영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균형추’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한 전술적 고려가 아니라, 세계에서 위신을 고려해야 하는 미국과 소련의 경우, 핵무기를 실제로 활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전후 질서는 이제 비록 냉전 시기 등장한 공포의 균형에 기초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았다.¹⁶⁶⁾

신생국 민족주의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한국 지성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 정책 결정자들도 미국의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주의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월터 로스토우는 1957년 스푸트니크의 발사 성공 이후 공산주의의 일대 공세가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국가들을 강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주에서의 소련의 성공은 신생국들에게 공산주의가 과학과 기술의 장래에 대하여 관견을 쥐고 있는 증좌(證左)로 이해된 것이다. 이들 국민들은 이제 공산주의가 인류의 불가피한 운명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¹⁶⁷⁾ 이를 문제 상황으로 포착한 월터 로스토우는 공산 진영보다 자유 진영의 접근법이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가들에

165) 신상초, “전후시대의 종언,” 『국제평론』, 1959년 11월호, p.45.

166) 신상초, “전후시대의 종언,” 『국제평론』, 1959년 11월호, pp.52-53. 마찬가지로 김철은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이 서로가 서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능력에 도달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립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철, “국가정책의 재검토,” 『국제평론』, 1959년 11월호, pp.142-143.

167) 월터 로스토우, 김영준 옮김, 『선진국과 후진국』, (서울 : 탐구당, 1966), p.11.

게 더 유용함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전략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미국과 소련의 중립 진영과 상대 진영에 대한 대규모의 원조경쟁이 시작되었다.¹⁶⁸⁾

윌터 로스토우의 인식이 미국의 냉전 전략 속에서 구성된 것이라면, 좀 더 아시아 민족주의의 정당성에 공감을 표시한 이도 있었다. 한국 사회에도 번역·소개된 민주당 계열 정치인이자 외교관인 체스터 볼즈(Chester Bowles)가 좋은 예다.¹⁶⁹⁾ 그는 미국인들에게 아시아인들의 자주독립 열망을 이해시키고자 했다. 미국의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체스터 볼즈는 미국을 반식민주주의의 선구자로 부각시켰다. 그는 ‘반동정신’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다. “‘반동정신’은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외국의 지배를 반대하는 열망, 인종과 계급차별을 반대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열망, 빈곤과 참상과 기아를 언제까지나 면치 못하게 하는 오랜 봉건주의를 반대하고 신속한 경제발전을 원하는 열망, 그리고 전쟁에 대한 항구적인 공포를 물리치고 평화를 원하는 열망”이다.¹⁷⁰⁾ 그는 이와 같은 ‘반동정신’이 정확하게 제퍼슨과 월슨이 말한 미국의 정신과 상통한다고 보았다. 바로 미국의 월슨 대통령의 제창에 의해, 호찌민과 같은 아시아의 민족주의자들이 1919년 베르사유 평화회의에 나타난 것이었다.¹⁷¹⁾

체스터 볼즈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크레믈린의 동향이나 공산주의 봉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동서양의 그 어느 쪽에도 좌단(左袒)하지 않은 또 하나의 세계인 중간 세계(Middle World)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지역은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었다.¹⁷²⁾ 체스터

168) “미·소 간의 경제외교공세,” 『동아일보』, 1958년 6월 8일자 사설.

169) C. 볼즈, 정문상 옮김, 『세계평화와 약소민족의 혁명』, (서울 : 인간사, 1957). 미국 민주당의 아시아 전문가였던 체스터 볼즈는 케네디 행정부의 국무차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문제에 관한 특별고문을 역임했다. 조순승, “극동정세에 밝은 체스터 B. 보울즈,” 『사상계』, 1961년 2월호.

170) C. 볼즈, 정문상 옮김, 『세계평화와 약소민족의 혁명』, (서울 : 인간사, 1957), p.243.

171) C. 볼즈, 정문상 옮김, 『세계평화와 약소민족의 혁명』, (서울 : 인간사, 1957), p.223.

172) C. 볼즈, 정문상 옮김, 『세계평화와 약소민족의 혁명』, (서울 : 인간사, 1957). 역서 참고. 실제로 반동 회의 이후 미국 정부는 식민주의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

볼즈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아시아의 후진약소민족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자리와 방향을 정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으로 독해되었다. 체스터 볼즈를 번역·소개한 정문한은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주의가 “세계를 격동케 하는 줄기찬 저류, 어떤 잠재력(潛勢力)－지금은 비록 서방진영 대 공산주의의 상극이라는 요란스러운 현상에만 눈을 파는 대부분의 식자들의 간과를 받고 있을지 모르나 머지않아서 세계도처에서 표면화할－혁명적인 ‘힘’”이라고 언급했다.

4) 1960년대 초반 아시아·아프리카 자기화의 양상

그런 의미에서 1960년은 냉전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지금까지 냉전 구도 하에서 잠재되어 있던 아시아·아프리카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해였기 때문이다. 1960년은 ‘아프리카의 해’로 불릴 만큼 많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정치적 자결을 이루었다. 한국인들에게 아프리카는 공산주의와 연결되지 않은 ‘청정지역’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한 감정이입은 타 지역에 비해 수월했다. “아프리카의 신생 정당이 공산당의 기관이라는 증거는 찾기 어려우며, 아프리카에 여러 독립 국가들이 등장하는 것은 소련의 승리가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에서의 민족운동이 아프리카까지 파급된 것”으로 해석되었다.¹⁷³⁾

박준규(朴浚圭)는 “아프리카의 국제정치사적 위치”라는 글을 통해 아프리카의 위상을 검토했다. 아시아가 제국주의의 지배를 통해 하나의 지역으로 구성되었다는 논의가 아프리카를 보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불행히도 아프리카는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었으나, 식민 지배는 역설적으로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이라는 ‘활화산’을 일깨우게 되었다.” 그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제정치의 희생물을 넘어서, 국제정치의 당당한 ‘주체’로서 등장했음을 선언했다.¹⁷⁴⁾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프리

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Jason Parker, “Cold War II :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the Bandung Conference, and the Reperiodization of the Postwar Era,” *Diplomatic History*, Vol. 30, No. 5, 2006.

173) “흑인 신생국 가나,” 『사상계』, 1957년 5월호, p.168.

174) 박준규, “아프리카의 국제정치사적 지위,” 『사상계』, 1959년 5월호, p.154. 심지

카인이 더 이상 예측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¹⁷⁵⁾

또 당대의 많은 논자들은 아프리카의 정치적 운동이 냉전 질서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지역단결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매우 ‘건설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¹⁷⁶⁾ “이제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이념이나 행동을 공산주의적이냐 자본주의적이냐, 친공산이나, 친서방이나로 갈라보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것은 가장 ‘아프리카’적이고, 가장 민족주의적이기 때문이다.”¹⁷⁷⁾

또 4·19 혁명의 성공은 한국이 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신생국가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했다.¹⁷⁸⁾ 임창영 주 유엔대사를 필두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1961년 2월 아프리카에 파견되어, 한국의 민주발전을 소개하고 국제연합 내의 아프리카 신생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다.¹⁷⁹⁾ 친선사절단을 통한 ‘현장’의 경험은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가능하게 했다. 아프리카의 중립은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중립주의라 하더라도 밖으로는 중립을 표명하지만 반공을 국시로 하며 사회주의도 계급의식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대립투쟁이 아니라 혹은 사유를 부정하는 소위 맑스 식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기네의 종족이 다 같이 잘 살자는 뜻의 주의”인 것이었다.¹⁸⁰⁾

이 시기 한국 지성계에서 탈식민 민족주의에 대한 공명은 최대치에 이른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체가 바로 『민족일보』다. 1961년 2

어 아프리카의 ‘은인’ 슈바이처조차도 아프리카인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형-동생의 관계로 대우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인들에게 일부 비판을 받고 있었다. 고병익, “1960년 아프리카 기상도,” 『사상계』, 1960년 10월호, pp.76-77.

175) “아크라 회의와 아프리카의 꿈,” 『사상계』, 1959년 6월호, p.108.

176) “투쟁에서 건설의 시대로 : 아프리카정상회담과 단결기구,” 『사상계』, 1963년 7월호. 아프리카단결기구의 탄생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프리카단결기구의 탄생,” 『동아일보』, 1963년 5월 28일자 사설.

177) 조세형, “검은 대륙, 오늘의 동향 : 아프리카의 단결과 그 문제점,” 『신사조』, 1963년 7월호, p.148.

178) “반독재혁명의 국제적 영향은 중대하다,” 『경향신문』, 1960년 5월 2일자 사설.

179) “아주에 친선사절단,” 『동아일보』, 1961년 2월 7일자. 국제연합 대사 임창영이 아프리카에 파견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국제연합 내에서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을 의식하고 있었다.

180) 조의설, “아프리카 기행,” 『사상계』, 1961년 11월호, p.203.

월 창간된 『민족일보』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무기의 발전으로 강대국들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강대국 열강의 시대’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중소국가의 시대’로 바뀌었다. 또 중소국의 세력은 차츰 성장하여 제3세력권으로서 저력을 증대시키고 있었다.¹⁸¹⁾ 이는 앞서 논의한 신상초의 시대진단과도 통해 있었다.

이와 같은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일보』는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중립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소련을 비판했다. 특히 1960년 국제적 초점이 되었던 콩고 사태에 대해 『민족일보』는 외세로 대표되는 미국과 소련의 책임을 물었다. 식민주의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한 채, 콩고에서 세력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소련의 구시대적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¹⁸²⁾ 미국과 소련은 콩고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 개입함으로써, 이들의 자체적이면서 주체적인 문제해결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는 국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황에도 적용되었다. “두 개의 상반된 이즘은 우리 민족을 분단시키고 못 살게 만들었다.”¹⁸³⁾ 이와 같은 인식 아래, 『민족일보』 지면에서는 중립주의를 분단 한국의 상황에 적용한 중립화 통일론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¹⁸⁴⁾

『민족일보』는 미국의 피그만 개입을 극복해낸 카스트로의 쿠바에게서 한국의 가능성을 발견했다.¹⁸⁵⁾ 『민족일보』에는 유독 카스트로의 목소리를 빌려, ‘평화를 누리도록 방임하라’라는 언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 언설은 『민족일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¹⁸⁶⁾ 김수영이 『들어라 양키

181) “증대하는 아·아 제국의 비중,” 『민족일보』, 1961년 4월 21일자.

182) 반면, 『사상계』는 콩고가 지나치게 독립을 서둘렀기 때문에 콩고가 혼란에 빠졌다고 보았다. “아프리카의 조생아,” 『사상계』, 1960년 9월호, pp.192-198.

183) 이철범, “우리는 무엇인가 증오한다,” 『민족일보』, 1961년 2월 17일자.

184) 중립화 통일론에 대해서는 홍석률, “중립화통일 논의의 역사적 맥락,” 『역사문제연구』, 12호, 2004.

185) 미국의 쿠바 개입에 대해서 『민족일보』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미국의 큐바에 대한 무력개입은 위험천만하다,” 『민족일보』, 1961년 4월 24일자 사설.

186) 『민족일보』에는 다양한 쿠바 관련 논설이 소개되었다. 리오 휴버맨과 폴 스위지의 “큐바 : 그 혁명의 해부”가 『민족일보』에 번역·연재되기도 했다.

들아』에 대한 서평에서 언급한 것처럼 “쿠바가 의욕하는 것은 곧 우리들이 의욕하고 추구하는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¹⁸⁷⁾

이처럼 4·19 이후 확장된 세계감각은 같은 후진국인 한국과 쿠바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 당시의 ‘후진’이라는 용법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담지한 표현이었다. 즉 ‘후진’은 저개발(underdeveloped)가 아니라 이미 ‘개발도상’(developing)을 의미했다.¹⁸⁸⁾ 후진국의 과제는 근대화 이론이 강조하는 경제발전에만 함몰되어 있지도 않았다. 후진국 지식인의 과업은 외국인의 강압통치·식민주의·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이룩하는 것, 후진국의 선진국의 인종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 저개발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비참을 해결하는 것이었으며, 경제발전의 문제는 세 가지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¹⁸⁹⁾ 후진국의 도전은 ‘빵 없는 자유’를 의미하는 자본가 블록도 아니고 ‘자유 없는 빵’을 의미하는 공산 블록을 모두 거부하는 ‘빵과 자유를 한꺼번에 제공’하고자 하는 도전이었다.¹⁹⁰⁾

비록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민족일보』를 위시한 혁신 세력이 추구했던 대미 자주, 중립화통일론 등은 정치적으로 억압되었지만, 박정희 군

187) 김수영, “C. 라이트 밀즈 저 「들어라 양키들아.」, 『사상계』, 1961년 6월호, p.377.

188) 역사학자 이기백이 ‘정체성’과 ‘후진성’을 분별하여, 한국사를 설명하는 틀로 후진성을 채택한 것도 이 때였다. 이기백, 『국사신론』, (서울 : 태성사, 1961). 역사학자 이기백은 아시아 정체성론은 서세동점의 결과물이라고 보았다. 이기백은 비트포겔을 위시한 아시아 정체성론이 동양사회가 서양사회와 비슷한 수준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예측했다. 이기백, 『국사신론』, (서울 : 태성사, 1961). pp.8-9.

189) 고영복, “선진국의 지식인과 후진국의 지식인,” 『사상계』, 1961년 9월호, p.61. 이는 당대에 널리 회자되던 맥마흔 볼의 주장이었다. 맥마흔 볼은 오늘날의 아시아 혁명을 추동하는 세 가지 힘을 강조했다. 첫째는 ‘외국인의 정치적 지배에 대한 반항’으로 민족자결과 완전자주의 요구이고, 둘째는 부의 불평등에 대한 반감이 드높아진 ‘민중의 사회적·경제적 반항’이며, 셋째는 ‘인종적 반항’으로 표현된 유럽에 대한 아시아의 반항이었다. 즉, 아시아의 운명은 아시아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아시아에 신생국가가 등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유럽의 목적을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William Macmahon Ball,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East Asia*, (Corlton : Melbourne University Press, 1952), p.1.

190) “카스트로 독재는 종말을 고할 것인가,” 『동아일보』, 1961년 4월 10일자.

사정권도 아래로부터 분출하는 민족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1963년의 선거전은 이를 잘 보여준다.

윤보선 후보가 나세르를 찬양했다는 이유로 박정희 후보를 비판하자, 박정희는 자신의 민주주의는 ‘민족적 민주주의’며, 윤보선의 공격을 사대주의이자, 외세의존주의,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¹⁹¹⁾ 실제로 박정희는 서구적 민주주의에 실망한 민족주의 지식인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¹⁹²⁾ 김종필은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주의와 민족적 민주주의의 차이는 무엇이나는 대학생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인도네시아나 나세르의 민족주의와 우리 민족주의의 차이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드골 대통령은 불란서를 위해 위대한 것이지, 우리를 위해 위대한 것은 아니다.”¹⁹³⁾ 이상을 추구하는 공간이 다를 뿐, 기본적인 입장은 같다는 주장이었다.¹⁹⁴⁾ 실제로 박정희는 1963년 선거 공약으로 후진국 정상회담의 개최를 내세웠다. ‘외세’로 대표되는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후진국의 문제를 공동의 논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은 그야말로 ‘기발한 것’이었다.¹⁹⁵⁾ 이는 미국에 전면적으로 의존했던 이승만·장면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차이기도 했다.

김상협은 한국 지성계에 인도네시아의 교도민주주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소개했다. 서구의 선진 국민들에게는 이미 자유가 있고 발언권이 있고 풍족한 식량, 텔레비전, 자동차까지 있으니 구태여 과격한 혁명이나 급진적인 혁신이 필요 없는 반면, 인류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후진지역 주

191) 1963년 대선을 둘러싼 사상논쟁의 구도에 대해서는 오제연,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분화 : ‘민족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지역과 전망』, 16권, 2007, p.301.

192) 당대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기대는 “4·19 그날의 함성을 회고한다,” 『신사조』, 1962년 4월호.

193) “한민족의 주체성 확립하자,” 『동아일보』, 1963년 11월 6일자.

194) 박정희 정권이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식의 교도민주주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일종의 교도민주주의, 박의장이 채택할 듯,” 『동아일보』, 1962년 6월 3일자.

195) “실현성 있는 공약인가 : 박정희씨와 공화당의 선거공약(하),” 『경향신문』, 1963년 10월 22일자. 후에 후진국 정상회의는 196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각료회의(ASPAC)로 실제화된다.

민에게는 자유도 발언권도 없고 식량조차 없으니,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¹⁹⁶⁾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776년의 미국 혁명은 독립혁명, 1789년의 프랑스혁명은 정치혁명, 1917년의 소련혁명은 사회혁명에 불과했다. 인도네시아의 혁명은 이 모든 혁명을 합친데다가 문화혁명, 인간혁명까지도 가미한 '다면종합혁명'을 지향하고 있었다.¹⁹⁷⁾ 이는 수카르노의 발언이었지만, 사실 박정희 정권이 말하는 5·16 혁명정신과 일정하게 상통했다.

196) 김상협, 『기독교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교도민주주의』, (서울 : 지문각, 1963), p.239.

197) 김상협, 『기독교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교도민주주의』, (서울 : 지문각, 1963), p.239.

III. 타자로서의 아시아

1. 다원화 세계와 한국

1) 현실주의 국제정치학과 한국의 지성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50년대와 60년대 초에 있어 확장된 세계지평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인식들은 아시아 민족주의였다. 이 시기 한국인들이 바라본 당대의 국제질서는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가들의 대두로 이루어진 다원화 세계였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식인과 정치인을 막론하고 한국인들은 이제 신생국가들에게 공산주의라는 낙인을 남용하지 않았다.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 한국의 심리적 거리는 매우 근접해 있었다. 아프리카인 지도자들의 육성과 프로필 등은 60년대 중반에 이르면, 한국 사회에 직접 소개되기도 했다.¹⁹⁸⁾

그러나 ‘냉전의 전초기지’였던 한국에서 아시아 민족주의에 대한 승인이 곧바로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에 대한 참여나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시기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주의와 한국 민족주의의 최대공약수는 ‘자주’에 대한 갈망에 가까웠다.¹⁹⁹⁾ 한국이 1945년 이후 얻은 것이라고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뿐이며, 한국은 국제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확보하지도 못했다는 것은 공통의 정세인식이였다.²⁰⁰⁾ 세계 속에서 ‘민족의 위선’을 혁명적으로 고양시키는 것은 박정희 정권과 혁신 세력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것이었다.²⁰¹⁾

자주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지성계에서 중요하게 대두된 문제는 국가이익에 대한 강조였다. 이데올로기와 대비되는 현실 외교의 가능성이 이승만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50년대 후반부터 논의되

198) “신생국지도자의 정치이념,” 『세대』, 1965년 2월호. ; “아프리카 지도자 신상일람 표,” 『청맥』, 1964년 8월호. ; “꿈틀거리는 신생국가들,” 『세대』, 1965년 7월호.

199) “좌담회 : 한국의 근대화와 내셔널리즘,” 『경향신문』, 1965년 1월 1일자.

200) 서동구, “세계 속의 한국,” 『경향신문』, 1964년 1월 4일자.

201) 장준하, “권두언,” 『사상계』, 1959년 7월호.

었다면, 이제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언어인 ‘내셔널·인터레스트’(국가이익)를 기민하게 추구하자는 주장이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식 국제정치학의 일방적 전파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54년에 조효원은 자신이 미국 유학시 참고했던 여러 정치학 저서들을 요약하여 한국 지성계에 소개한 바 있었고, 여기에는 한스 모겐소의 이론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²⁰²⁾ 그러나 한스 모겐소를 중심으로 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은 의외로 한국 지성계에서 곧바로 압도적인 위상을 구축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제정치는 세력균형과 같은 구시대의 원리(세력정치나 권력정치)보다는,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수립된 국제연합이나 국제법을 중심으로 이해되기도 했다.²⁰³⁾ 당대 한국인들은 외교가 단순히 이익의 추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몇 가지 도덕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²⁰⁴⁾ 그 도덕원칙은 철저히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양 진영 논리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1950년대 후반의 ‘전후의 종언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국제정치관은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한스 모겐소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은 한국 지식인들에 의해 비로소 재발견되었다. ‘현실주의’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강요된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폭로하는 해방의 지식으로 기능했다. 현실주의에 입각할 때, 미국과 소련의 충돌과 신생국가들의 중립 노선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가능했다.

1959년 11월 12일 “권력정치의 지적도(地籍圖)”를 다루는 『사상계』 좌담회가 개최됐다. ‘권력정치’란 개념은 당대에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202) 조효원, 『국제정치학』, (서울 : 문종각, 1954).

203) 실제로 1950년대 『사상계』에는 국제정치를 힘의 정치보다는 국제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한 논의가 많았다. 정태섭이 쓴,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정의,” 『사상계』, 1957년 2월-3월호가 대표적이다. 법학자 이건호의 글 “국제사회에서의 권력”(『사상계』, 1956년 2월호)도 국제법에 의한 지배라는 이상에 무게를 두었다.

204) 도로시 포스딕크, 이원우 옮김, 『외교정책의 기초이론 : 상식과 세계사정』, (서울 : 월기사, 1955), p.5. 이원우가 번역한 또 다른 국제정치학 교과서인 『국제정치론』은 국제정치가 권력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의해 추동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W. 프리이드먼, 이원우 옮김, 『국제정치론』, (서울 : 진명문화사, 1955).

있어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좌담회는 그 제목부터 한국인들이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변화된 인식들을 새로운 개념으로 포착하고 있었다.²⁰⁵⁾ 이 좌담회는 “미국만 견재하면 대한민국도 견재할 것”이라 생각하는 통념을 비판하며 한국의 입장에서 국제문제와 국제조류를 이해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정치학자 차기벽은 “우리의 입장에서 (국제정치를) 가능한 좀더 현실적인 각도에서 보아야 할 필요성”을 피력했다.²⁰⁶⁾ 그는 “아무래도 국가·국민의 움직임은 자기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그것은 현실에서는 ‘권력정치’로 나타나며, 이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동맹과 힘에 의한 외교, 힘에 의한 경제정책이 있다고 설명했다.²⁰⁷⁾

이후 좌담회에서는 외교의 최종심급이 이데올로기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인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차기벽은 이데올로기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소련 역시도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아닌 러시아로서의 내셔널·인터레스트에 따라 움직인다고 파악했다.²⁰⁸⁾ 그는 소련의 해외 원조 역시도 러시아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에만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불필요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²⁰⁹⁾

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민병기는 내셔널·인터레스트를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운용된다면, 반공을 주축으로 하는 동남아시아조약기구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내에서의 각 개별 회원국의 이해관계는 어떤 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참석자들에게 질문했다. 그는 개별 국가의 희생이 있어야 할 불리한 입장에서라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국제정치적인 구속—지금의 표현으로는 ‘연루’—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전의 군사동맹은 대부분 그 수명이 짧았는데, 냉전 상황 속의 동맹관계는 국가이익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어서 이와 같은

205) 이 좌담회는 민병기가 사회를 봤으며, 이원우, 차기벽, 신상초가 참석했다.

206) “좌담회 : 권력정치의 지적도,” 『사상계』, 1959년 12월호, p.22.

207) “좌담회 : 권력정치의 지적도,” 『사상계』, 1959년 12월호, p.22.

208) “좌담회 : 권력정치의 지적도,” 『사상계』, 1959년 12월호, p.24.

209) 미국의 경제원조를 미국의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논한 글로는 조동걸, “원조는 미국을 위한 것이다,” 『자유세계』, 1958년 6월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었다.²¹⁰⁾

민병기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던 배경에는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의 동맹론이 있었다. 한스 모겐소에 따르면, “동맹은 기본적으로 편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자체의 역량이 외부의 원조 없이도 충분한 경지에 이르게 되거나 동맹으로 부과된 짐이 기대하던 이익을 초과하여 과중하게 될 때에는 그 대부분을 포기했다.²¹¹⁾ 민병기의 질문은 한국의 맥락에서 볼 때,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으로 연결된 미국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좌담회에서 제시되지 못했다. 국제정치가 권력정치로 이루어졌다는 논의는 공산 세계를 분석하는 데에는 유용한 것일 수는 있어도, 미국과 한국을 분석하는 데에는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²¹²⁾

2) 참조대상으로서 영국과 프랑스

4·19 이후 지성계에 있어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 지식인들은 민주주의 발달사를 중심으로 한 1950년대의 구미정치사 연구에서 벗어나, 1960년대 아시아·아프리카 신생 제국의 근대화와 민족주의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²¹³⁾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 아시아·아프리카를 이해하기 위한 일차적인 시각은 영국과 프랑스를 투과하면서 매개되었다. 이 두 국가는 같은 자유 진영 국가이지만, 미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신생국가들의 행위를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한국 지식인들은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의 행동 동기를 모두 상대화시켰다. 특히 이는 독자외교로

210) “좌담회 : 권력정치의 지적도,” 『사상계』, 1959년 12월호, p.26.

211) 한스 모겐소, 민병기 옮김, “동맹론,” 『사상계』, 1958년 7월호, p.197. 한스 모겐소의 ‘권력정치’ 개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사회에 소개되었다. 한스 모겐소, “국제정치학의 이론과 실제,” 『법정논총』, 7권, 1958.

212) 동맹관계와 자국의 국가이익을 조화시키는 문제는 1959년 말의 핵심적인 국제정치적 문제였다. “동맹관계와 나쇼날 인터레스트,” 『동아일보』, 1959년 12월 6일자.

213) 차기벽, “저작집을 내면서,” 『차기벽 저작집 1 : 근대화정치론』, (파주 : 한길사, 2005), pp.8-9.

대표되는 드골의 프랑스와 현실주의 외교의 대명사인 영국을 참조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두를 통해 확대된 세계지평이 어떤 식으로 변모해가는 지를 잘 보여준다.

1960년 2월 차기벽은 『사상계』에 “영국과 세력균형정책”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 글의 목표는 “미·소는 국제무대의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격인 영국의 노련한 연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력균형정책의 제물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지만, 영국의 외교원칙인 ‘세력균형’을 사실 그대로 고찰하겠다”고 말했다.²¹⁴⁾ 그는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의 최고 목표는 평화유지가 아니라,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보전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영국의 균세정책이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었다.²¹⁵⁾ 당대 많은 논자들이 영국의 대소 접근이나 냉전 완화 노력을 비판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벽은 이를 “미·소 간의 균세를 유지하면서 영국의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파악했다. 냉전 완화는 영국의 국방부담 경감과 무역진흥이라는 이중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었다.²¹⁶⁾

이는 지금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인식이지만, 당대의 관점에서 상당한 관점의 전환이 아닐 수 없었다. 1950년대에 영국은 한국 지성계에서 미국과 대비되는 철저한 ‘현실주의 국가’로 이해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²¹⁷⁾ 차기벽이 영국의 외교가 ‘비위에 거슬린다’고 말한 것은 허언이 아니었다. 영국은 자국의 협소한 이익을 위해서 중공과 통상을 유지하며 자유 진영의 대오를 어지럽혔다. 또 영국은 실리를 빌미로 ‘양면외교’를 펼쳤는데, 이는 한국인의 눈에는 사실상의 대공유화책으로 인식되었다.²¹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영국은 비판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영국관은 1960년대에도 이어졌다. 한 신문 기사의 표현처럼, 미국의 외교가 이상주의를 추구한다면, 영국은 이해타산을 따지는 국가였다.²¹⁹⁾

214) 차기벽, “영국과 세력균형정책,” 『사상계』, 1960년 2월호, p.162.

215) 차기벽, “영국과 세력균형정책,” 『사상계』, 1960년 2월호, p.166.

216) 차기벽, “영국과 세력균형정책,” 『사상계』, 1960년 2월호, p.171.

217) 주요한, “미영외교의 차이,” 『경향신문』, 1954년 7월 4일자.

218) “쳐어칠 경의 은퇴와 금후의 기대,” 『경향신문』, 1955년 3월 25일자 사설.

219) “미국외교는 원칙을 견지하는 셋님같은 점이 있어서 포츠담 회담 이래 많은 국제

하지만 1960년대 냉전의 원리는 이미 ‘이데올로기 우위’에서 ‘현실 우위’로 대체되어 가고 있었다. 1960년 9월 27일에 개최된 한국외교 좌담회는 이와 같은 전환을 잘 보여준다. 이미 이 맥락에서 ‘내셔널·인터레스트’는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본 전제가 되었다.²²⁰⁾ 또 다시 좌담회 사회를 맡은 민병기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윤리관과 국내사회의 윤리관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국가적인 관계에서의 거래는 냉철한 이익 그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거래되는 것이고, 개인 간에서는 의리라든지 피차에 가지고 있는 인연 같은 것이 지주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가령 미국한테 신세를 졌다, 또 미국은 우리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관념 이것은 장차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끌고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중략)… 더 나아가서 오로지 내 국가만이, 즉 나만이 나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나만이 나의 이익을 도와서 국제사회에서 움직이는 주체가 되는 것을 명심하고 다른 나라가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적으로 희생적으로 도와준다거나 생각해준다는 관념은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후략)”²²¹⁾

이 가운데 영국에 대한 평가는 차기벽의 글처럼 서서히 중립적인 것으로 변모했다. 차기벽을 포함한 한국 지식인들에게 ‘국가이익’을 공공연하게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의 내셔널·인터레스트에 대해 초당파적인 합의가 가능한 영국은 1960년 이후 ‘새로운 외교’를 추구하는 한국이 배워야 할 대상이 되었다.²²²⁾

협정에서 불의의 강타를 맞본 적이 비일비재하다. 이 점 영국외교는 이치가 아니라 현실의 이해를 지키는 철저한 현실주의 외교라고 볼 수 있고 현실이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곧 어떠한 이치도 버리고 현실을 버리는 융통무애한 탄력성을 가진다.” “여적,” 『경향신문』, 1962년 6월 18일자.

220) “한국 외교의 조건과 과제,” 『사상계』, 1960년 11월호. 이 좌담회에는 박준규(민의원), 조순승(연세대 정법대 교수), 정일영(서울대 법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민병기가 사회를 보았다. 이 회의에서 이승만 시대의 외교는 “땅에 뿌리를 붙이지 않은 외교”, “이상만을 추구하다가 현실을 놓친 외교”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대담자들이 한국인 자신도 한국을 잘 몰랐다고 자성하는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221) “한국 외교의 조건과 과제,” 『사상계』, 1960년 11월호, p.40.

222) 민병기, “새로운 외교의 구상,” 『사상계』, 1960년 6월호, p.231. ; 김재완. “영국의 전통에서 무엇을 배울까.” 『신사조』, 1962년 2월호.

영국의 실리 외교는 그 자체만으로 한국인들에게 별다른 실천적 함의를 지니지 못했다. 이는 좀 더 적극적인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 무엇이었다. 이를 구체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보여준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었다. 한국인들이 볼 때, 드골은 국가이익과 민족주의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인물이었다. 드골은 ‘골리즘’을 표방하면서, 프랑스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다원화된 국제질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드골은 아시아-아프리카의 연대운동과 구분되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을 통해, 제3세계권을 형성할 구상을 갖고 있었다.²²³⁾ 한국인들은 드골의 독자노선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이었다.²²⁴⁾ 드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대적으로 약소국으로 전락한 프랑스의 영광을 되살리고, 도움을 받은 처지이면서도 비굴하지 않게 조국의 ‘위신’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한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²²⁵⁾

하지만 핵을 보유했으며, 지역 강대국인 드골의 프랑스와 ‘약소국’ 한국의 위상은 같을 수가 없었다. 드골의 외교는 한국 외교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꿈’이었으나,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도 ‘꿈’이기도 했다. 특히 한국인들은 드골의 아시아 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했다.²²⁶⁾ 주요한은 “드골이 던진 중립화론의 파문 : 다중심 세계의 도래”라는 글을 통해 드골의 세계구상을 비판했다. 그가 볼 때, 다중심 세계의 등장은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의 도래였다. ‘춘추전국시대’에 중립국은 의미가 없었다. 중립국은 오히려 그 개념부터가 동서 냉전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었다.²²⁷⁾

223) 드골의 제3의 세계론은 『사상계』에 여러 차례 소개된다. 정인량, “미국과 맞서는 통일 유럽 : 케네디 대 드골, 아데나워,” 『사상계』, 1963년 8월호. ; “드골의 제3세계상,” 『사상계』, 1965년 4월호. ; 정종식, “드골 제3세계의 꿈,” 『사상계』, 1965년 7월호.

224) 드골의 NATO 정책에 대해서도 『사상계』는 프랑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용인될 수 있는 정책이라 소개한다. “드골이 일으킨 나토의 파문,” 『사상계』, 1959년 1월호, pp.146-150.

225) 송건호, “‘위대한 프랑스’의 영광된 퇴진 : 드골의 인간과 현실,” 『사상계』, 1969년 7월호, pp.124-129. 송건호는 드골 평전을 집필하기도 했다. 송건호, 『드골 프랑스의 영광』, (서울 : 탐구당, 1965).

226) “드골이 구상하는 세계,” 『경향신문』, 1965년 9월 11일 사설.

227) 주요한, “드골이 던진 중립화론의 파문 : 다중심 세계의 도래,” 『사상계』, 1964년 4월호, pp.134-135. 다중심 세계에서 중립국의 불가능성을 논의한 글로는 민병기,

또 주요한은 설령 드골의 중립화 제안이 성공하더라도, 아시아와 유럽은 전혀 다른 역사적 장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라오스 중립화 안이 결국 공산화로 귀결된 것처럼, 빈곤한 아시아의 경우 중립은 공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²²⁸⁾

이 주장만 했다면, 이는 1959년 좌담회에서 주요한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차이를 대별할 수 있는 대목은 바로 뒤에 등장한다. 그는 동서 냉전 시기 성립한 오스트리아 중립화안²²⁹⁾이나 핀란드 중립화 안²³⁰⁾보다는, 다원화된 시대에서는 스위스나 벨기에 형 중립화 안이 더 적합하다고 논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위치한 한국의 경우,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스위스보다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벨기에 형 중립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정세 판단이었다.²³¹⁾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중립주의의 선풍’을 일관되게 비판하면서도, 주요한의 결론은 결국 외세에 의존하기보다는, 유동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잘 버텨낼 수 있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는 점이다.²³²⁾

이는 중립국이라는 존재 자체를 양 진영 사이에 포섭되지 않은 불온한 존재로 파악했던 1950년대의 중립국 인식과는 결을 달리 하는 태도였다.²³³⁾ 이 대목에서 당대 중립주의 선풍의 위력을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미·소의 세계정책과 ‘중립’ : 다원화된 세력관계에서 ‘중립’은 고립주의를 의미한다.” 『사상계』, 1964년 4월호.

228) 주요한, “드골이 던진 중립화론의 파문 : 다중심 세계의 도래,” 『사상계』, 1964년 4월호, pp.135-136. 중립국을 표방했던 라오스의 공산화에 대해서는 “명드는 라오스의 중립,” 『사상계』, 1963년 5월호.

229) 오스트리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경험이 한국과 유사했기 때문에 당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 지식인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이광규, “중립국 : 오지리,” 『사상계』, 1965년 10월호.

230) 랄프 퇴릉렌, 전영철 옮김, “핀란드의 국제정치상의 지위,” 『사상계』, 1961년 10월호 ; 탁희준, “핀란드의 자주성·독립성,” 『사상계』, 1965년 2월호.

231) 주요한, “드골이 던진 중립화론의 파문 : 다중심 세계의 도래,” 『사상계』, 1964년 4월호, pp.139-140.

232) 조순승의 인식도 이와 유사하다. 조순승은 중립화를 이루자는 주장이 문제가 아니라, 중립화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이 한국에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결국 중립화로 귀결되든 그렇지 않든 국력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조순승, “한국 중립화는 가능한가,” 『사상계』, 1960년 11월호, p.46.

233) 김예림은 『사상계』가 1950년대에는 ‘저들의 중립은 문제다’라고 선언하는 정도였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지성계에서 겉으로는 중립국을 비판하지만, 중립국을 유럽형과 아시아형으로 나눈 후, 아시아형보다는 유럽형을 갈망하는 태도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꼭 한국이 중립국이 되지 못하더라도, 역량을 키우고,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줄타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나타났다는 점도 흥미롭다.

앞서 소개한 주요한 역시, 약소국이지만 유동적인 국제 정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국가를 소망했다는 점에서 1950년대식의 인식과 일정한 결별을 선언하고 있었다. 1964년 9월 『사상계』에 캄보디아 국왕 시아누크의 1958년 선언 “캄보디아와 중립의 필연성”이 전재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의 전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²³⁴⁾ 시아누크의 이 글은 약소국이 양 진영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글이었다. 이제 다원화된 세계질서를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용인될 수 있었다.

3) 국제 민주주의와 국가이익의 수단으로서 아시아 민족주의

아시아 민족주의 역시 국제 민주주의와 국가이익의 틀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차기벽은 영국에게 세력균형 정책이 있다면, 신생국가들에게는 민족주의가 있다고 파악했다. 현재 신생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의 양상은 신생국 나름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었다.²³⁵⁾

최석규는 서구의 프랑스 혁명이 세계 각국의 저마다 국내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끼쳤으나, ‘국제사회의 정의’에 거의 공헌한 바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국내의 민주주의와 다른 민족에 대한 제

다면,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중립화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형태로 『사상계』의 담론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예림, “1950년대 남한의 아시아 내셔널리즘론 : 동남아시아를 정위하기,” 『아세아연구』, 55권 1호, 2012, p.158.

234) 노르돔 시아누크, “캄보디아와 중립의 필연성 :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빨력의 반대 빨력에 원조를 요청할 것이다.” 『사상계』, 1964년 9월호.

235) 국가이익을 본격적으로 논구한 김영준 역시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립주의 제국의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를 민족주의의 추구로 이해한다. 김영준, 『국가이익과 국가정책』, (서울 : 신명문화사, 1962), pp.128-134.

국주의란 너무나 상반되는 것이기에, 이 둘을 동시에 신봉한다는 것은 서양사의 ‘근본적인 모순’이었다.²³⁶⁾ 그런 의미에서 현금의 세계정세에서는 국내 사회에만 적용되었던 민주주의가 국제사회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필연이었다.²³⁷⁾ 차기벽은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영국 내부의 민주주의를 확립한 것처럼,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주의는 “국제적으로는 아·아의 신생 제국이 위신과 평등의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려는 발돋움 이요,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정력을 총동원하여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움직임”²³⁸⁾이라 정리했다. 그는 민족주의가 국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²³⁹⁾

“오늘날은 미·소 양대국에 의한 전후 초기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완화되고, 동서양 진영 내에서 각각 권력 중심의 다원화 경향이 진전되고 있다. 이는 각 진영 내에서 국가 간의 거리가 제거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아·아 신생 제국도 안으로는 민주적이요 밖으로는 국제적인 건전한 민족주의를 육성함으로써 국가 간의 거리를 제거해야 한다. 진정한 국제 민주주의는 평등한 민족국가를 전제로 하는 만큼 건전한 민족주의를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지름길이다.”²⁴⁰⁾

민주주의의 관점을 투사하여,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혁명을 이해하는 대목은, 이후 차기벽의 글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다.²⁴¹⁾ 그러나 그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양당제 하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로 국한되었다.²⁴²⁾ 바꾸어 말하면, 그에게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주의 자체는

236) 최석규, “사대주의와 새로운 국제사회,” 『신세계』, 1963년 6월호, p.79.

237) 최석규, “사대주의와 새로운 국제사회,” 『신세계』, 1963년 6월호, p.82.

238) 차기벽, “전후 민족주의의 방향,” 『사상계』, 1963년 12월호, p.64.

239) 차기벽과 유사하게 아시아 민족주의와 휴머니즘을 연결시키고 있는 시도도 있다. 송건호, “아시아 민족주의와 휴머니즘적 자세,” 한국휴머니스트회 엮음, 『휴머니즘과 현대사상』, (서울 : 범조사, 1961), pp.355-366.

240) 차기벽, “전후 민족주의의 방향,” 『사상계』, 1963년 12월호, p.69.

241) 차기벽, “1961년 국제정세 전망,” 『대한매일신문』, 1961년 1월 1일자.

242) 차기벽은 다른 글에서 ‘민족혁명’을 국제 민주주의를 위한 것으로 독해했으며, “미·소 간의 진영대립이 마치 양당제 하의 민주국가에서 2대 정당 상호 간의 경쟁과 견제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과 같이 신생 제국의 독립과 권리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차기벽, “신생 제국의 위대한

국제 권력의 또 하나의 세력권이라기보다는, 양당제 체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주체’에 머물렀다. 그가 일관되게 민족주의 운동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닌 ‘노동조합 운동’에 비유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었다.²⁴³⁾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을 대체하는 혁명을 의미한다면, 노동조합 운동은 부르주아 혁명 아래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제 민주주의와 국가이익은 별다른 충돌 없이 통합되었다. 이는 차기벽이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탄압이 마치 ‘노동조합 파괴 운동’이 그러하듯이, 긴 역사의 안목으로 보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노동조합 운동이 본래 지니고 있는 변혁성 자체를 의도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했다.²⁴⁴⁾

하지만 이와 같은 언설이 지닌 의의는 분명히 존재했다. 노동조합 운동이든, 국제 민주주의 운동이든 간에 이 모든 언설들은 약소국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언명을 함축하고 있었다. 또 현실적으로는 약소국이지만, 나도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확인은, 단순한 자기 확인을 넘어서, 다른 국가들과 나도 동등하다는 상상을 가능케 했다. 후에 좀 더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는 논자들이 요구한 지점이 바로 이 동등성의 인정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왜 서구 국가들은 자신들과 동등한 아시아 민족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냐는 것이었다.

김기두는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주의가 과거의 서구나 일본의 민족주의와 달리, 국제연합의 깃발 아래 평등하고 병존하는 민주적인 민족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기두에게 있어, 민족주의는 세계주의로 나아가는 ‘첩경’이었다. 그는 쑨원의 삼민주의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성.” 『사상계』, 1963년 3월호, p.433

243) 차기벽, “무엇이 국가이익이나 : 국가이익과 그 개념.” 『사상계』, 1966년 3월호. 이 글에서는 차기벽은 양극화된 냉전 시기를 봉건 영주들이 미·소는 절대 군주 아래 집권하던 절대주의 시대, 미·소의 원조로 부흥 발전한 영·불·독·일, 그리고 중공이 제각기 독자적인 입장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려 드는 시대는 부르주아 혁명 시대, 부르주아에 대항하여 내셔널리즘의 집단화를 모색하는 아·아 신생국들의 움직임은 노동조합 운동으로 비유하고 있다. pp.92-93.

244) “후진국의 민족주의.” 『경향신문』, 1965년 11월 1일자.

“열강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상(민족주의)를 갖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일종의 사이비 도리를 떠들어 세계주의를 주장하여 우리를 선동한다. 그들은 말한다. 세계의 문명은 진보를 요하고 인종의 안광은 원대하여야 한다. 민족주의는 너무나 편협하여 부적당한 고로 세계주의를 주창하여야 한다고, 근래 우리나라 청년들도 신문을 주장하여 민족주의에 반대하나 이것은 열강의 감언에 빠진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우리들 낙후된 민족이 주장할 것이 아니다. 우리들 낙후된 민족은 먼저 우리 민족의 자유평등의 지위를 회복하여야 비로소 세계주의를 운운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세계주의는 민족에서 탄생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계의 발달을 원한다면 민족주의를 강고히 하여야 한다.”²⁴⁵⁾

즉, 김기두가 볼 때, 세계주의를 빌미로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서구의 행태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였다. 송건호는 “내셔널리즘을 그토록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백안시하는 백인들이 내셔널 인터레스트 추구에는 왜 그렇게도 집요하고 재빠르고 냉혹하기까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신생국의 민족주의와 유럽국제정치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며 다만 이 차이는 역사적 조건과 단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파악했다. 또 선진국에서 후진국의 내셔널리즘 의식을 경원하는 것은 송건호가 볼 때, 내셔널리즘 자체가 시대역행적이라기보다는, 후진국에서의 그러한 각성이 다름 아닌 선진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와 상충되기 때문이었다.²⁴⁶⁾

4) 1960년대 중반 아시아·아프리카 타자화의 양상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가의 대두를 영국과 프랑스라는 프리즘을 통해 이해한 한국 지식인들은 이제 ‘실리’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245) 김기두, “신생국가와 새로운 민족주의,” 『신세계』, 1963년 9월호, pp.110-111.

246) 송건호, “오늘의 유럽,” 『송건호 전집 7 : 한국민족주의의 탐구』, (파주 : 한길사, 2002), pp.412-413. 이 글은 1968년 “1968년 구라파의 사조”라는 제목으로 『정경연구』 47권에 발표된 글이다. 송건호가 이와 같은 인식을 선취할 수 있었던 것은, 당대의 상황을 신식민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었다. 송건호,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 보이지 않는 손이 더 무섭다,” 『사상계』, 1963년 3월호.

추진하라고 주문하기 시작했다. 1964년 『청맥』 창간호에는 미국과 프랑스의 외교정책을 다루는 글이 게재되었다. 서동구는 미국의 이익이 언제까지나 프랑스의 이익은 아니라는 드골의 말을 인용하면서, ‘실리외교’라는 개념을 소개했다.²⁴⁷⁾ 중공을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프랑스나, 유고슬라비아와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는 미국의 모습은 이들이 내세운 냉전 이데올로기가 결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었음을 폭로하는 생생한 증거였다.²⁴⁸⁾ 자유 진영, 공산 진영, 아시아·아프리카 진영의 모든 국가들이 ‘이즘’보다 경제적 국리(國利)를 찾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가진 게 없이는 자기의 주견이나 자주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²⁴⁹⁾

자유 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서 냉전은 종식되었다.²⁵⁰⁾ 작금의 세계는 ‘다원화된 국가절대주의 시대’였다.²⁵¹⁾ 임방현은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양대 동맹체제였던 전후 전기 알타 체제는 종식되고, 전후 후기의 ‘열강시대’가 개막했다고 파악했다. 이 새로운 세계질서는 여러 국가들이 병립하는 균형 체제였다.²⁵²⁾

이는 세계 외교 양상의 변화로 설명되기도 했다. 냉전 초기에 워싱턴과 모스크바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세계의 외교중심지는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포함하여, 파리, 런던, 동경, 카이로, 자카르타와 알제가 되었다.²⁵³⁾ 특기할 것은 ‘실리’와 ‘국가이익’이 강조되면서, 만국을 타자화하는 발상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추구하는 민족주의나 중립주의는 이제 일종의 ‘관념상의 유희’로 인식되었다.

247) 서동구, “미국과 불란서의 외교정책,” 『청맥』, 1964년 8월호, p.86.

248) 서동구, “미국과 불란서의 외교정책,” 『청맥』, 1964년 8월호, p.87. ; 같은 문제 의식에서 미국의 대외팽창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추적하는 특집이 『청맥』에 게재된다. “\$와 해병대,” 『청맥』, 1965년 7월호 특집.

249) “‘이즘’보다 국리 찾는 동구위성국,” 『세대』, 1964년 7월호, pp.275-277.

250) 최종기, “종막으로 가는 양극시대,” 『청맥』, 1965년 3월호, pp.30-45.

251) 서동구, “미국과 불란서의 외교정책,” 『청맥』, 1964년 8월호, p.93.

252) 임방현, “한국민족주의전망,” 『청맥』, 1965년 11월호, p.107. 전후 후기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이를 다룬 『경향신문』의 특집이 있다. “전후 후기 새 역사의 문턱 : 20년 국제권력의 변천”은 1. 냉전 등식의 변질 2. 서방 동맹의 동요 3. 공산운동의 분화 4. 신생민족주의의 향방 5. 현대 분쟁의 저변 6. 앞으로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253) 서동구, “국제적 고아로서의 출발,” 『세대』, 1965년 6월호, pp.56-61.

“이들 (아시아·아프리카) 제국이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든 간에 그것이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것은 진정한 자주독립, 경제번영, 국가안전보장, 국위선양 등을 내실로 하는 국가이익의 실현이다. 제2차 대전 후의 초기에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가졌던 이상주의적인 일부 신생국 지도자들도 냉혹한 국제권력정치의 비정을 통감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국가이익에 대한 각성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과 소련을 각기 중심으로 하는 양극화의 세계가 중·소 대립, 불란서의 제3세력론 등으로 이른바 ‘다원화의 세계’로의 변화함에 따라서 그러한 각성이 가일층 촉진되었던 것이다.”²⁵⁴⁾

이제 자유 진영의 우방이었던 미국도 상대화되었다. “국가이익에 따라서는 어제의 적도 오늘은 우방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⁵⁵⁾ 유홍렬은 “한국근세사와 미국”을 통해, 동천(후에 동덕모로 개명)은 “한일합방과 미국의 책임 : 구한말의 한·미·일 외교”를 통해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역사적 비판을 시도했다. 특히 한국이 기대한 것과 달리,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기한 것이 미국에 대한 주요한 비판이었다. 이는 한일회담을 둘러싼 당대의 맥락에서 여러 차례 환기되는 미국의 ‘월죄’이기도 했다.²⁵⁶⁾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미국의 대한정책은 사실상 없었다는 급진적인 인식이 나타나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문제를 그 자체로서 보지 않고, 대일관계나 대중관계의 이해관계에서 파생된 하나의 부수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²⁵⁷⁾

같은 호에, 차기벽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한국과 일본”을 게재했다. 그는 일본과의 국교수교를 추진하는 미국의 입장이 한국의 기본적인 국가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그 배후에 존재하는 한미관계를 재검

254) 이원우, “국가이익이나 이데올로기냐?,” 세계사 출판부 엮음, 『신생국 강좌 1 : 신생국의 이데올로기』, (서울 : 세계사, 1966), p.117.

255) 송인복, “아메리카인에게,” 『청맥』, 1965년 8월호, p.95. 같은 호에 실린 “코리아와 양키”는 해방 후 미군정기부터 1965년까지 한국인과 미국인 간에 벌어진 주요 사건들을 개관하고 있다. “코리아와 양키,” 『청맥』, 1965년 8월호.

256) 유홍렬, “한국근세사와 미국 : 한·미수교 90년,” 『사상계』, 1965년 9월호. ; 동덕모, “한·일합방과 미국의 책임 : 구한말의 한·미·일 외교,” 『사상계』, 1965년 9월호.

257) 좌담회, “한국과 미국 : 한국부재의 대한관을 비판한다,” 『사상계』, 1965년 9월호, pp.120-121.

토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현 발달단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나라도 자국의 국가이익을 초월할 수 없으며, 국제협조는 한낱 허황된 꿈”이라고 일갈했다. 한국은 “자유 진영이라는 유토피아니즘”에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²⁵⁸⁾ 이는 ‘유토피아니즘’을 비판하는 한국 현실주의자의 탄생 선언이었다. 1959년 좌담회 당시, 동맹 진영의 이익과 개별국가의 이익이 상충할 수도 있다는 민병기의 지적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차기벽은 전체의 이익과 부분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미국은 아시아 냉전을 일본과 분업화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일본과 현격한 경제적 격차를 지니고 있는 한국이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하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²⁵⁹⁾ 또 그는 제 아무리 약소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민족자주독립’이라는 기본적인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강국의 목표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국가이익’은 단순히 관념의 차원에서 국제정치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외래 개념인 ‘내셔널·인터레스트’가 아니라, 약소국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당위론적 목표가 되었다. 이제 리얼리즘은 비록 ‘드라이’하지만, 우리의 정치 풍토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대상이었다.²⁶⁰⁾

평론가 김철은 이를 ‘60년대 후기의 민족적 과제’라 명명했다. 김철은 60년대는 개별 국가가 각자의 국가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들이 구성할 새로운 세계질서는 김철에게 있어, ‘국제정치의 실현’이었다.²⁶¹⁾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냉전의 침범’으로서 ‘민족’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여 나갈 주체로서 뚜렷한 ‘민족 노선’을 확립하는 것이었다.²⁶²⁾ 국제정치적 국가이익의 인정이 1959년에 가까스로 논의되기 시작된 것을 감안

258) 차기벽, “미국의 국가이익과 한국과 일본,” 『사상계』, 1965년 9월호, p.29.

259) 차기벽, “미국의 국가이익과 한국과 일본,” 『사상계』, 1965년 9월호, p.30.

260) “좌담회 : 전후 20년의 세계,” 『정경연구』, 1965년 9월호, p.195.

261) 김철, “1960년대 후기의 민족적 과제 : 냉전 속에서 국가이익을 찾는 세계와 한국,” 『사상계』, 1966년 1월호, p.81. 김철의 이와 같은 생각의 단초는 그가 1963년 집필한 미발표 원고인 “새 역사의 구상”에도 나타나 있다. 김철, “새 역사의 구상,” 당산 김철 전집간행위원회, 『당산 김철 전집 1』, (서울 : 해냄, 2000).

262) 김철, “1960년대 후기의 민족적 과제 : 냉전 속에서 국가이익을 찾는 세계와 한국,” 『사상계』, 1966년 1월호, p.87.

하면 이는 놀라운 담론 지형의 변전이였다.

베트남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 진영의 수호 논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파병 문제가 논의되었다.²⁶³⁾ 조순환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이렇게 논했다. “동남아의 공산화가 미국의 ‘내셔널·인터레스트’에 어긋난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셔널·인터레스트’를 지키는 방법으로 미국이 동남아에 머물러 반공군사력의 강화에 전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아시아’의 ‘내셔널리즘’과 그것을 추진하는 혁신세력과 정면에서 대립하는 것으로 미국의 이익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닐까.”²⁶⁴⁾

한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방’(友邦) 개념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사람은 보통 어떤 특정한 지속적 상황의 오랜 적응도가 몸에 배이거나, 생각하고 행위하게 하는 자명한 여건에 감각이 무디어 관념이 고정되면 그 상황 여건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고, 그로 인하여 변동하는 현실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²⁶⁵⁾ 이는 국가 수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였다. 공존시대에 냉전 체제 하에서 통용되었던 외교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²⁶⁶⁾ 김홍철은 우방(友邦)이라는 한자어가 주는 의미가 영어와는 다름을 지적한다. 서양적 의미의 ‘friend’가 자기의 이익관념을 철저히 배제하면서까지 자아를 희생하는 인정, 의리를 베풀겠다는 것이다.²⁶⁷⁾ 그는 우방이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우방’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²⁶⁸⁾

『청맥』에 많은 글을 게재했던 정경희는 미국의 대한정책의 목표가

263) “월남 파병과 국가이익,” 『동아일보』, 1965년 7월 17일자. 흥미로운 것은 민병기 역시 베트남 파병이 한국의 국가이익이 아니라고 단언했다는 점이다. “국제정치 다원화와 국가이익,” 『동아일보』, 1966년 11월 5일자. 한스 모겐소의 제자였던 민병기는 한스 모겐소의 베트남 전쟁 반대론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현실에서 미국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어떻게 활용되는 지를 보여준다.

264) 조순환, “멕시코마라 전쟁의 새 국면,” 『청맥』, 1965년 5월호, p.129.

265) 김홍철, “우방 개념의 현대적 의미,” 『청맥』, 1965년 12월호, p.44.

266) 김홍철, “우방 개념의 현대적 의미,” 『청맥』, 1965년 12월호, p.62.

267) 김홍철, “우방 개념의 현대적 의미,” 『청맥』, 1965년 12월호, p.45.

268) 김홍철, “우방 개념의 현대적 의미,” 『청맥』, 1965년 12월호, p.62.

냉전 체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지, 한국의 진보와 발전은 미국에게 있어 부차적인 것이라고 폭로했다. 오히려 스스로의 가치는 우방의 원조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이 인식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역사적 유비로서 그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강조했다. 신라가 비록 당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삼국의 통일은 신라 자신의 토착적인 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논리였다.²⁶⁹⁾

반면, 1964년-1965년의 맥락에서 박정희는 ‘자주’보다는 ‘자립’에 방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는 박정희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배경이기도 했다. 경제적 자립에 토대를 두어야 민족 주체성의 확립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²⁷⁰⁾ 일부 지식인들은 박정희의 자립 노선에 동조했지만,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박정희의 근대화가 사실상의 서구화이며, 이와는 구분되는 자주적이면서 주체적인 근대화 노선을 줄곧 모색했다.²⁷¹⁾ 그러나 주체적인 노선의 참조점이 되던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이 몰락하고, 냉전이 다시금 미국과 소련 중심의 질서로 재편되는 맥락에서 자주적 근대화 담론은 쇠퇴하게 된다. 다음 장은 이 과정을 다룬다.

2. 경제발전과 아시아

1)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의 퇴조

1965년은 반동 회의가 개최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자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의 힘이 최정점에 달한 해였다. 1965년 1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는 자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말레이시아 연방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선출에 반대하여 국제연합을 탈퇴했다.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국제연합 역사 상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²⁷²⁾ 『동아일

269) 정경희, “우방으로서의 미국,” 『청맥』, 1965년 12월호, p.78.

270) 박정희, “자립에의 의지,” 심용택 엮음, 『자립에의 의지 : 박정희 대통령어록』, (서울 : 한림사, 1972), pp.230-231.

271) 임희섭, “한국의 근대화는 서구화인가,” 『청맥』, 1964년 12월호. ; 차기벽, “오용된 민족주의 : 민족주의는 결코 선거 구호에 그칠 수 없다,” 『사상계』, 1965년 5월호.

보』 사설은 이 사건을 두고 국제연맹이 회원국의 탈퇴로 국제적인 비중과 권위를 잃고 유명무실화된 전례를 연상했다. 만약 공산주의 국가들과 비동맹 국가들이 국제연합을 탈퇴하고 대안적인 국제기구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는 국제연맹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불행한 사태의 진전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제연합의 테두리에 포함되지 않는 중공, 북한, 월맹의 존재는 이와 같은 위기의식에 현실감을 더해주었다.²⁷³⁾ 실제로 수카르노는 국제연합을 대체할 ‘코네포’(Conference of New Emerging Forces, CONEFO)라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창했다.²⁷⁴⁾ 이 구상에 국제연합에서 줄곧 배제되었던 중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국제연합의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²⁷⁵⁾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65년 6월 29일 알제리의 알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한낱 지역 국가회의의 테두리를 벗어나 평화공존이나 혁명노선이나 하는 중·소 논쟁, 그리고 이와도 관련된 월남문제, 말레이시아 참가문제로 일단이 노정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분규, 인도네시아의 유엔 탈퇴로 표면화된 유엔 위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2의 유엔 형성에의 움직임, 이에 대한 견제, 그리고 아시아·아프리카 지역단결의 기반을 비동맹회의에 두느냐 혹은 반동 회의에 두느냐 등등의 실로 국제정치상 이슈거리가 모두 얽혀 있는 회의”였다.²⁷⁶⁾

1955년 반동 회의와 달리, 1965년 한국은 중립외교의 일환으로 아

272) 수카르노는 말레이시아 연방(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령 보르네오)이 친영적인 말레이시아를 중추로 하여 영국의 권익을 보존하는 것으로 파악했고, 이 신생국가가 ‘신식민주의’의 상징이라고 보았기에 말레이시아에 대한 대결정책을 고수했다. “말레이시아 연방과 수카르노 노선,” 『세대』, 1964년 3월호, pp.305-307.

273) “인도네시아의 유엔 탈퇴,” 『동아일보』, 1965년 1월 4일자 사설.

274) 특히 그는 알제에서 열리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구체적인 코네포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며, 이 내용을 1965년 4월 반동 회의 10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했다. “반동 회의 10주년 기념회의 : 신생국 연대의식의 강화,” 『동아일보』, 1965년 4월 20일자.

275) “고민하는 유엔 창립 20년래 최대위기,” 『경향신문』, 1965년 2월 20일자.

276) 강범석, “아아회의와 아시아의 진로,” 『청맥』, 1965년 6월호, p.57.

시아·아프리카 회의에 참가하고자 노력했다. 한국 정부는 내부 토론을 거쳐 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참석을 결정했고, 알제리 정부의 공식초청을 기다리는 입장이었다.²⁷⁷⁾ 그러나 대아시아·아프리카 외교에 있어 문제가 된 것은 한국의 베트남 파병 문제였다.²⁷⁸⁾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베트남 파병 문제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을 심히 우려했다.²⁷⁹⁾ 결국 한국의 기대와 달리, 알제리 정부는 베트남 파병을 근거로 한국의 초청을 거절했다.²⁸⁰⁾

1965년 6월 19일 개최 예정국이었던 알제리에서 발발한 쿠데타로 인해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11월 경으로 연기되었다. 알제 회의가 연기되면서, 앞으로 아시아·아프리카 단결회의의 방향에 대한 한국 지식인들의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세대』는 알제 회의가 유산된 원인으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중요한 축인 중공의 정책실패를 지적했다. 1955년 반등 회의에서 중공이 주도적인 지위를 누렸던 이유는 당대에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해방되지 않았던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를 제창한 중공의 노선이 인기를 얻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신식민주의가 남아있을 지라도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국이 직면하고 있는 빈궁, 즉 ‘빵’의 문제였다.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방선진제국 내지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기에, 중공의 전투적인 노선은 더 이상 인기를 얻을 수 없었다.²⁸¹⁾

다른 이들은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유산의 원인으로 국가이익에 기초한 다원화 현상을 지목했다. 한 때 이들을 하나로 결속시켰던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라는 문제의식만으로는 아시아·아프리카가 당면한 여러

277) “한국과 제2차 아아회의,” 『동아일보』, 1965년 5월 31일자 사설.

278) 1965년 2월 아프리카로 파견된 한국 친선사절단의 주요 목표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이전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한국의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었다. “아프리카 친선사절단의 출발을 보고,” 『경향신문』, 1965년 2월 10일자 사설.

279) “외무당국자담 중립국외교에 손실,” 『경향신문』, 1965년 1월 8일자.

280) “알지에 아아회의의 참가 문제의 혼선,” 『동아일보』, 1965년 6월 9일자 사설.

281) “아아 회의의 연기와 그 파문,” 『세대』, 1965년 8월호, p.350.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다. “평화 5원칙 중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제구실을 하고 있는 게 없었다.”²⁸²⁾ 오히려 인도-중국의 대립, 인도-파키스탄의 대립, 아랍연합과 시리아의 대립, 알제리아와 모로코의 대립 등 여러 국가들 간의 대립과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에서 인식되는 국가이익의 차이를 살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었다. 아시아·아프리카 각 국가의 외교적 자주성의 전진은 역설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간의 분쟁과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유산과 같은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졌다.²⁸³⁾

이후 한국 지식인들은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이 새로운 전환점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 내부의 다원화 현상으로 인해 ‘A·A 연대감’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상실되었으며, 이제 이들 국가들의 목표는 지역적 연대보다는 ‘자국의 경제의 확립과 정정의 안정’에 있을 뿐이었다. “원래 A·A 회의가 지향한 것은 아시아·아프리카 양 대륙을 결속시켜 ‘지역주의’로부터 탈피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의미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각 지역으로 분해하는 움직임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보다는 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A·A의 현상이다.”²⁸⁴⁾ 아시아·아프리카의 어떤 공통점은 ‘공통점이 없다는 점’이라는 자조적인 평가도 등장했다.²⁸⁵⁾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유색인의 공동광장이 아니라, ‘이해대립의 공동광장’이었다.²⁸⁶⁾

지식인들 차원에서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번영을 분별하는 사고방식

282) “좌절된 아·아회의와 알제리아문제,” 『사상계』, 1965년 8월호, p.145.

283) 이상구, “아·아 민족주의의 향방,” 『정경연구』, 1966년 5월호, p.75.

284) “새로운 바람 속의 AA,” 『정경연구』, 1965년 8월호, p.56.

285) 정경희, “다원화로 가는 세계,” 『청맥』, 1965년 12월호, p.38. 리영희는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 퇴조의 원인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1. 각 체제의 특이성이 국가적 이해대립을 초래했다. 2. 근대화를 위한 경제적 요구가 정치적 독립성에 우세했음. 3. 아시아·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구 일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음. 4. 중소분쟁이 중립주의 국가들의 이념적 분열을 초래했음. 5. 미·소 관계의 전반적 향상으로 적극 중립을 뒷받침했던 전체적 연대의식이 약화됨. 리영희, “신생국 외교의 고뇌,” 세계사 출판부 엮음, 『신생국 강좌 3 : 신생국의 비전』, (서울 : 세계사, 1966), p.383.

286) “이해대립의 공동광장,” 『경향신문』, 1965년 10월 28일자.

본격화된 것도 이 시기였다. “외국지배로부터 해방된 민족이 극적인 독립 식전이나 선언문에 의해 그들의 정치적 독립을 만방에 선언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적 독립 없이 진정한 독립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²⁸⁷⁾ 한국 지식인들은 경제발전을 추구하지 않는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주의는 감상적인 것이라 폄하했다. 이들 국가의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독립이 아니라 경제생활의 향상이었기 때문이다.²⁸⁸⁾

이후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을 이끌었던 중공은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박권상은 1965년의 정세에서 중공이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의 맹주로서 베이징을 주축으로 하여, 아시아에서는 평양·하노이·프놈펜·자카르타를 잇고,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가나를 이으며, 소련과의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여러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것이 후진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린바오의 “인민전쟁 만세” 테제가 국제적 영역에 적용된 것으로 보았다. “후진국들이 선진국을 포위하는 중국의 전략은 이 시기 가장 성공에 근접했었다.”²⁸⁹⁾

하지만 중국의 외교적 도약대로 삼고자 했던 알제 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알제리의 쿠데타로 유산에 그쳤고, 가나의 앙크루마 정권,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정권이 쿠데타로 붕괴되었다. 나아가 친중적이었던 북한과 쿠바가 친소련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고립무원에 빠진 중국은 자기파괴적인 문화대혁명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²⁹⁰⁾ 문화대혁명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된 중공의 후퇴로 인해 나타났다.²⁹¹⁾

문화대혁명은 한국 지식인의 중국관을 일제히 보수화시켰다. 이는 비판적인 잡지 『청맥』도 예외가 아니었다. 1966년 9월호에서 정경희는 마오쩌둥 사상이 득세하고 있는 중공을 비판했다. 그는 중공 군부에서 ‘인민전쟁’을 강조하는 린바오가 득세하는 것을 두고, ‘세계의 농촌’인 아시아·

287) 이상구, “아·아 민족주의의 향방,” 『정경연구』, 1966년 5월호, p.76.

288) 조순환, “흩어진 아·아 불력의 전열 : 벤 벨라, 수카르노, 앙쿠르마 시대,” 『세대』, 1966년 8월호, p.125.

289) 박권상, “외교고립 : 무너진 추축에 실신,” 『동아일보』, 1966년 9월 8일자.

290) 박권상, “외교고립 : 무너진 추축에 실신,” 『동아일보』, 1966년 9월 8일자.

291) 이동욱, “내정실패 : 경제빈곤의 악순환,” 『동아일보』, 1966년 9월 8일자.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가 ‘세계의 도시’인 미국과 유럽을 포위하는 전략이 마오쩌둥 사상을 빌어 승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린바오의 주장은 정치의 지배 아래 있는 군대는 어떠한 근대적 무기 앞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마오쩌둥 사상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반면, 근대적 무기의 도입과 적극적인 방어를 강조한 군부 지도자 뤼루이칭은 혁명 사상에 충실치 못하다는 이유로 숙청되었다. 정경희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영역을 허용하지 않는 중공의 현실을 진시황 하의 중국의 전통적 사회양식의 부활이자, 비트포겔이 말한 ‘동양적 전제주의’라고 명명했다. 심지어 비트포겔이 비판했던 소련도 국제사회에서 유연해지고 있는 마당에, 중공은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정경희가 비트포겔을 인용하면서 소련에는 키예프 공국이라는 권력 분산의 경험이 존재하고 이것이 소련의 혁명적인 민주화의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반면, 중국은 맑스의 말처럼 ‘아시아적 전제군주’인 마오쩌둥이 노예적인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대목이다.²⁹²⁾ 문화대혁명은 안으로는 대약진의 실패와, 밖으로는 범세계적인 고립을 국내의 적에 대한 투쟁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그는 문화대혁명이 강조하는 정치우선과 마오쩌둥주의, 모든 외래적 생활감각의 일소와 사치의 배격은 맑스주의와도 다르며,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수신제국치국평천하’에 가깝다고 본다. 그는 중국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근대’와 대립되는 ‘중화’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²⁹³⁾

중공과 마찬가지로, 국제연합을 탈퇴하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말레이시아의 ‘신판 식민주의’를 비판했던 인도네시아가 결국 그들이 비판한 ‘신판 식민주의’의 품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은 한국인들이 본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의 비참한 말로였다.²⁹⁴⁾ 이미 1964년에 합동통신 외신부장 김만기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갈등을 서술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말

292) 정경희, “동양사적 일원주의,” 『청맥』, 1966년 9월호, p.17.

293) 정경희, “중화와 근대와 대결,” 『청맥』, 1966년 10월호, p.93. 김준엽도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중국의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정책을 ‘대중화제국’의 부활에서 독해했다. 김준엽,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문제점,” 김준엽 책임편집, 『중공권의 장래』, (서울 : 범우사, 1967), p.11.

294) “신생국의 우선회 경향,” 『동아일보』, 1967년 3월 3일자 사설.

레이시아에 대한 강경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로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열등의식’을 지적한 바가 있었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마필린드(MAPILINDO)와 같은 연합국가를 구상할 만큼, 말레이 민족의 국가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서방 측에 가담하여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반면,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는 냉전에서 처신을 잘못해 현재 말레이족 세 나라 중 가장 뒤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는 이 상황에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수카르노가 ‘신식민주의’라는 가장 어필하기 쉬운 슬로건으로 말레이시아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보았다.²⁹⁵⁾

수카르노의 몰락 이후, 한국인의 첫 인도네시아 방문이 밀림답사였다는 점도 상징적이다. 한국남방개발주식회사 이사인 최종훈은 인도네시아 하면 ‘수카르노’가 머리에 떠오른다고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 다음 가는 ‘자원의 보고’이며, 일본이 200만 명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탐냈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켰다.²⁹⁶⁾ 최종훈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은 인삼과 더불어, 가네포 경기에 출전했던 북한이 통일 아랍공화국과 축구 결승에서 맞붙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포착했다.²⁹⁷⁾ 수카르노가 1963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신흥세력대회’인 가네포 대회는 아시아·아프리카인들의 대안 올림픽이었다. 북한은 자카르타 대회에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스포츠 경기를 통해 ‘코리아’를 기억하고 있었다.

최종훈은 인도네시아에 남아있는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무화시키는 글쓰기 전략을 취한다. 우선 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인도네시아인들은 소련의 기술이 미국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쏘비에도·디디·바구스”(소련은 좋지 않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인의 입을 빌려 그는 “인도네시아의 반공지역은 ‘띠가 스라란’(삼남(三

295) 김만기, “포화의 신호수 수카르노 : 동남아의 일각에 전운을 부르는 수카르노의 대말레이시아 대결정책은 과연 전쟁의 불씨가 되고 말 것인가?.” 『신사조』, 1964년 3월호, pp.121-122,

296) 최종훈, “인도네시아 기행,” 『신동아』, 1966년 8월호, p.336.

297) 최종훈, “인도네시아 기행,” 『신동아』, 1966년 8월호, p.341.

南)이라는 뜻)이었는데 한국(南韓)과 손잡게 되었으니 이전 사남(四南)이라고 되었다”고 말한다.²⁹⁸⁾ 최종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들은 사석에서 “우리도 부자가 되려면 일본이나 독일처럼 미국과 싸워서 패하자”라고 말하고 있었다. 일본과 독일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군사적 주권을 일정하게 상실했으나 미국의 냉전 헤게모니 하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국가들이었다. 일본과 독일을 부러워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입을 빌려 최종훈은 아시아 아프리카 단결운동의 패배를 한국 사회에 전하고 있었다.

2) 정치 중심의 비동맹운동의 퇴조

제2장에서 서술했듯이, 나세르의 이집트는 냉전기 한국 지식인들에게 독립과 자주의 표상이었다. 1960년대 초에도 이집트는 한국과 경제, 사회, 문화의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국가로 인식되었다.²⁹⁹⁾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중동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의 퇴조와 더불어 비동맹운동을 이끌었던 나세르가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1964년 10월 나세르는 카이로에서 제2차 비동맹회의를 개최한 바 있었다. 이 회의에는 반식민주의를 제창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참석했다.³⁰⁰⁾ 이들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통해 나세르는 동서 진영 사이의 평화노선을 주창한 티토를 제치고, 비동맹회의의 새로운 기수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과 소련이 추구하는 공존 노선에 대한 공공연한 반기였다.³⁰¹⁾ 핵 전쟁의 위협을 파악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은 앞으로 더욱 더 타협을 하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세력 면에서 차이가 큰 구 지배

298) 최종훈, “인도네시아 기행,” 『신동아』, 1966년 8월호, p.350.

299) 유정열, “아랍 사회주의의 현실 : 현지생활 2년간에 본 에집트인들,” 『사상계』, 1964년 4월호, p.171.

300) 1964년 제2차 카이로 비동맹회의에 대해서는 A. W. Singham and Shirley Hune, *Non-Alignment in an Age of Alignments*, (London : Zed Books, 1986), pp.89-94. 제2차 비동맹회의 결의안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제3세계 자료집』, (서울 : 국회도서관, 1978), pp.114-138.

301) “좌담회 : 돌풍부는 세계, 격변하는 전환기,” 『경향신문』, 1964년 10월 17일자.

세력과 신생국가들의 공존은 이제부터가 관건이었다.³⁰²⁾ 비동맹회의의 유일한 유럽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비동맹회의를 통해 동서 진영 간의 평화를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제2차 비동맹회의를 기점으로 하여 비동맹회의의 주된 관심은 미국-소련과 신생국과의 관계가 되었다. 이들 간의 공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2차 비동맹회의에서 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나 나세르는 경제보다는 정치적 의제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주도했다.

나세르는 2차 비동맹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독립 문제를 환기시켰고, 이스라엘에 대한 대결 정책을 다시금 제창했다. “교섭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고, 이스라엘과의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팔레스타인 문제로 협상하지 않는다”는 이집트의 대이스라엘 외교원칙이었다.³⁰³⁾ 1967년 6월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을 공격함으로써 6일 전쟁이 발발했다. 이스라엘군은 6일 만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군을 궤멸시켰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정책을 추진하던 나세르에게 있어 굴욕적인 패배였다. 나세르는 패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했다. 비록 번의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후 아랍의 영웅이자 비동맹의 기수였던 나세르의 지위는 크게 흔들렸다. 나세르의 사임 논란을 다룬 『경향신문』 사설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우리는 일찍이 네루나 앙크루마 그리고 수카르노와 같은 비동맹의 기수들이 미소의 틈바구니에서 조정과 중개의 역할로서 국제정치의 향방에 작용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던 때와는 판이한 상황변천을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비동맹의 친우들이 국제무대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나세르의 영향과 지위를 퇴색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국제정치의 큰 물줄기가 미소의 대화와 협조의 기틀 위로 굳어져 간 상황 속에 나세르의 정치적 생명도 한계점에 다다른 것을 실감케 한다. 이제는 비동맹의 기치와 각광 아래 국내정치의 모순을 대외적으로 전치시키거나, 국가이익이라는 명목 아래 혹은 일신의 정치적 야심의 한없는 충족을 위해 미소의 대립에 정치적 도박을 걸어보고 한걸음 나아가서는 전

302) 유정열, “평화와 협력의 대화의 : 카이로 중립국정상회담과 그 의의,” 『사상계』, 1965년 3월호, p.150.

303) 박봉식, “절벽에 부딪힌 아랍민족주의,” 『아세아』, 1969년 5월호, p.121.

쟁을 도발시키는 국제정치의 이른바 소영웅들의 활동무대를 점차로 좁아져 가는 것 같다.”³⁰⁴⁾

이 사실에서 나세르는 ‘아랍민족의 영웅’이 아니라 ‘소영웅’으로 표상되었다. 소영웅은 소영웅심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인 개념이다. ‘소영웅’의 행동은 ‘비동맹의 기치’나 ‘국가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도박’으로 해석되었다. 국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고, 대외적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중립주의를 외교적으로 내세운 점이 비판을 받기도 했다.³⁰⁵⁾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소련의 협조 분위기 속에서 비동맹국가들의 조정과 중개 역할이 어려웠다는 정세 분석이다. 실제로 6일 전쟁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이집트의 역할은 매우 축소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을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해왔으며, 아랍민족의 통일을 주장해온 이집트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였다. 그러나 6일 전쟁 이후 평화협상에 있어서 미국과 소련은 이스라엘과의 외교 협상을 거부하는 이집트의 목소리를 거의 대변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낯세리즘은 절벽에 부딪치고 있었다.”³⁰⁶⁾

이는 비판적인 잡지였던 『청맥』도 공유하는 인식이었다. 나세르의 신격화된 지위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낯세리즘은 그 종착역에 도달하고 있었다.³⁰⁷⁾ 비동맹운동의 보루였던 낯세리즘은 미국과 소련이 냉전 체제에서 공존 체제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실리가 사라졌고, 점점 무력해졌다. 오히려 낯세리즘은 아랍권의 단결이라는 나세르 개인의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정책을 완전히 희생시켰다.³⁰⁸⁾ 앞으로 이집트가 나아가야 할 길은 이스라엘의 타도가 아니라 누적된 국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을 가장 잘 보여준 국가가 바로 알제리였다. 밴

304) “나세르의 하야선언과 변의,” 『경향신문』, 1967년 6월 12일자 사설.

305) 유정열, “아랍권과 반서구주의,” 『아랍민족주의와 아랍사회주의』, (서울 : 중동아프리카연구원, 1968), p.173.

306) 박봉식, “절벽에 부딪힌 아랍민족주의,” 『아세아』, 1969년 5월호, p.123.

307) 이재승, “낯세리즘의 후퇴와 아랍권,” 『청맥』, 1967년 6월호, p.19.

308) 이재승, “낯세리즘의 후퇴와 아랍권,” 『청맥』, 1967년 6월호, p.22.

벨라의 퇴진과 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유산 이후, 알제리는 ‘경제 독립’을 강조하는 부메디엔이 집권하고 있었다. 부메디엔은 제1차 비동맹회의 국가들의 제창으로 탄생한 국제연합 통상개발회의(UNCTAD)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동서 진영의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남북문제는 악화 일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었다.³⁰⁹⁾ 알제리가 1968년 뉴델리 제2차 국제연합 통상개발회의를 대비하기 위해 개최한 알제 각료회의는 비동맹회의의 초점을 제네바 회의에 참여했던 77그룹의 목표와 연동시켰다.³¹⁰⁾ 알제 회의에서 채택된 알제 헌장은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균형이 증가일로에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후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 영역에 국한되었다. 제2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잠비아 루사카에서 개최된 1970년 제3차 비동맹회의는 저개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회의였다.³¹¹⁾ 루사카 비동맹회의를 기점으로 하여 ‘비동맹’의 개념은 경제개발을 위한 통일과 협력으로 변화했다. 이제 비동맹 그룹은 77그룹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합 내의 활동으로 그 전술을 변환했다. 이는 이 회의를 소개한 한 사설의 제목처럼 비동맹회의의 ‘전향’(轉向)이었다.³¹²⁾ 비동맹회의는 인도네시아, 알제리아, 가나, 캄보디아에서의 쿠데타로 비동맹의 기수들이 사라졌기에, 존재 자체가 애매해졌다. 제3차 비동맹회의는 비동맹의 본질을 반성하는 회의가 될 것이었다.

“즉 비동맹 제국의 국제문제해결에 대한 공헌도의 한계인데 월남전쟁이나 또는 아·아지역의 점점인 중동문제 등의 해결이 비동맹국의 영향력과는 관계없

309) Robert Motimer, *The Third World Coali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Boulder : Westview Press, 1984), pp.25-27.

310) 77그룹의 일원이었던 한국도 알제 회의에 최규하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는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던 국가에 대한 외교관 파견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311) 제3차 비동맹회의 결의안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제3세계 자료집』, (서울 : 국회도서관, 1978), pp.138-153.

312) 제3세계 운동의 경제화에 대해서는 Stephen D. Krasner, *Structural Conflict : The Third World Against Global Liberalism*,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이 미·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비동맹세력의 무력(無力)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엔 동맹과 비동맹의 한계가 모호해졌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비동맹으로 자처하면서도 대국의 군사 경제 원조에 발이 묶여 본질적으로는 동맹국의 구실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 것이다.”³¹³⁾

이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은 비동맹국가로 이해되기보다는, 같은 목표인 경제건설을 향해 나아가는 국가로서 표상되었다. 이들은 독립이라는 제1단계를 지나, 경제건설이라는 제2단계 과정에 돌입하고 있었으며, 이제 이들은 반식민주의·반제국주의가 아니라 남북문제의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³¹⁴⁾ 이제 신생국가들은 자국의 다양한 사회적 여건이 경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반성하면서, 그러한 저해 요인의 순리적 제거나 극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적 가치로서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추구하게 되었다.³¹⁵⁾

3) 미국 발 근대화 이론의 자기화

1965-1966년을 전후로 하여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이 급작스럽게 퇴진함에 따라, 다른 공간을 통해 대안적인 상상력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공백을 대체한 것은 미국 발 근대화 이론이었다. 민준기는 ‘정치발전론’의 관점에서 아시아 민족주의를 접근했다. 그의 글에서 핵심이 되는 척도는 바로 ‘근대화’였다. 이전에는 아시아 민족주의를 근거로 아시아 공산주의가 소련 공산주의와 구분되었다면, 이제는 ‘근대화’의 관점에서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험이 이해되었다. 이들은 ‘근대화의 최첨경’이라는 이유로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것이다.³¹⁶⁾ 중국 내전

313) “제3의 세계의 전향.” 『동아일보』, 1970년 9월 10일자 사설.

314) “제3의 세계의 전향.” 『동아일보』, 1970년 9월 10일자 사설.

315) 하경근, 『후진국정치론』, (서울 : 일조각, 1976), pp.54-55. 정치학자 하경근의 작업은 이론으로서 근대화 이론과 대상으로서 아시아·아프리카가 어떻게 조우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316) 민준기, “아시아 민족주의의 문제점.” 『청맥』, 1966년 3월호, pp.124-127. 심지어 공산주의는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는 서방측의 방식보다 더 능률적이라는

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승리도 일종의 근대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³¹⁷⁾ 물론 그것은 ‘어긋난 근대화’였다. 공산주의는 근대화의 초기적 단계에 있어서 잘 훈련되고 조직된 전문적 공작원이 그 사회에 주입하려는, ‘과도기의 병’이기 때문이었다.³¹⁸⁾

공산주의가 근대화의 일환으로 해석됨으로써, 냉전의 양상이 변모되었다. 공산당의 기반을 파괴하고 민족적 평화와 사회질서를 신장하는 길은 정치적·경제적 자유의 확대에 있었다.³¹⁹⁾ 특히 매카시즘으로 대표되는 ‘반공 히스테리’는 오히려 그 사회를 분열과 사상적 혼란에 빠뜨릴 뿐 공산주의를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중적 민족적 자각을 높이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해나간다면, 공산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었다. 이제 반동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욕구와 투쟁은 후진국에서 공산주의를 이기는 ‘최상의 길’이었다.³²⁰⁾

국가 간의 거리를 제거하는 국제 민주주의를 제창했던 차기벽의 논리 역시 변화했다. 그는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현격한 거리를 논하고 있었다.

“오늘날 후진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근대화니 산업화니 떠들며 선진국을 따라 잡는다고 야단이지만, 그러나 말만 요란할 뿐이지 실제로는 날이 갈수록 더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략)…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거리를 앞으로 더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제 말씀을 요약하면 지리적인 거리는 급속도로 제거되고 있지만 사회적인 거리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거리를 제거하는 속도가 이 현실에서, 아직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중요

지적도 있었다. 이승헌, “아세아와 근대화 과업,” 『아세아연구』, 7권 4호, 1964, p.116.

317) 민두기, “중공연구의 신전개 : 아 식민지와 근대화 - 공산중국에의 노선 소묘를 중심으로,” 『세대』, 1966년 7월호, pp.266-275.

318) 월터 로스토우, 김영록 옮김, 『선진국과 후진국』, (서울 : 탐구당, 1966), p.103.

319) 김준엽,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문제점,” 김준엽 책임편집, 『중공권의 장래』, (서울 : 범우사, 1967), p.15.

320) 김준엽,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문제점,” 김준엽 책임편집, 『중공권의 장래』, (서울 : 범우사, 1967), pp.15-16.

한 것은 민족주의 문제라고 믿고 있습니다.”³²¹⁾

이 때 차기벽이 강조한 민족주의의 과제는 국내, 국제 양 면에서 있어서 거리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즉 국내적으로는 민족을 단합시켜 근대화를 촉진하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을 추격하고 선진국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였다.³²²⁾ 그는 근대화의 촉진을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등장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는 민주주의 이론에 악착같이 집착한 나머지 실제로는 독재와 무질서의 양극을 왕래했던 프랑스나, 서구화된 지식층이 민주주의 토착화는 꾀하지 않고 입으로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외친 결과 군사 쿠데타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대다수의 라틴아메리카의 선례를 피하는 길이었다.³²³⁾

그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과거의 전통 속에서 근대화를 촉진하려는 토착화된 엘리트들이 출현하고 있다고 파악했다.³²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는 박정희 정권을 지칭하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이식과정에 있는 오늘의 신생국가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은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보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민주주의 착근을 도울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³²⁵⁾ 박정희 정권에 대해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했던 차기벽이 1969년에 이와 같은 글을 발표한 이유는 근대화에 대한 기대에 있었다. 이는 서구의 경험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종합무진 연구한 차기벽의 중간 결론이었다.

1959년 로야마 마사미치는 전후 일본의 위상을 논하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321) 차기벽, “근대화와 민족주의,” 차기벽,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 까치, 1978), p.64. 이 글은 『중등교육총서』 제2집에 1967년 1월에 발표된 글이다.

322) 차기벽, “근대화와 민족주의,” 차기벽,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 까치, 1978), p.67.

323) 차기벽, “근대화와 민족주의,” 차기벽,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 까치, 1978), p.70.

324) 차기벽, 『근대화정치론』, (서울 : 박영사, 1969), p.19.

325) 차기벽, 『근대화정치론』, (서울 : 박영사, 1969), p.20.

“종래 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을 논의하는 경향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지나치게 좌익주의적이었다. 그것이 표방하는 중립주의를 넘어 정치적으로는 소련과 중공이 주창하는 반식민주의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오늘날 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이 반식민주의 운동이라는 일면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의 입장과 역할은 오히려 그 극단화와 지나침을 경고하고, 일본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반하는 점진주의야말로 현명한 길임을 보여주는 점에 있는 것은 아닐까.”³²⁶⁾

로야마는 일본의 맥락에서 이와 같은 발화를 했지만, 이는 정확하게 한국의 1960년대 후반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1965년 한국을 방문한 로스토우는 한국이 도약의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했다.³²⁷⁾ 그는 다원화된 세계질서에서 중요한 것은 “양 진영의 투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질서가 각자 고유의 근대적 개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국가들의 자발적 단결과 협력에 의해서 창조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일형으로 강요된 나라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단일중심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질서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 정리했다.³²⁸⁾ 미국은 사회를 근대화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근대화의 추진과정에서 국가의 독립을 방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가능한 일을 하는 국가였다.³²⁹⁾

이후 미국은 ‘제3세계 국가’들을 자신이 주도하는 세계체제 내로 편입시키고자 노력했다.³³⁰⁾ 미중화해 이후 중국도 경제 중심의 세계관을 받

326) 蠟山政道, 『國際政治と日本外交』, (東京 : 中央公論社, 1959), p.118. 사카이 데쓰야, 장인성 옮김, 『근대 일본의 국제질서론』, (고양 : 연암서가, 2010), p.197에서 재인용.

327) “아세아에 있어서의 경제개발,” 『경향신문』, 1965년 5월 4일자. 로스토우의 연설 전문은 “이미 도약단계에 들어선 한국,” 신범식 엮음, 『성년 한국 : 외국인의 발견』, (서울 : 동아출판사, 1966), pp.24-55에 수록되어 있다.

328) 월터 로스토우, 김영록 옮김, 『선진국과 후진국』, (서울 : 탐구당, 1966). p.103.

329) 월터 로스토우, 김영록 옮김, 『선진국과 후진국』, (서울 : 탐구당, 1966). p.103.

330) 브루스 커밍스는 냉전이 ‘봉쇄 사업’과 ‘해게모니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파악하면서, 미국의 ‘해게모니’를 수립하는 데 있어, 카터 행정부 시기 설립된 삼각위원회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브루스 커밍스, “70년 위기의 종언 : 삼각구상과 신세계질서,” 서재정·정용욱 엮음, 『탈냉전과 미국의 신세계질서』, (서울 : 역사비평사, 1996), pp.29-62.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체주의적 속성이 ‘경제 발전’의 문제로 인해 완화되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 간의 수렴이 일어날 것이라는 연구가 등

아들이면서, 60년대의 ‘중간 지대론’을 대폭 수정한 ‘3개 세계론’을 발표했다.³³¹⁾ ‘경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한국은 1967년 알제에서 개최된 77그룹 각료회의에 참가했다.³³²⁾ 역설적인 것은 한국이 77그룹이 가입한 후에 한국과 다른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이 결정적으로 분기되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으로 성장하는 한국은 냉전의 피해자인 동시에 수혜자였다. 한국의 자체적인 위상은 1970년대 초엽에 이르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변모하고 있었다.³³³⁾

장하는 것도 1970년대였다.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Alexander Eckstei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World Politics*, Vol. 22, No. 4, (July, 1970). ;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331) 미중 화해 이후 중국의 마오쩌둥이 제시한 ‘3개 세계론’(Three World Thesis)은 미국과 소련을 1세계로 정의하고, 일본·유럽·캐나다를 2세계, 중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은 3세계라고 보았다. 마오쩌둥의 ‘3개 세계론’은 발전 수준을 기준으로 패권국과 피지배국을 분별하고 있으며, 이는 제3세계 운동이 경제 문제가 중심이 되는 ‘남북 문제’로 변모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Chen Jian, “China’s Changing Policies Toward the Third World and the End of the Global Cold War,” in Artemy Kalinovsky and Sergey Radchenko (eds.),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Third World : New Perspectives on Regional Conflict*, (New York : Routledge, 2011), pp.101-121.

332)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G77에서 탈퇴한다. 1967년부터 1996년까지의 시기는 주로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와의 조우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당대에는 ‘세계로 뻗는 한국’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세대』 1967년 2월호의 “세계 속의 한국” 특집, 『동아일보』의 “세계로 뻗는 한국·한국인” 특집(1973년), 『경향신문』의 “세계로 뻗는 한국의 세(勢)” 특집(1976년).

333)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70년대 한국의 목표가 “중진국가군 중 가장 상위권”이라고 언급했다. “박대통령 신년사,” 『경향신문』, 1970년 1월 1일자.

I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냉전기 한국 지식인의 아시아 상상을 살펴보았다. 당대 지식인들의 담론과 담론이 가능했던 맥락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냉전 체제가 비단 [한국-세계]의 수직적 구도뿐만 아니라 [한국-아시아]의 수평적 구도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55년 반동 회의부터 50년대 말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주의의 성장은 한국 전쟁 이후 봉인되었던 [한국-아시아] 구도를 부활시키는 중요한 기점이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4·19 혁명의 압도적인 위상으로 인하여 국제정치 관념의 변화가 4·19 혹은 6·3 운동 이후에 나타난 것이라 가정해왔다. 본 연구는 50년대의 아시아 상상을 추적함으로써 이와 같은 변화가 이미 1950년대 후반에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냉전기 아시아 상상은 식민지 시기 동양론과는 차별성을 지녔다. 동양론이 과거의 동양을 다루는 문명론에 가까웠다면, 아시아 상상은 동양을 현대의 아시아로 대체했다. 아시아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통해 한국 지식인들은 한국과 세계의 구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아시아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중심’에 대한 비판으로 전화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의 전후와 냉전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작업이기도 했다. 1945년부터 1970년까지의 시기는 ‘이행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탈식민의 구도와 냉전의 구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탈식민의 논리가 강조되든 반공 냉전의 논리가 강조되든 간에 아시아는 줄곧 호명되는 대상이었다. 전통 중화 질서·일본 제국 질서 내에서 아시아를 자기화하지 못했던 한국인들은 냉전의 맥락에서 비로소 세계를 바라보는 지평을 확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역사적 상황(탈식민)과 경제적 수준(후진국)에 위치한 국가들에 대한 발견은 이들과의 국제주의에 기초한 연대로 귀결되지는 못했다. 한국의 선택은 베트남 파병처럼 이들 중 일부를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국가의 위신을 고양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규범적인 입장에서, 매우 속물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칸

트가 ‘반사회적 사회성’이라고 부른 인간의 본성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한국의 속물성이야말로 한국의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숨은 힘’이기도 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자키 라이디(Zaki Laidi)는 냉전이 지정학적 세력다툼일 뿐만 아니라, 두 목적론적인 경쟁체제 간의 ‘의미’의 전용을 둘러싼 다툼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볼 때 냉전의 중요한 축은 지정학뿐만 아니라 지식과 의미부여의 정치학에 있다.³³⁴⁾ 소련이 ‘인간 해방’을 내세우며 진보의 방향을 독점하고자 했다면, 1960년대 미국은 ‘발전’이라는 새로운 틀로 세계사를 독점하고자 했다. 미국과 소련은 자국민에게 동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각자 자신의 권역 내의 국가들에게 냉전의 세계적 의미를 제공했다. 이는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의 지식의 전파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과정이 일방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주변은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전유하면서, 자기 나름의 의미를 창출해내기도 한 것이다. 크리스티안 애피(Christian Appy)의 말을 빌리자면, 냉전은 ‘세계를 둘러싼 투쟁’(Struggle for World)일뿐만 아니라 ‘세평을 위한 (언어의) 투쟁’(Struggle for Word)이기도 했던 것이다.³³⁵⁾

1965년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의 몰락을 전후하여 [한국-아시아] 구도가 약화되었다. 이후 ‘다원화 세계’에서 국가이익에 대한 강조가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마치 위계적인 신분제 사회가 아니라 평등하고 개방적인 사회에서 ‘속물성’이 등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주권’을 지닌 국가들의 사회는 오히려 남들과 구별짓고 싶어하는 욕망을 전면에 등장시켰다. 자신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모였던 반동 회의 국가들은 그들 자신도 서로의 주도권을 주장하다가 자멸하고 말았다.

1970년대에 이르면, 탈식민 국가들은 대부분 ‘독립’을 이루었지만, 이들은 서구 국가들이 마련해 놓은 여러 지표들을 두고 기나긴 인정투쟁

334) Zaki Laidi, *Un Monde Privé de Sens*, (Paris : Fayard, 1994).

335) Christian G. Appy, “Intoduction : Struggling for World,” in Christian G. Appy (ed.), *Cold War Constructions : The Political Culture of United States Imperialism, 1945-1966*, (Amhurst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000), pp.1-8.

에 돌입하게 된다. 근대화 이론은 제3세계 국가들이 올바른 절차를 거쳐 노력만 한다면, 제1세계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론들이었다.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후진국가들은 선진국으로의 긴 도정을 시작했다.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성공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은 인정의 위계질서를 통해 탈식민 국가들을 더욱더 문화적·정치적으로 포섭할 수 있었으며, 억압이 아닌 기쁨과 행복을 통해 피지배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복속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생산적 권력'의 체계를 완성했다. 1970년 이후 냉전의 역사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2. 1차 자료(잡지)

『국회보』

『사상』

『사상계』

『사조』

『세계』

『세대』

『신동아』

『신사조』

『신세계』

『신천지』

『신태양』

『아세아』

『아세아연구』

『자유세계』

『정경연구』

『청맥』

『최고회의보』

『현대공론』

1차 자료(단행본)

1) 한국어

가말 압둘 나세르. 원용덕 옮김. 1958. 『혁명의 철학』. 서울 : 고구려문화사.

고황경. 1949. 『인도 기행』. 서울 : 을유문화사.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77. 『제3세계관계자료집』. 서울 : 국회도서관.

----- . 1977. 『제3세계의 향방』. 서울 : 국회도서관.

김영준. 1962. 『국가이익과 국가정책』. 서울 : 신명문화사.

김용호·이영순. 1956. 『헝가리 비극』. 서울 : 한국자유문학자협회.

김준엽 책임편집. 1967. 『중공권의 장래』. 서울 : 범우사.

김철. 2000. “새 역사의 구상.” 당산 김철 전집간행위원회. 『당산 김철 전집 1』. 서울 : 해냄.

도로시 포스딕크. 이원우 옮김. 1955. 『외교정책의 기초이론 : 상식과 세계사정』. 서울 : 월기사.

로버트 머피. 미국 공보원 옮김. 1955. 『아세아의 요청』. 서울 : 주한미공보원.

박정희. 1963. 『국가와 혁명과 나』. 서울 : 향문사.

박정희. 1972. “자립에의 의지.” 심용택 엮음. 『자립에의 의지 : 박정희 대통령어록』. 서울 : 한림사.

서울신문사 조사국 편역. 1957. 『피로 물들은 일요일 : 자유 헝가리 인들은 이렇게 싸웠다』. 서울 : 서울신문사.

석산 서석순 박사 고회기념문집 간행위원회 엮음. 1991. 『석산 서석순 박사 고회기념문집』. 서울 : 석산 서석순 박사 고회기념문집 간행위원회.

석천선생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엮음. 1977. 『석천 오종식 선생 추도문집』. 서울 : 서울신문사 출판국.

- 세계사 출판부 엮음. 1966. 『신생국 강좌 1-3』. 서울 : 세계사.
- 송건호. 1961. “아시아 민족주의와 휴머니즘적 자세.” 한국휴머니스트회 엮음. 『휴머니즘과 현대사상』. 서울 : 범조사.
- . 1965. 『드골 프랑스의 영광』. 서울 : 탐구당.
- 유정열. 1968. 『아랍민족주의와 아랍사회주의』. 서울 : 중동아프리카연구원.
- 월터 로스토우. 김영록 옮김. 1966. 『선진국과 후진국』. 서울 : 탐구당.
- 이기백. 1961. 『국사신론』. 서울 : 태성사.
- 이상백. 1978. 『이상백 저작집 1』. 서울 : 을유문화사.
- 이용희. 1977. “한일관계의 정신사적 문제 : 변경문화 의식의 갈등에 대하여,” 이용희, 노재봉 엮음, 『한국민족주의』. 서울 : 서문당.
- 이항녕. 1962. “자유·평등·평화.” 현대인강좌 편찬회 엮음. 『현대인강좌 별권 : 한국의 발견』. 서울 : 박영사.
- 이항녕. 2011. 『작은 언덕, 큰 바람 : 소고 이항녕 유고집』. 파주 : 나남.
- 임방현. 1973. 『근대화와 지식인』. 서울 : 지식산업사.
- 조효원. 1954. 『국제정치학』. 서울 : 문종각.
- . 1955. 『아세아정치론』. 서울 : 문종각.
- 채희순. 1954. 『동양사개론』. 서울 : 고려출판사.
- 체스터 볼즈. 정문상 옮김. 1957. 『세계평화와 약소민족의 혁명』. 서울 : 인간사.
- . 이종춘 옮김. 1962. 『사상과 민족과 평화』. 서울 : 자유사.
- 최일수. 2012. 한수영 엮음. 『최일수 선집』. 서울 : 현대문학.
- 칼 비트포겔. 구종서 옮김. 1991. 『동양적 전제주의』. 서울 : 법문사.
- W. 프리이드맨. 이원우 옮김. 1955. 『국제정치론』. 서울 : 진명문화사.

2) 영문

Ball, William Macmahon. 1952.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East Asia*. Corlton : Melbourne University Press.

Bowles, Chester. 1954. *Ambassador's Report*. New York : Harper.

----- . 1962. *The Conscience of a Liberal*. New York : Harper and Row.

2차 자료(논문)

1) 한국어

권보드래. 2011. “『사상계』와 세계문화자유회의.” 『아세아연구』. 54권 2호.

----- . 2012. “중립의 꿈 1945~1968 :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상허학보』. 34권.

김건우. 2009. “1964년의 담론 지형 : 반공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성장주의.” 『대중서사연구』. 22권.

김미란. 2014. “문화냉전기 국제펜과 국제문화 교류.” 『상허학보』. 41권.

김민환. 2013. “중심과 주변의 증충성.” 『사회와 역사』. 97권.

김봉중. 2008. “미국의 중동정책과 수에즈 위기.” 『미국사연구』. 28권.

김삼웅. 1996. “『청맥』에 참여한 60년대 지식인들의 민족의식.” 『말』. 120권.

김상태. 2008. “1950년대~1960년대 초반 평안도 출신 『사상계』 지식인층의 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45권.

김정보. 2005. “홍이섭의 한국근현대사 인식.” 『동방학지』. 130권.

- 김예림. 2007.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성의 위상학 : 해방-한국전쟁 후(1945-1955) 아시아 심상지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0권.
- . 2012. “1950년대 남한의 아시아 내셔널리즘론 : 동남아시아를 정위하기.” 『아세아연구』. 55권 1호.
- 김인수. 2012. “이론연쇄와 전향.” 『사회와 역사』. 96권.
- 김정배. 2010. “냉전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이유.” 『정치와 평론』. 6호.
- 김정현. 2005. “오리엔탈리즘과 동아시아 : 근대 동아시아의 타자화와 저항의 논리.” 『중국사연구』. 39권.
- 김종태. 2013. “박정희 정부 시기 선진국 담론의 부상과 발전주의적 국가정체성의 형성.” 『한국사회학』. 47권 1호.
- 김주현. 2012. “『사상계』의 동양담론 분석.” 『현대 문학의 연구』. 46권.
- . 2013. “『청맥』지 아시아 국가 표상에 반영된 진보적 지식인 그룹의 탈냉전 지향.” 『상허학보』. 39권.
- . 2014. “파월 베트남 수기를 통해 본 한국의 베트남 전쟁.” 『현대문학의 연구』. 54권.
- 김학재. 2013. “동아시아 냉전의 세 가지 평화모델 : 판문점, 제네바, 반동의 평화기획.” 『역사비평』. 105권.
- 남궁곤. 1987. “『사상계』를 통해 본 지식인들의 ‘냉전 의식’ 연구 : 국제질서관의 형성 및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논문.
- 박상수. 2013. “동아시아 근대 ‘아시아주의’ 독법.” 『아세아연구』. 55권 4호.
- 박연희. 2013. “1950년대 문화연구 동향과 지성사적 가능성.” 『한국학연구』. 29권.
- 박지영. 2011. “번역된 냉전, 그리고 혁명 : 사르트르, 마르크스주의, 실존과 혁명.” 『서강인문논총』. 31권.
- 박태균. 2006. “박정희의 동아시아 인식과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

- 구상.” 『역사비평』. 76권.
- . 2011.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집단 안보체제의 구상과 좌절.” 『세계정치』. 32권 2호.
- 백승욱. 2013. “한국 1960~1970년대 사유의 돌파구로서의 중국 문화대혁명 이해 : 리영희를 중심으로.” 『사이間SAI』. 14호.
- 백원담. 2007a. “전후 아시아 사회주의권의 아시아주의.” 『문화과학』. 52권.
- . 2007b. “냉전기 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의 형성과 재편 I.” 『중국현대문학』. 42권.
- . 2009. “아시아에서 1960-70년대 비동맹/제3세계운동과 민족·민중 개념의 창신.” 『중국현대문학』. 49권.
- 썬꺼. 2009. “동아시아 시각의 인식론적 의의.” 『아세아연구』. 52권 1호.
- 신욱희. 2002. “동아시아의 냉전 : 형성, 결과, 유산.” 『세계정치』. 24권 1호.
- 신형기. 2012. “베트남 파병과 월남 이야기.” 『동방학지』. 157권.
- 윤충로. 2007. “베트남전쟁 시기 한·미·월 관계에서 한국의 ‘정체성 만들기’ :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를 향한 열망 사이에서.” 『담론201』. 9권 4호.
- 이동연. 2007. “동아시아 담론형성의 갈래들 : 비판적 검토.” 『문화과학』. 52권.
- 이동현. 2012. “1960년대 『청맥』 지식인 집단의 탈식민 민족주의 담론과 문화전략.” 『역사와 문화』. 24권.
- 이병한. 2012a. “냉전기 중국과 아시아(1) : 가네포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8권.
- . 2012b. “신냉전사 : 중국현대사의 새 영역.” 『중국근현대사 연구』. 53권.
- 이상록. 2007. “1960~1970년대 비판적 지식인들의 근대화 인식.” 『역사문제연구』. 18권.
- 이상현. 2010. “아시아판 NATO 구상의 좌절 : 60년대 박정희 정권

- 의 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 구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0권 5호.
- 임대식. 2003.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65권.
- 임성모. 2005. “대동아공영권 구상에서의 ‘지역’과 ‘세계’.” 『세계정치』. 26권 2호.
- . 2011. “냉전기 일본 진보파 지식인의 한국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33권.
- 임종명. 2010. “남한 국가 엘리트의 아시아 기행기와 아시아 표상.” 『민족문화연구』. 52권.
- . 2014. “해방 직후 남한 신문과 베트남 전쟁 재현·표상.” 『현대문학의 연구』. 54권.
- 임춘성. 2009. “동아시아 냉전문화와 문화냉전.” 『중국현대문학』. 51권.
- 장세진. 2009. “해방기 공간 상상력의 전이와 ‘태평양’의 문화정치학.” 『상허학보』. 26권.
- 장세진. 2013a. “안티테제로서의 ‘반동정신’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 (1955~1965).” 『사이間SAI』. 15호.
- . 2013b. “시민의 텔로스와 1960년대 중반 『사상계』의 변전.” 『서강인문논총』. 38권.
- 장인성. 1998. “자기로서의 아시아, 타자로서의 아시아.” 『신아세아』. 5권 3호.
- 전용호. 2005. “1960년대 참여문학론과 『청맥』.” 『국어국문학』. 141호.
- 정문상. 2006. “문화대혁명을 보는 한국 사회의 한 시선 : 리영희 사례.” 『역사비평』. 77권.
- . 2007. “냉전 시기 한국인의 중국인식 : 중국 문화대혁명 이해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13권.
- . 2009. “김준엽의 근현대 중국론과 동아시아 냉전.” 『역사비평』. 87권.

- 2010. “한국 냉전문화 형성과 문화대혁명 : 대중 언론매체와 학계의 문화대혁명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근현대사연구』. 48권.
- 2011. “중공과 중국 사이에서.” 『동북아역사논총』. 33권.
- 2013. “냉전기 한국인의 대만 인식.” 『중국근현대사연구』. 58권.
- 정수진. 2011. “한국인의 세계감각과 자의식의 형성.” 『경제와 사회』. 90권.
- 정일준. 2005. “한국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미국화 : 미국 근대화론의 한국전파와 한국에서의 수용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37권 3호.
- 정재석. 2009a. “해방과 한국전쟁, 3차 세계대전의 단층들.” 『상허학보』. 27권.
- 2009b. “타자의 초상과 신생 대한민국의 자화상.” 『한국문학연구』. 37집.
- 정진성. 2011. “잡지 『아시아문제』를 통해 본 1950년대 일본의 아시아 인식.” 『일본연구논총』. 33권.
- 조경란. 2014. “냉전시기(1950-60년대) 일본 지식인의 중국 인식.” 『사회와 철학』. 28권.
- 차승기. 2003. “‘근대의 위기’와 시간-공간 정치학 : 교토학파 역사철학자들과 서인식.” 『한국근대문학연구』. 4권 2호.
- 최영호. 1999. “이승만 정부의 태평양동맹 구상과 아시아반공민족연맹 결성.” 『국제정치논총』. 39권 2호.
- 최정운. 1998. “국제정치에 있어 문화의 의미.” 『세계정치』. 22권 1호.
- 2007. “문화와 권력.” 『세계정치』. 28권 1호.
- 하상일. 2004. “1960년대 문학비평과 『청맥』.” 『국제어문』. 31권.
- 2006. “1960년대 『청맥』의 이데올로기와 비평사적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3권, 2006.
- 홍석률. 2004. “중립화통일 논의의 역사적 맥락.” 『역사문제연구』.

12호.

- 홍정완. 2010. “해방 이후 남한 ‘국민운동’의 국가·국민론과 교토학파의 철학.” 『역사문제연구』. 23호.
- 황병주. 2008. “1960년대 박정희 체제의 ‘탈후진 근대화’ 담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권.
- . 2009.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 『기억과 전망』. 21권.

2) 영문

- Duara, Prasenjit. 2010. “Asia Redux : Conceptualizing a Region for Our Tim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9. No. 4.
- Eckstein, Alexander. 1970.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World Politics*. Vol. 22. No. 4.
- Ikeda, Ryo. 2007. “The Paradox of Independence : The Maintenance of Influence and the French Decision to Transfer Power in Morocco.”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Vol. 35. No. 4.
- Linton, Matthew D. 2011. *The Transformation of Cain : Karl August Wittfogel’s American Acculturation and the Cold War, 1934-1963*. Master’s Thesis. Brandeis University.
- Parker, Jason. 2006. “Cold War II :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the Bandung Conference, and the Reperiodization of the Postwar Era.” *Diplomatic History*. Vol. 30. No. 5.
- Smith, Tony. 2000. “New Bottles for New Wine : A Pericentric Framework for the Study of the Cold War.” *Diplomatic History*. Vol. 24. No. 4.

Westad, Odd Arne. 2000. "The New International History of the Cold War : Three (Possible) Paradigms." *Diplomatic History*. Vol. 24. No. 4.

3. 2차 자료(단행본)

1) 한국어

-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서울 : 아카넷.
- 권보드래 외. 2009.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서울 : 동국대출판부.
- 권보드래·천정환. 2012. 『1960년을 묻다 :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서울 : 천년의 상상.
- 권현익·이한중 옮김. 2013. 『또 다른 냉전 :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서울 : 민음사.
- 권현익·정병호. 2013. 『극장국가 북한 :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파주 : 창비.
- 김건우. 2003.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서울 : 소명.
- 김경일. 2011. 『제국의 시대와 동아시아 연대』. 파주 : 창비.
- 김미란·오영숙·임우경 엮음. 2013. 『이동하는 아시아 : 탈/냉전과 수교의 문화정치』. 서울 : 그린비.
- 김삼웅. 2009. 『장준하 평전』. 서울 : 시대의 창.
- 2010. 『리영희 평전』. 서울 : 책으로 보는 세상.
- 2011. 『송건호 평전』. 서울 : 책으로 보는 세상.
- 2013. 『저항인 함석헌 평전』. 서울 : 현암사.
- 김성환 외. 1984. 『1960년대의 인식』. 서울 : 거름.
- 김일영. 1999. "1960년대 정치지형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엮음.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 백산서당.
- 김정현. 1991. "1960년대 근대화노선의 도입과 확산."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한국현대사 3』. 서울 : 풀빛.

- 나카무라 미치오·니시타니 게이 지 외. 이경훈 외 옮김. 2009. 『태평양 전쟁의 사상』. 서울 : 이매진.
- 남궁곤. 1991. “1950년대 지식인들의 냉전의식.” 이종오 외.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 혁명』. 서울 : 태암.
- 남사 정재각 추모문집 간행회 엮음. 2012. 『남사 정재각 그는 누구인가 : 남사 정재각 추모문집』. 서울 : 주류성.
- 남재희. 2014. 『남재희가 만난 통 큰 사람들』. 서울 : 리더스하우스.
- 노영기 외. 2004.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서울 : 선인.
- 다케우치 요시미. 2011. “일본의 아시아주의.” 마루카와 데쓰지·스즈키 마사히사 엮음. 윤여일 옮김. 『다케우치 요시미 선집 2 : 내재하는 아시아』. 서울 : 휴머니스트.
- 대동 편집부 엮음. 1989. 『통혁당 : 역사·성격·투쟁·문헌』. 서울 : 대동편집부.
- 도면회·윤해동 엮음. 2009. 『역사학의 세기 : 20세기 한국의 일본의 역사학』. 서울 : 휴머니스트.
- 디페시 차크라바티. 2014. 김택현·안준범 옮김. 『유럽을 지방화하기 : 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서울 : 그린비.
- 로버트 J. C. 영. 김택현 옮김. 2005.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털리즘』. 서울 : 박종철출판사.
- 김용규 옮김. 2013. 『아래로부터의 포스트식민주의』. 서울 : 현암사.
- 리영희. 임헌영 옮김. 2006. 『리영희 저작집 11 : 대화』. 파주 : 한길사.
- 마루카와 데쓰지. 백지운·윤여일 옮김. 2008. 『리저널리즘』. 서울 : 그린비.
- 장세진 옮김. 2010. 『냉전문화론 : 1945년 이후 일본의 영화와 문학은 냉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서울 : 너머박스.
- 박태순·김동춘. 1991. 『1960년대의 사회운동』. 서울 : 까치.

- 베른트 슈퇴버. 최승완 옮김. 2008. 『냉전이란 무엇인가 : 극단의 시대 1945-1991』. 서울 : 역사비평사.
- 브루스 커밍스. 1996. “70년 위기의 종언 : 삼각구상과 신세계질서.” 서재정·정용욱 역음, 『탈냉전과 미국의 신세계질서』. 서울 : 역사비평사.
- 사상계연구팀 역음. 2012.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서울 : 소명.
- 사카이 나오키. 이규수 옮김. 2003. 『국민주의의 포이에시스』. 파주 : 창비.
- 사카이 나오키·니시타니 오사무. 차승기·홍종욱 옮김. 2009. 『세계사의 해체 : 서양을 중심에 두지 않고 세계를 말하는 법』. 서울 : 역사비평사.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역음. 2008.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I : 1940~1950년대』. 서울 : 현실문화연구.
- 2009.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II : 1960~1970년대』. 서울 : 현실문화연구.
- 세계 편집부. 1987. “통일혁명당 사건.” 세계 편집부 역음, 『공안사건기록』. 서울 : 세계사.
- 선즈화. 김동길 옮김. 2014. 『조선전쟁의 재탐구 : 중국·소련·조선의 협력과 갈등』. 서울 : 선인.
- 스테판 다나카. 박영재·함동주 옮김.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서울 : 문학과지성사.
- 심상필. 1990. 『제3세계 : 산업화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울 : 민음사.
- 안경환. 2013. 『황용주 : 그와 박정희의 시대』. 서울 : 까치.
- 앤서니 스미스. 김석근 옮김. 1986. 『제3세계의 국가와 민족』. 서울 : 삼영.
-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옮김. 2007. 『오리엔탈리즘』. 서울 : 교보문고.
- 왕후이. 송인재 옮김. 2011. 『아시아는 세계다』. 파주 : 글항아리.

- 요네타니 마사후미. 조은미 옮김. 2010. 『아시아/일본 : 사이에서 근대의 폭력을 생각한다』. 서울 : 그린비.
- 윌터 D. 미놀로. 이성훈 옮김. 2013. 『로컬 히스토리/글로벌 디자인 : 식민주의성, 서발턴 지식, 그리고 경계사유』. 서울 : 에코리브르.
- 유근호. 2011. 『60년대 학사주점 이야기 : 4·19 세대의 증언』. 파주 : 나남.
- 유선영·차승기 엮음. 2013. 『아시아 이벤트 : (서로 다른) 아시아의 경합』. 서울 : 그린비.
- 이경란. 2012. “역사학자들의 담론적 실천 : 『사상계』와 『창작과 비평』.” 권보드래 외. 『지식의 현장 담론의 풍경 : 잡지로 보는 인문학』. 파주 : 한길사.
- 이근욱. 2012. 『냉전 : 20세기 후반부의 국제정치』. 서울 : 서강대학교출판부.
- 이동기 편저. 2013. 『20세기 평화 텍스트 15선』. 서울 : 아카넷.
- 이만섭. 2004. 『나의 정치인생 반세기 : 이승만에서 노무현까지 : 파란만장의 가시밭길 헤치며 50년』. 서울 : 문학사상사.
- 이호재. 1994. 『한국인의 국제정치관』. 서울 : 법문사.
- 임대식. 2003. “1960년대 지식인의 이념의 분화.” 한국사회사학회 엮음. 『지식변동의 사회사』. 서울 : 문학과지성사.
- 장세진. 2012a. 『상상된 아메리카 : 1945년 8월 이후 한국의 내이션 서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서울 : 푸른역사.
- 2012b. 『슬픈 아시아 : 한국 지식인들의 아시아 기행 : 1945-1966』. 서울 : 푸른역사.
- 장인성. 2002. 『장소의 국제정치사상 : 동아시아 질서변동기의 요코이 쇼난과 김윤식』.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용호. 2012. “진보적 문학비평과 참여문학론의 연원을 찾아서 : 『청맥』.” 권보드래 외. 『지식의 현장 담론의 풍경 : 잡지로 보는 인문학』. 파주 : 한길사.
- 정은숙 엮음. 2009. 『한국의 대개도국 외교 : 과거·현재·미래』. 파주

- : 한울.
- 정진석. 1999. 『인물 한국언론사 : 한국언론을 움직인 사람들』. 서울 : 나눔.
- . 2008. 『한국언론인물사전 : 1883~2009』. 서울 : 한국언론재단.
- 조지형. 2002. “‘언어로의 전환’과 새로운 지성사.”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 서울 : 한겨레신문사.
- 조해문. 1989. 『애국시대 (상)·(하)』. 서울 : 대동.
- 조희연. 1993.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 통혁당·남민전·사노맹을 중심으로 본 비합법 전위조직 연구』. 서울 : 한울.
- 존 루이스 개디스. 2002.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서울 : 사회평론.
- . 2010. 『냉전의 역사 : 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서울 : 에코리브르.
- 천정환. 2014.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서울 : 마음산책.
- 최덕교. 2004. 『한국잡지백년』. 서울 : 현암사.
- 최종고. 2011. 『소고 이항녕 : 1915-2008』. 서울 : 관악.
- 하경근. 1972a. 『아프리카 정치론 : 흑아대륙을 중심으로』. 서울 : 일조각.
- . 1972b. 『후진국 정치론』. 서울 : 일조각.
- . 1980. 『제3세계 정치론』. 서울 : 한길사.
- 하용출 엮음. 2008. 『한국 국제정치학의 발전과 전망』.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하상일. 2008.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비평전략』. 서울 : 소명.
-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2003. 『우리 학문 속의 미국 :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서울 : 한울.
- 허은. 2008.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 냉전(1945-1965) 시대 문화적 경계 구축과 균열의 동반』. 서울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홍석률. 1999. “1960년대 지성계의 동향 : 산업화와 근대화론의 대두와 지식인사회의 변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음.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 1963-1970』. 서울 : 백산서당.

2) 영문

Appy, Christian G. 2000. “Introduction : Struggling for World.” in Christian G. Appy (ed.), *Cold War Constructions : The Political Culture of United States Imperialism, 1945-1966*. Amhurst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Brazinsky, Gregg Andrew. 2003. “Koreanizing Modernization.” in David C. Engerman et al. (eds.), *Staging Growth : Modernization, Development, and the Global Cold War*. Amherst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Chakrabarty, Dipesh. 2010. “The Legacies of Bandung : Decolonization and the Politics of Culture.” in Christopher Lee (ed.), *Making a World after Empire : The Bandung Moment and its Political Afterlives*. Athens : Ohio University Press.

Cumings, Bruce. 1999. *Parallax Visions : Making Sense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at the End of the Century*. Durham : Duke University Press.

Dauer, Richard P. 2005. *A North-South Mind in an East-West World : Chester Bowles and the Making of United States Cold War Foreign Policy, 1951-1969*. Westport : Praeger.

Finnane, Antonia and Derek McDougall (eds.), 2010. *Bandung 1955 : Little Histories*. Caulfield East, Vic. : Monash University Press.

- Fousek, John. 2000. *To Lead the Free World : American Nationalism and the Cultural Roots of the Cold War*. Chapel Hill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Hansen, G. H. 1966. *Afro-Asia and Non-Alignment*. London : Faber.
- Jian, Chen. 2011. "China's Changing Policies Toward the Third World and the End of the Global Cold War," in Artemy Kalinovsky and Sergey Radchenko (eds.),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Third World : New Perspectives on Regional Conflict*. New York : Routledge.
- Johnson, Chalmers. 1970.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Kahin, George. 1956. *The Asian-African Conference*. Cornell University Press.
- Krasner, Stephen D. 1985. *Structural Conflict : The Third World Against Global Liberalism*.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rishna, Gopal. 1984. "India and the International Order." in Hedley Bull and Adam Watson (eds.),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 Clarendon Press.
- Laidi, Zaki. 1994. *Un Monde Privé de Sens*. Paris : Fayard.
- Laron, Guy. 2013. *Origins of the Suez Crisis*.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ee, Steven Hugh. 1995. *Outposts of Empire : Korea, Vietnam,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1949-1954*. London :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Lundestad, Geir. 2010. *East, West, North, South : Major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1945*. Los Angeles : SAGE.

- Lyon, Peter. 1984. "The Emergence of the Third World." in Hedley Bull and Adam Watson (eds.),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 Clarendon Press.
- Mackie, Jamie. 2005. *Bandung 1955 : Non-Alignment and Afro-Asian Solidary*. Singapore : Editions Didier Millet.
- Manela, Erez. 2007. *The Wilsonian Moment : Self-Determin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igins of Anticolonial Nationalism*.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McMahon, Robert J. (ed.), 2013. *Cold War in the Third Worl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Mišković, Nataša and Harald Fischer-Tiné and Nada Boškowska. (eds.), 2014. *The Non-Aligned Movement and the Cold War : Delhi, Bandung, Belgrade*. New York : Routledge.
- Pocock, J. G. A. 2009. *Political Thought and History : Essays on Theory and Method*.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ashad, Vijay. 2007. *The Darker Nations : A People's History of the Third World*. New York : New Press.
- Schaffer, Howard B. 1993. *Chester Bowles : New Dealer in the Cold War*.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Sidhanta, Ramjana. 1966. "Indian Nonalignment." in John Burton (ed.), *Nonalignment*. London : Andre Deutsch.
- Sigham, A. W. and Shirley Hune. 1986. *Non-Alignment in an Age of Alignments*. London : Lawrence Hill.
- Tan, See Seng and Amitav Acharya. 2008. *Bandung Revisited : The Legacy of the 1955 Asian-African Conference for International Order*. Singapore : NUS Press.

- Westad, Odd Arne. 2005. *The Global Cold War :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lets, Peter. 1978. *The Non-Aligned Movement : The Origins of a Third World Alliance*. New York : Nichols Publishing Company.
- Wright, Richard. 1956. *The Color Curtain : A Report on the Bandung Conference*. Cleveland, World Publishing.
- Yangwen, Zheng and Hong Liu and Michael Szonyi. (eds.), 2010. *The Cold War in Asia : The Battle for Hearts and Minds*. Boston : Brill.

A B S T R A C T

This research examines the Asian imagination that appeared on newspapers and magazines between mid-1950s and late-1960s. The Asian·African Conference, which was held in 1955 in Bandung, served as a pivotal moment for the issue of post-colonization to re-emerge after Korean War. Since then, as the Cold War tension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relaxed, Korean intellectuals' perception of the world expanded to Asia and Africa.

As the Cold War logic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disseminated, the vertical composition of [Korea-World] also disseminated and was accepted; however, the horizontal composition of [Korea-Asia] was reimagined due to the emergence of Asian·African countries during the post-colonization period. Modern Japan experienced a schizoid disorder in the 19th century within the context of Japan and the West, and Japan and Asia. It can be assessed that Korea was on a similar path agains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post-colonization and the Cold War of the 20th century.

The main assert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Asian imagination of Korea experience changes (cultural representation → political representation → economic representation) between Bandung conference in 1955 and around 1965, which is when the Asian·African solidarity movement begins to decline.

This paper is composed of two chapters excluding the introduction and the conclusion. In Chapter 2, I reviewed how the 'Orient'(東洋) concept changes from cultural concept under the Cold War regime. During the mid and late-1950s, 'Asia/Orient' concept began to be recognized by the Korean

intellectuals as a political concept to explain the modern Asian·African nationalism rather than a cultural concept. During this phase, disconnecting from Japan was emphasized, and description of common experiences between Asian·African countries and Korea started to appear.

In Chapter 3, I reviewed how Asia imagination, which began to change in late 1950s, was projected to the Asian·African solidarity movement or African region. As the expression 'Plural world'(多元化 世界), which was widely used at that time, indicates, even though the global horizon had been widened, Korean intellectuals attempted to interpret many trends of Asia·Africa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interest. Even the critical intellectuals could not leap beyond the framework of national interest. Against the backdrop of international decline of Asian·African solidarity movement since 1965, such perspective of Korean intellectuals was fortified. At this point, the perspective of 'economy/modernization' emerged.

Keywords : Asian Imagination, Asian Cold War, Bandung Conference, Non-Aligned Movement, Asian Nationalism, National Interest, Modernization

Student Number : 2012-22998